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한 의 석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아프리카 국가 발전의 정치경제

르완다와 케냐 사례를 중심으로

202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정 은 아

아프리카 국가 발전의 정치경제
르완다와 케냐 사례를 중심으로

한 의 석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정 은 아

인 준 서

정은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0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 윤진표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_____ 김용직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_____ 한의석 (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의 목적은 르완다와 케냐의 경제 발전 요인 분석을 통해, 한국 발전 모델의 다른 개발도상 국가에의 적용을 탐구하는 것이다.

서구 중심적인 발전 이론이나 세계화 이론이 제시하는 바와 다르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탈냉전 이후 정치적, 경제적으로 저발전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부족 중심적인 전통 사회와 서구에 의한 식민지 통치를 경험했다는 점에서 서양과는 다른 정치경제 발전 조건을 갖는다. 서양에 의한 식민 통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구조를 형성했고, 독립 이후에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 남아 영향을 미친다. 라틴 아메리카의 저발전과 동아시아의 발전 연구에서 알 수 있듯, 비서구 지역의 정치경제를 설명하는데 있어 역사, 문화 등 각 지역의 고유한 요소들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점들과 관련하여, 각기 다른 발전 조건, 역사와 문화 요인을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 서구 중심적인 발전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한편, 라틴 아메리카의 저발전과 동아시아의 발전을 설명하는 이론은 있지만, 사하라 이남 지역의 저발전 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아프리카 지역과 정치경제에 대한 연구는 기존 학계의 관심을 많이 받지 못했다. 한국 등 다른 비서구 지역의 발전 모델을 아프리카 지역에 적용하는 것 또한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자원 빈곤국, 전쟁, 미약한 물질·인적 자본, 북한에 의한 안보 위협과 이데올로기 문제, 탈냉전, 세계화와 외환위기 등 여러 대내외적 발전 위기를 극복한 사례로서, 한국 발전 사례의 개발도상국에의 적용은 개발도상국형 발전 모델 차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아프리카 지역은 대내적으로는 인종 갈등, 종교 갈등, 부패 문제, 열악한 물질·인적 자본 등의 문제와 대외적으로는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 해외 원조와 천연 자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 등의 문제에 직면해있다. 이러한 대내외 문제는

결합 및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결과 자원과 노동력이 풍부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역설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 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양극화 해결, 삶의 질 개선, 인프라 구축, 교육 확대와 아프리카 연합 참여 등 국내외 거버넌스 개선이 요구된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저발전 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 중 르완다와 케냐는 최근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다. 두 국가는 1000만 이상의 큰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고, 고부가가치 자원이 없을 뿐더러 국가 내부적으로 인종 요인에 의해 크고 작은 갈등을 경험했다. 르완다는 1990년대에 여러 차례 종족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고, 케냐의 경우 종족 정당 요인으로 인하여 2007년 극심한 폭력 사태를 경험했다. 이러한 대내외 발전 장애 요인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는 경제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두 국가의 발전 사례를 연구하는 것은 정치 불안정, 세계화와 글로벌 가치 사슬, 자원 빈곤 국가, 해외 원조에 대한 의존 등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 저발전 하는 국가들에게 발전의 귀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발전 모델, 특히 한국의 주도적인 발전 국가, 해외 원조와 강한 리더십이라는 세 가지 발전 요인을 분석의 틀로 삼아 르완다와 케냐 사례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현재 정치적, 경제적으로 가장 저발전한 지역이지만, 석유 등의 자원과 에너지, 거대한 내수 시장과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 등의 차원에서 향후 아프리카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중요성은 커질 것이다. 또한 한국과 아프리카 지역은 UN과 ODA 등 다방면으로 협력할 기회가 많다. 따라서 아프리카의 발전 전략과 관련된 연구가 계속 진행된다면, 한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발전과 관련된 수요를 파악하고 협력 및 도움을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개발도상국 발전 모델에 대한 논의	5
3. 연구방법 및 논문구성	11
II. 경제 발전에 관한 이론적 논의	15
1. 서구 중심적 발전 이론과 비판	15
2. 라틴 아메리카 저발전 이론	18
3. 동아시아 발전 이론	20
III.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발전과 저발전	26
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정치경제 발전 현황	26
2. 아프리카 발전 논의	34
3. 아프리카 지역의 저발전 요인	39

IV. 르완다의 경제 발전	50
1. 역사적 배경	50
2. 독립 이후 르완다의 발전 경로	52
3. 2000년대 이후 르완다의 발전	57
V. 케냐의 경제 발전	65
1. 역사적 배경	65
2. 독립 이후 케냐의 발전 경로	67
3. 2000년대 이후 케냐의 발전	71
VI. 결론	80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전후 한국의 경제 관련 지표	7
〈표 2〉 1960년대~1970년대 사이 한국의 주요 수출액과 수출 품목(산업 구조 변화)	8
〈표 3〉 1950년대와 1970년대 사이 대한국 해외 원조 관련 지표	9
〈표 4〉 1960년대~1970년대 사이 한국의 주요 경제 및 원조 지표	10
〈표 5〉 발전국가론에 대한 상반된 논의	22
〈표 6〉 1946년과 2009년 사이 한국과 대만에 대한 미국의 경제 원조	24
〈표 7〉 아프리카 정치경제 저발전의 대내외적 요인	33
〈표 8〉 아프리카 정치경제 문제의 대내외적 해결 방안	36
〈표 9〉 아프리카 지역의 저발전 요인 유형, 원인과 해결책	44
〈표 10〉 시에라리온과 보츠나와의 정치경제 발전 비교	48
〈표 11〉 1994년 이후 르완다의 경제 관련 지표	57
〈표 12〉 비전 2020(Vision 2020)의 목표와 내용	58
〈표 13〉 1994년 이후 르완다의 해외 자금 유입 지표	62
〈표 14〉 1994년 이후 케냐의 경제 관련 지표	71
〈표 15〉 케냐 비전 2030 개요	73
〈표 16〉 1994년 이후 케냐의 해외 자금 유입 지표	76
〈표 17〉 르완다와 케냐의 발전 요인 비교	83

그림 목 차

〈그림 1〉 1971년과 2000년 사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GDP 성장률 변화	18
〈그림 2〉 각 지역 별 총 ODA 점유율	26
〈그림 3〉 탈냉전 전후 비서구 지역의 연 평균 1인당 총 생산량	27
〈그림 4〉 탈냉전 이후 재화와 서비스 수출량의 변화	32
〈그림 5〉 탈냉전 전후 극빈곤층(하루 \$ 1.90 이하로 살아가는 인구) 비율 변화	42
〈그림 6〉 제 1 공화국 시기 르완다의 1인당 국민 소득	53
〈그림 7〉 제 2 공화국 시기 르완다의 1인당 국민 소득	54
〈그림 8〉 1960년대와 1970년대 사이의 케냐의 1인당 국민소득	68
〈그림 9〉 1980년대와 1990년대 사이의 케냐의 1인당 국민소득	70
〈그림 10〉 2000년대 이후 케냐의 부패 인식 지수 변화	77

I. 서론

1. 문제제기

고전 경제학 이론은 자유무역을 통한 생산의 확대가 농경사회를 자본주의와 산업화로 전환하도록 한다고 제시한다.(Chilcote, 2000)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비서구 지역의 경제 저발전 문제는 서유럽식 발전 방식을 따르면 해결된다. 이 주장의 논거는 유럽의 경제 발전 경험에 따른 것인데, 근대화 이론(Modernization Theory)은 이러한 유럽의 경험을 근거 삼아 경제 성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후 영국에 이어 미국이 국제 정치경제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었고, 탈냉전기를 거치면서 정치경제 체제에 대한 서양 중심적인 시각은 더욱 강화되었다. 그 결과 현재 전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은 정치적으로는 상호 주권 인정과 내정 불간섭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베스트팔렌 체제(Westphalian System)와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서구 지역 국가들은 서구 지역 국가들처럼 발전하지 못했으며 여전히 저발전에 시달리고 있다. 다만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는데, 서구적 발전모델의 결과라기보다는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발전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비서구 지역에서 서양의 전통적인 정치경제 이론이 제시한 바와 같은 발전을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비서구 지역의 국제 정치경제 현황과 관련된 여러 지표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치적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DI), 부패 인식 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 세계 자유 지수(Freedom in the World)와 세계 언론 자유 지수(Worldwide Press freedom

Index) 등이 제시될 수 있다. 우선,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167개의 조사 대상국 중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76개로 나타난다. 이 중 ‘완전한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총 22개국이며, 이들 중 대다수가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이었고, 비서구 지역은 아프리카의 모리셔스와 남미의 우루과이, 코스타리카와 칠레 4개국뿐이었다.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서구권 국가는 25개였으며, 비서구권 국가들은 29개로 집계되었다. ‘혼합 정권’과 ‘권위주의 정권’ 체제를 가진 91개의 국가들 중 서유럽 국가는 없으며 전부 비서구권인 동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들이었다.¹⁾

다음으로 2019년 부패 인식 지수에 따르면, 전 세계 180개 국가의 평균 부패 인식 지수는 100점 만점에 43점이며, 조사 국가의 $\frac{2}{3}$ 이상이 50점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32점(100점 만점)을 기록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부패 인식 수준을 보였다.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은 35점을 기록하며 사하라 이남 지역의 뒤를 이었으며,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은 39점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45점을 기록했다. 북미와 남미를 합친 아메리카 지역은 43점을 기록했지만, 미국은 69점을, 캐나다는 77점을 받은 반면 베네수엘라 16점, 아이티 18점과 니카라과 22점 등 대다수의 남미 국가들은 낮은 부패 인식 수준을 보였다. 서유럽과 북유럽 지역은 66점을 기록하며 조사 지역 중 가장 높은 부패 인식도를 보였다.²⁾

한편 세계 자유 지수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의 86%, 그리고 아메리카 지역은 66%의 국가가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태지역의 경우 44%만이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프리카 지역은 18%만이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나며 가장 낮은 정치적 자유도를 보였다.³⁾

마지막으로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 따르면 언론 자유 지수가 높은 상위 20개 국가 중 대다수가 북유럽과 서유럽이었고, 비서구 지역은 자메이카, 코스타리카, 에스토니아와 우루과이 4개 국가뿐이다. 서구권 국가들은 하위 20위에

는 포함되지 않았던 반면, 중앙아시아, 중동과 아프리카 등의 비서구권 국가들이 대다수 하위권을 차지하며 저조한 언론 자유도를 보였다.⁴⁾ 위의 지표들을 통해, 서유럽, 영연방 국가들, 북아메리카, 북유럽 등의 서구권 지역에서는 아시아, 아프리카나 남미 등 비서구권에 비해 더 민주주의, 반부패 인식과 시민의 자유 등이 보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 발전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1인당 국내 총 생산(Gross Domestic Product per capita, GDP per capita), 경제 자유 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와 세계화 지수(Globalization Index, GI) 등을 통해 비서구 지역의 경제적 발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먼저, 국제 통화 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에 따르면 2019년 1인당 국민 총생산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북아메리카(\$ 51,210)이며, 호주와 뉴질랜드(\$ 51,160), 서유럽(\$ 42,910), 동아시아(\$ 14,420)와 중동(\$ 11,950)이 그 뒤를 따른다. 반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670), 남아시아(\$ 2,190), 북아프리카(\$ 3,650), 동남아시아(\$ 5,010)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8,340)는 순서대로 1인당 생산 소득이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⁵⁾ 이 결과를 통해 서구권 국가들은 대체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비서구 지역 중 소득이 1만 달러를 넘은 지역은 동아시아와 중동뿐이며, 이외의 다른 비서구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저발전 상태인 것을 파악할 수 있다.

2019년 경제 자유 지수에 따르면 서양 국가들인 영국(78.9%), 프랑스(63.9%), 독일(73.5%), 미국(76.8%), 캐나다(77.7%), 호주(80.9%)와 뉴질랜드(84.2%) 등은 대체로 높은 경제 자유도를 보였다.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 한국(73.8%), 일본(72.3%), 싱가포르(89.4%), 홍콩(90.2%), 대만(77.3%)과 중국(58.4%)의 경제 자유도는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반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54.2%의 ‘대체로 부자유’한 경제 자유도를 보이며 비서구 지역 가운데 가장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높

은 점수를 획득한 국가는 모리셔스(73%)이며, 르완다는 71.1%를 기록하며 두 번째로 높은 경제 자유도를 보여주었다. 경제적으로 ‘대체로 부자유함’과 ‘억압 상태’라는 평가를 받은 국가들은 대부분 남미, 중앙아시아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등 비서구 지역이었다. 특히 경제가 억압 상태라는 평가를 받은 국가들 중 상당수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세계화 지수에 따르면 203개의 조사대상국 중 서구권을 제외한 세계화 상위 50위 이내 비서구 국가는 30개이며, 이 중 대다수는 동유럽 국가이다. 아프리카 지역은 50위를 기록한 모리셔스가 지역 내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반면 하위 50위를 기록한 국가들 중 대다수는 아프리카 국가로 나타났으며, 이 외에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북한 등이 포함되었다.⁶⁾

한 국가의 정치경제적 발전 정도는 각국의 안정성이나 국민의 삶의 질로 이어진다. 국가의 지속 발전가능성과 안전성과 관련된 2019 취약국가지수(Fragile States Index)에 따르면 서구권 국가들은 대체로 ‘지속 가능한 안정성’(독일, 캐나다, 호주와 뉴질랜드 등)이나 ‘안전함’(프랑스, 영국, 미국 등)의 평가를 받았다. 반면, 비서구 지역 중 가장 낮은 국가 안정성을 보인 지역은 아프리카이다. 아프리카 54개 국가 중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국가는 모리셔스, 세이셸과 보츠와나 세 개 국가뿐이다. 같은 비서구권인 동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만이 지속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한국, 일본과 몽골은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⁷⁾

또한 인간의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인 UN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에 따르면, 삶의 질이 높은 국가 상위 30위 중 비서구 지역은 싱가포르, 일본과 한국 등 동아시아와 동유럽의 8개 국가뿐이다. 반면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하위 30개 국가의 대다수는 아프리카 국가들이었으며, 다른 비서구 지역의 국가로 아이티와 아프가니스탄이 하위권에 포함되었다.⁸⁾

전술한 다양한 정치 및 경제 지표들은 싱가포르, 한국과 일본 등 일부 동아시아 국가들이나 석유 자원을 가진 중동 지역을 제외한 대다수의 비서구권 국가들이 저발전 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 중 특히 거의 모든 지표에서 하위권을 차지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은 나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서구 중심적인 발전 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경제적으로 저발전하고 있는 비서구 지역이 변함없이 서구 중심적인 정치경제 발전 방식을 계속 따르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 그리고 서양식 발전 모델은 탈냉전과 세계화라는 국제 정치경제의 변화 속에서도 유효한 것인가? 자원 빈국인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저발전한 반면, 한국, 일본과 싱가포르 등 자원 빈국인 몇몇 동아시아 지역은 어떠한 방식으로 발전한 것인가? 다양한 정치경제 지표에서 비서구 지역 중 가장 저발전한 것으로 나타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맞는 발전 모델로 무엇이 제시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대표 국가로서 한국의 발전 요인들을 아프리카 국가의 발전 사례에 적용하여 개발도상국가의 발전 모델로서 가능성을 확인하는데 있다.

2. 개발도상국 발전 모델에 대한 논의

서양 정치경제 체제를 보편적으로 다른 비서구 지역에 적용하는 현재의 정치경제 현실과 관련하여 세 가지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다. 먼저, 비서구 지역의 정치, 경제, 역사와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서양의 체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서구와 유사한 발전을 기대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서구권과 비서구권은 근본적으로 다른 정치, 경제, 역사와 문화적 맥락과 발전 단계를 가지고 있다. 정치적 차원에서, 현재의 정치·경제 체제

는 서유럽 국가들 간의 종교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탄생된 것이다. 반면 아프리카 지역은 종교 보다는 전통적으로 종족 중심적인 사회를 가졌고(Blanton et al., 2001: 474-477),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은 수천 년 동안 중화사상을 바탕으로 중국과 정치, 경제, 문화적인 관계를 맺어왔다.(키신저, 2016: 23-55) 즉, 비서구 지역은 근본적으로 서양과 다른 비서구만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다.

탈식민지 비서구 지역의 정치, 경제와 사회 등과 관련하여 식민 지배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비서구 지역은 서구에 의한 식민지 경험으로 인해 독특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구조를 갖게 되었다. 서양에 의해 경제적, 정치적으로 착취되었고, 대리 통치와 분리 통치라는 식민지 통치 방식으로 인하여 국가 내부적으로도 종족, 종교와 계층 등에 따라 분열이 생기게 되었다. 유럽에 의해 탄생한 식민지 구조는 독립 이후에도 유산으로 계승되었고, 이로 인하여 몇몇 비서구 국가들은 독립 이후에 내부적인 갈등을 경험했다.(Blanton et al., 2001: 476-478)¹⁾

마지막으로 탈냉전과 세계화 등 변화한 대외적 정치경제 상황 또한 서구 정치경제 체제의 비서구 지역에서의 적용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급작스러운 탈냉전과 세계화 대비 미비,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 은행과 기관의 영향, 국제 통화 기금이나 세계 무역 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과 같은 국제 금융 기관들의 불평등한 무역 방임 등 대외적 요인과 해외 투자자, 다국적 기업, 국가 권력층의 천연 자원 및 세계화의 이윤 독점, 국가 내 열악한 인프라, 불안한 치안 및 비교우위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의 산업 구조 등의 대내적인 요인은 개발도상 국가들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다.²⁾(Bado, 2015: 190) 이러한 국내외적 발전 방해 요소들을 개선하고 경제 발전을 달성하기 위

1) 송영복과 김기현 또한 비슷한 시각을 공유한다.(송영복, 2005a: 290-300, 2005b: 56-71; 김기현, 2010: 207-218)

2) 이와 유사한 견해를 보인 학자로는 바야르, 정이나, 서지현과 콜리에 등이 있다.(Bayart et al., 2010: 143-149; 정이나, 2014: 79; 서지현, 2016: 59-65; Collier, 1995: 11-17)

해 줄리앙(Julien)은 인프라,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분야들은 국가의 투자가 치안과 건강에 최우선시 되는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 등 경제적으로 저발전한 곳에서는 우선권을 가지기 힘들다.(Julien, 2004: 24-28) 림(Lim) 또한 빈국들의 경우 경제적, 물질적 제약이 있고, 자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정치적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Lim, 2016: 130-133)

〈표 1〉 전후 한국의 경제 관련 지표

(단위: %, 달러)

	1953	1957	1960	1963	1966	1969	1972	1975	1978
경제 성장률 (%)	-	7.2	5.4	9.2	12.0	14.5	7.2	7.9	10.8
1인당 국민소득 (\$)	66.0	73.0	79.0	146.3	133.5	243.3	323.6	615.2	1398.5

(통계청;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한편,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관련하여 동아시아의 발전 국가 이론을 재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원 빈국이며, 안보 위기 등의 위기에 직면했던 대다수의 동아시아의 발전 국가들은 이러한 발전의 악조건들을 극복하고 경제 성장할 수 있었다. 여러 동아시아의 발전 사례 중 한국과 대만의 발전 사례는 후발발전국가들에게 큰 함의를 줄 수 있다. 그 중 특히 한국의 경제 발전 사례는 ‘주도적인 발전 국가’, ‘해외 원조 요인’과 ‘발전 지향적인 정치 지도자’의 발전 변수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사례에서 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발전 사례는 자원 빈국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와 북한에 의한 안보 위협 등 대내외적인 위협 요소에도 경제적으로 발전했다는 특징을 가진다. 전쟁 이후 거의 대부분의 인프라가 파괴되었던 한국은 1인당 국민 소득 66 달

러의 저소득 국가였지만, 60, 70년대에 빠르게 경제적으로 발전했다. 이처럼 현존하는 서구 중심적인 정치경제 체제 내에서 국내외 발전 요인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발전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발전 사례는 다른 비서구 후발 발전 국가들의 대안적인 발전 모델로서 제시될 수 있다.

〈표 2〉 1960년대~1970년대 사이 한국의 주요 수출액과 수출 품목(산업 구조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1950년대 ~60년 연간 평균	1964	1968	1970	1972	1975	1978	1980
수출 (백만 달러)	-	119	455	835	1,624	5,081	12,711	17,505
수출 증가율 (%)	-	37.2	42.2	34.2	52.1	13.9	26.5	16.3
1차 상품 비중(%)	75.1	45.4	21.3	17.5	12.1	17.6	14.9	11.7
경공업 비중(%)	24.9	45.4	69.7	69.6	66.6	57.4	49.9	46.4
중화학 비중(%)		9.2	9.0	12.8	21.3	25.0	34.9	41.8

* 수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동일시기 증가율.

(출처: 이재우, 2009, pp. 10 인용)

한국의 경제 발전을 설명하는데 있어 국가의 주도성, 해외 원조와 강한 리더십 요인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우선, 전쟁 이후 한국 정부는 경제 개발 계획을 제시하고 계획적으로 중화학단지를 건설하는 등 국가 주도적인 발전 방식으로 경제적으로 성장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 직후 ‘경제개발3개년계획’(1959)을 공표하여 중화학 공업 분야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고, “3백 산업(설탕, 밀가루, 면방)”을 통해 기초적인 제조업 발전을 이뤘다.(국가기록원 2014, 25-48)³⁾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통해 경제 발전을 주도

했고, 이를 통해 수입대체공업화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그리고 정부 주도로 1965년 일본과 맺은 ‘한일협정’ 차관으로 중화학 공업단지를 건설하여 한국은 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수출 지향적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 함께, 한국은 산업 및 경제 다각화를 달성하여 경제 성장할 수 있었다.(국가기록원, 2014: 49-76; 이재우, 2009: 17-21)

〈표 3〉 1950년대와 1970년대 사이 대한민국 해외 원조 관련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1953	1957	1960	1963	1966	1969	1972	1975	1978
원조액수 (백만 달러)	19.4	38.3	250.7	262.2	230.6	338.3	365.4	247.4	164.2
GNI 대비 원조의 비중 (%)	7.3	9.8	6.3	6.5	5.8	4.3	3.4	1.2	0.3

* 1953년과 1957년의 지수는 각각 무상 원조와 GDP 대비 무상 원조액의 비중을 의미함.

(출처: 한국은행, 통계청)

국가가 주도적으로 경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산업화를 달성하는데 있어 해외 원조의 기여는 매우 컸다. 전체 수입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해외 원조는 주요 외화 유입 수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후 한국이 국가 주도의 경제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금원이 되었다. 해외 원조액은 50, 60년대에 크게 증가하다가 70년대 들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리고 이 시기 한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물자 조달은 담당하며 약 10억~30억 달러에 이르는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Yeung, 2017: 9-11) 60년대 이후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경제 및 기술 지원을 받게 되며, 한국 경제에서 일본 또한 주요 파

3) 김도훈, 이대근, 정진아와 이재우 또한 한국의 발전 요인과 관련하여 비슷한 시각을 공유한다. (김도훈, 2014: 14-18; 이대근, 2002: 283; 정진아, 2009: 373-381; 이재우, 2009: 8-11)

트너로 등장했다. 1965년 한일 협정을 통해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약 8억 달러의 연화 차관(soft loans)과 보조금을 받았고, 1965년과 1982년 사이 일본의 대 한국 총 공공 및 상업 대출은 약 41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경제 발전을 위해 고민했던 박정희 정권이 적극적으로 일본과 관계 개선을 했기 때문이다.

〈표 4〉 1960년대~1970년대 사이 한국의 주요 경제 및 원조 지표
(단위: %, 억 달러, 달러, 백만 달러)

	1961 년	1963 년	1965 년	1967 년	1969 년	1971 년	1973 년	1975 년	1977 년	1979 년
경제 성장률 (%)	6.9	9.2	7.2	9.1	14.5	10.5	14.8	7.9	12.3	8.6
총 GDP (억 달러)	22	28	31	44	68	95	138	298	383	643
1인당 국민 소득 (달러)	85	104	110	150	221	292	406	826	1047	1709
총 원조액 (백만 달러)	230	238	256	224	355	563	610	520	712	587
유상 원조 (백만 달러)	0	9	86	69	245	494	549	450	669	548

(출처: 통계청;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60년대 이후 전체 원조액 중 유상 원조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여, 1970년대에는 전체의 약 90%에 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우는 유상 원조의 비중이 더 커진 것이 오히려 한국의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반면, 무상 원조와 경제 발전 간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분석한다. 이는 유상 원

조는 대부분 인프라 등 생산 기반 시설에 대한 자원으로 투입되는 반면, 무상 원조는 농산물이나 원자재 등으로 투입되기 때문이다. 한편, 1950년대 보다 크게 증가한 국내 총 투자와 민간 저축은 이 시기 한국이 자립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이재우, 2006: 13-20)

마지막으로 경제 발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강한 지도자 요인은 한국이 자원 빈국, 전쟁 및 안보 불안 등의 저발전 요인에도 불구하고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원조 의존을 통하여 경제를 재건을 하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의지는 ‘산업부흥5개년계획(1949~1952)’과 ‘경제개발3개년계획’에 잘 드러나 있다. 비록 두 경제 발전 계획이 전쟁과 미국의 반대, 정권 하야 등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국가가 자본가 중심의 경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중화학 공업을 조성하려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했음을 알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 또한 이승만 정부의 뜻을 이어받아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실시했으며, 한일 협정을 통해 얻은 차관을 중화학 공업 단지 조성에 투자했다. 비록 그 시기 두 지도자가 비민주적인 정치를 행했다는 점에서 종종 비판이 제기되지만, 국가 개발과 경제 발전에 대해 두 지도자가 의지를 가지고 경제 정책을 단행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다. 국가 경제 발전에 대한 의지를 가진 국가 지도자 요소가 중요하다는 것은 자원 부국인 시에라리온, 앙골라 등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및 논문구성

본 연구는 동아시아 발전 모델의 세 가지 요인을 르완다와 케냐 발전 사례에 적용하고, 다른 개발 도상국가들의 대안 발전 모델로서의 적용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정치경제에서는 비서구 지역에 서구식 발전 방식을 적용하는 연구가 주로 연구되었다. 그리고 ‘종속 이론’과 ‘세계 체제론’ 등 라틴 아메리카의 저발전 모델과 동아시아의 ‘발전 국가’ 모델 등, 이전부터 이 두 비서구 지역의 저발전과 발전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는 많이 논의되었다. 반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저발전 모델에 대한 연구나 이론적 시도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여러 국제 정치경제 지표는 여러 비서구 지역 중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저발전 현실이 제일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동아시아 발전 국가 모델의 특징은 시장과 개발 정책에 있어 개입주의적인 국가, 개발에 대한 의지를 가진 관료 집단, 미국의 패권과 세계 체제, 해외 원조와 유교 문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 중 한국 발전 사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요인은 개입주의적인 국가, 해외 원조 그리고 강한 정치 지도자(리더십)이다. 자원 빈국, 한국 전쟁, 북한에 의한 안보 위협과 이데올로기 문제 등의 저발전 요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성공적으로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은 탈냉전과 98년 경제 위기를 경험했지만, 이러한 상황들을 극복하고 2000년대 이후에도 성공적으로 세계화에 편입하는 등 경제 발전을 지속할 수 있었다.

한편, 1인당 국민 총 소득과 총자본형성률 등 여러 경제적 차원에서 르완다와 케냐는 사하라 이남 국가들 중에서도 아직 열악한 발전 상황을 보여준다. 그러나 두 국가의 최근 연간 경제 성장률이나 GDP 대비 총자본형성률은 같은 사하라 이남 지역의 개발도상국들과 구분된다. 르완다는 여전히 사하라 이남 개발 도상 국가 중에서도 가난하지만, 이는 1994년 제노사이드로 인해 거의 대부분의 사회 기반 시설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오랜 독재와 심한 부패, 정치 불안정 등으로 2000년대 중반까지 저발전 했던 케냐 또한 2000년대 민주화 이후, 점진적으로 경제 성장하고 있다. 두 국가의 경제적 성과는 특히 같은 시기 다른 사하라 이남 개발도상 국가들(IDA와 IBRD에 가입된)의 경제 성장이 둔

화되었다는 점에서 큰 함의를 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의 발전 연구와 관련하여, 두 국가의 사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하다. 두 국가 모두 인구가 1천만 명 이상(르완다 2018년 기준 1218만 명, 케냐 2019년 기준 5140만 명)이며, 금이나 다이아몬드와 같은 주요 천연 자원이 없는 자원 빈국이다. 두 국가는 모두 국가 내부적으로 인종 갈등, 열악한 인프라 문제, 빈곤, 교육, 보건 등 낮은 삶의 질과 세계화, 주변 국가와의 갈등 등 여러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및 안보 문제들에 직면해있다. 다른 아프리카 개발 도상 국가들 또한 이러한 국내외 발전 장애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르완다와 케냐가 어떻게 이러한 발전 장애 요인들을 극복하고 경제 성장을 했는가를 연구하는 것은 아프리카의 개발 모델 연구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두 국가가 처한 국내외 정치·경제 상황은 또한 전쟁 직후 한국의 발전 조건 유사한 점이 많다. 한국의 발전 사례는 자원 빈국이며 전쟁, 외환위기 등 여러 대내외 발전 제약을 극복하고 발전을 달성했고, 그 과정에서 국가와 지도자의 노력, 해외 원조의 기여 등이 있었다는 점에서 개발도상 국가형 발전 모델로서의 충분한 연구 가치가 있다. 또한 기존에 한국과 르완다, 케냐 간의 비교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두 국가의 발전을 한국의 발전 모델 틀에 맞춰 분석하는 것은 비슷한 정치경제 상황에 직면한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의 발전 모델 탐색 측면에서도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France Diplomatie, 2019; 대한민국 외교부,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르완다와 케냐의 발전 사례에서 동아시아의 발전 사례와 같은 요인들이 발견되는 가를 확인하는데 있다. 동아시아 발전 모델 중 적극적인 발전 국가, 해외 원조와 발전 지향적인 지도자라는 세 가지 요인 틀에 맞추어, 르완다와 케냐의 발전 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르완다와 케냐 각국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 발전 정책, 해외 원조와 관련된 지표, 그리고 각국 지도

자와 관련된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 각국의 발전 요인 분석을 통해, 결론적으로 동아시아 발전 모델의 다른 개발도상 국가의 적용 가능성을 탐구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현행하는 서구식 국제 정치경제의 현실을 소개한 후, 연구 방법과 이 연구가 가지는 의의를 논하였다. 2장에서는 서양 중심적인 발전 이론과 이에 대한 비판에 대해 탐구한 뒤, 비서구 지역 저발전과 발전 모델인 라틴 아메리카의 종속이론, 세계체제이론과 동아시아의 발전국가 모델을 탐구한다. 3장에서는 사하라 이남 지역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치경제 발전 현황을 살펴본 뒤, 아프리카 발전에 대한 논의와 저발전 요인에 대해 분석한다. 4장에서는 한국 발전 요인들을 르완다와 케냐 발전 사례에 대입하여 분석한다. 5장은 결론을 통해 한국 발전 모델의 개발도상 국가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탐구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잠재적인 시장과 석유, 다이아몬드나 에너지 자원 등의 경제적 측면과 UN, 북한 등 정치적인 이유로 최근 들어 한국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아프리카 발전 모델 연구나 한국 발전 모델의 아프리카 적용 또한 많이 고려되지 않는다. 자원 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한 한국의 사례는 자원 빈곤국인 사하라 이남 지역의 발전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발전 모델 탐구에 있어 한국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거의 함께 비교 연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형 발전 모델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 발전을 분석하는 것은 유의미한 시도이다. 특히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과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경제적 격차가 크지 않았고, 한국 역시 1997년의 경제 위기 이후 재정적 신뢰성과 재정 건정성을 재건하며 다시 성장했기 때문에, 한국의 사례는 부패 문제와 저발전 문제에 직면한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개발 모델로서 제시될 수 있다.(Asongu, 2015: 12-15)

Ⅱ. 경제 발전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서구 중심적 발전 이론과 비판

서구 중심적인 발전은 비서구 지역도 서구식 발전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유럽의 경제 발전 경험에 따른 것인데, 근대화 이론(Modernization Theory)은 이러한 유럽의 경험을 근거 삼아 국가가 경제 성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문기는 근대화 이론의 기원을 진화론과 기능주의로 분석한다.(서문기, 2014: 104) 발전 과정을 전근대-근대화-근대로 나누는 근대화 이론에 따르면 정치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가 적자생존인 국제 정치 현실에서 살아남기 더 쉽다. 따라서 국가들은 생존을 위해 정치경제적 발전을 추구하게 된다. 현재 정치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들은 대부분 서유럽이나 미국 등 서양 국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화 이론은 개발도상 국가들이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체제를, 경제적으로는 자유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하여 서구식 발전 과정을 따를 것을 제안한다. 로스토(W. W. Rostow)는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경제성장 5 단계 이론(Rostovian Take-Off Model)을 제시했다. 전통 사회 이후 전이-도약기-성숙기를 거쳐 거대 소비 단계로 진입하는 서구식 경제 발전 과정이 적절한 발전 단계이며, 발전하고자 하는 모든 경제 체제와 국가는 이 일련의 단계들을 따라야 한다.(Rostow, 1960: 4-12; Omolara, 2019: 201-203)

근대화 이론은 저개발한 비서구 국가들이 서양의 정치경제 체제를 이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국가의 사회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근대화론이 서구의 발전의 원인을 해당 국가의 역사, 사회 그리고 문화에 기인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막스 베버(M. Weber)는 자신의 저작에서 서양의 경제 발전과 문화 사이의 관계를 강조했다. 영국, 미국이나 네덜란드와

같은 서구 국가에서 자본주의가 먼저 발전한 이유는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문화적·종교적 요소에서 기인한다. 금욕적이고 합리적인 청교도 윤리는 노동자들이 노동을 삶의 목적으로 여기게 했고, 이는 부의 축적으로 이어져 자본주의의 발생을 촉진했다.(Weber, 2002: 3-38)⁴⁾ 이처럼 정치적, 경제적으로 저발전 하는 비서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구 중심적인 발전 이론은 비서구적 전통으로부터의 단절 혹은 사회문화적 개조를 요구한다.

서구식 경제 발전 이론은 또한 자기 조정적인 시장을 통한 자유 경쟁과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정치경제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발전 요인이다. 즉, 국가 그 자체 보다 경제, 자유시장과 기업가 등의 요인이 국가의 발전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아시아의 발전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시장친화적인(market-friendly) 전략을 가진 국가들이 최소한으로 시장에 개입했을 때, 효과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World Bank, 1993; World Development Report; 1991)⁵⁾ 정치경제에서 국가보다 시장을 더 강조하는 이러한 논리는 자본주의가 정치적 문제를 조정할 수 있다는 ‘골든 아치 이론’(Golden Arches Theory)으로 까지 나아간다.

고전주의 경제학의 영향으로, 서구중심적인 경제 발전 이론은 시장과 국가를 분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자유로운 자본, 재화, 노동과 정보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그리고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서구 중심적인 시각에서 동아시아의 국가들의 경제적 성공 요인은 국가의 선별적인 산업지원과 수출 지향적 산업화 달성으로 분석될 수 있다.(Lim, 2016: 141)

4) 비서구 지역의 저발전 문제와 문화 사이의 상관성에 대한 서양의 시각은 로스토우의 경제 성장 5단계 이론(Rostow, 1960: 2)과 트루먼 정부의 개발 지원 프로그램인 ‘Point Four’(Harrison, 1990: 8-15)에서 잘 드러나 있다.

5) 경제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출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기여한다고 주장한 발라사(Balassa) 또한 시장을 강조하는 관점을 견지한다.(Balassa, 1988: 281)

한편, 비서구 지역의 경제 성과와 관련하여, 서구식 정치경제 발전 방식을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적용된 서구식 발전 방식은 각 비서구 지역에서 다른 경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각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특수성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서구 중심적인 발전 이론은 유럽의 경제 발전을 자생적인 것으로 설명하지만, 유럽의 경제 성장은 자생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유럽의 경제 발전은 비서구 지역(식민지나 중국 등)과의 정치적·경제적 관계에 영향을 받았다. 한편, 개발도상국에 대한 서구식 개발 담론이 또 다른 형태의 제국주의라는 비판도 가해진다. 서구 주도의 개발 프로그램은 비서구 개발 도상 국가들의 경제적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다. 개발 담론은 서양의 선진국 국가들이 비서구 지역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통제하고 창조하는 과정일 뿐이다.(Amin, 2000: 9-10)⁶⁾

서구식 시장주의는 시장의 불확실성이나 시장의 비교 우위 등의 문제를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개발도상 국가들은 선진국들에 비해 ‘시장의 저발전’과 ‘시장 실패’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더 높다. 세계 무역 내 비교 우위에 따라 개발 도상 국가들이 얻는 이익은 부국에 비해 적을 뿐만 아니라, 낮은 산업화 수준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선진국들을 따라잡기(Catch-up)하기 위하여, 개발 도상국가들은 제도, 정책 등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시장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경제 발전을 위해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서양 초기 자본주의의 중상주의 정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Johnson, 1987: 141)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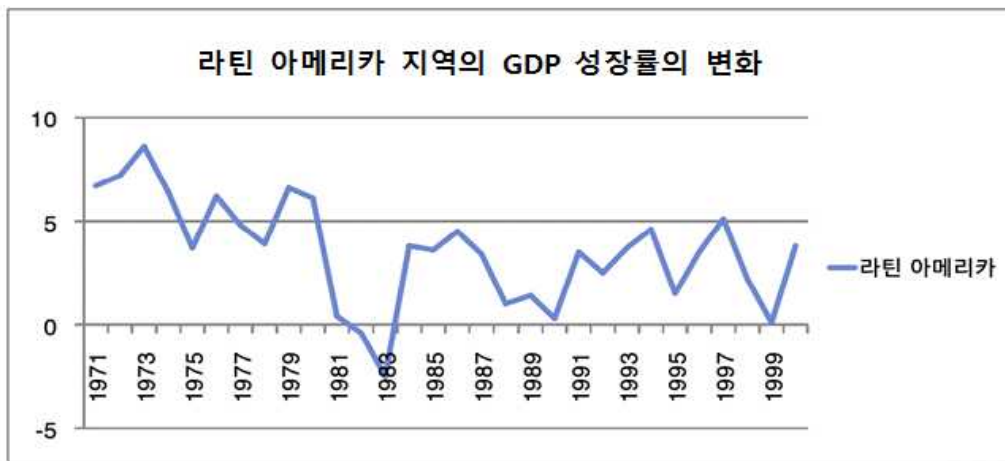
6) 서구 중심적인 발전에 대해 이들 또한 아민과 유사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Bault, 1994: 51-58; Hobson, 2013a: 22-24, 2013b: 12-14; Gran, 1996: 253; Tucker, 1999: 3-8)

7) 이들도 개발도상국가의 시장 개입에 대해 존슨과 비슷한 관점을 공유한다.(조희연, 1997: 62; 이병천, 2003: 111; ; Amsden, 1991: 284; Mann, 1986: 500-517; Polanyi, 1975: 187-200; Weber, 1966: 338-351; 김윤태, 2017: 27-28)

2. 라틴 아메리카 저발전 이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양 중심적인 정치경제 체제와 근대화 이론은 근본적으로 서구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 서구와 비서구 지역은 각자 다른 발전 단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비서구 지역의 발전 문제와 관련하여 비서구 지역만의 특수한 역사적, 사회문화적 구조를 경시할 수 없다. 기존의 비서구 개발 도상국가의 경제 발전 담론이 대부분 서구적 관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비서구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발전 이론과 연구가 필요하다.

비서구 지역의 발전을 설명하려는 이론적인 시도는 크게 라틴 아메리카 저발전 모델인 ‘종속이론’과 ‘세계체제론’, 그리고 동아시아의 발전 모델인 ‘발전 국가론’으로 나뉠 수 있다. 두 발전 모델은 70~80년대 당시 서구 발전 이론과 다른 방식으로 저발전, 혹은 발전하는 두 비서구 지역의 경제성과를 설명하기 위하여 제시되었다.



〈그림 1〉 1971년과 2000년 사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GDP 성장률 변화
(출처: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비서구 발전 이론과 관련하여, 먼저 라틴 아메리카의 저발전 사례가 제시될 수 있다. 종속이론과 세계체제론은 70-80년대 라틴 아메리카의 저발전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인 시도이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은 70년대 이후 불안정한 경제 성장률 보이며 저발전 했다. 61년과 70년 사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은 평균적으로 5.6%, 71년과 80년 사이에는 평균적으로 6% 성장했다. 그러나 1981년, 1988년, 1989년에는 각각 0.4%, 1.0%와 1.4%의 성장률을 보였고, 1990년, 1995년과 1999년에는 각각 0.3%, 1.5%와 0.1%의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은 1982년과 1983년에는 각각 -0.4%와 -2.5%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발전 했다.

서구 중심적인 시각에 따르면 비서구 지역의 경제적 저성장은 서구와는 다른 각 국가의 국민성, 기후나 문화 등으로 인하여 야기된 것이다.(Hobson, 2013b: 10-11) 그러나 이러한 서구 중심적 시각은 비서구 지역의 특수한 정치적, 경제적 요소 등을 간과했으며, 비서구의 경제 저발전 문제를 단편적으로 분석한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경제 저발전의 원인은 식민지 구조, 자본주의와 세계 체제 등 다층적으로 분석될 수 있다. 우선, 서양에 의한 라틴 아메리카 식민 통치 역사는 양측 간 불공평한 정치적, 경제적 구조를 만들었다. 식민 통치 구조는 독립 이후에도 지속되어 서양에 대한 라틴 아메리카의 종속성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발전은 식민지 구조와 상호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 지역은 로스토우의 발전 단계론을 그대로 따를 수 없다.(Emmanuel, 1972: 16-20)⁸⁾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라틴 아메리카의 근본적인 저발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종속 이론’과 ‘세계 체제론’이 제시되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자본주의 체제에 속해있으며, 이 구조에 영향을 받는 구성 요소이다. 각

8) 아민, 프랑크와 림 또한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적 저발전 문제에 대해 비슷한 관점을 공유한다.(Amin, 1977: 200-206; A.G. Frank, 1969a: 3-13, 1969b: 20-28, 1975: 96; Lim, 2016: 126-130)

국은 산업화, 기술력과 경제력 등에 따라 ‘중심부’(core)와 ‘주변부’(periphery)⁹⁾로 분류된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을 포함한 대다수의 비서구 지역은 식민지 시절부터 세계 경제 체제 내에서 주로 1차 산업에 특화된 노동 분업을 담당했기 때문에, 비교 우위에 따라 경제적으로 저발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저발전은 개별 국가 요인이 아닌 자본주의 체제라는 구조적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핵심부의 식민지였던 주변부 지역은 자본과 기술력 등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경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독립 이후에도 핵심부와 ‘연계된 종속 발전(associated-dependent development)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Wallerstein, 1979: 1-118)¹⁰⁾ 이들은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핵심부-주변부 간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된다고 말했다. 세계화가 강조하는 분업 구조에 따라, 자본과 기술에서 열위를 가지는 주변부 국가들의 핵심부 종속성은 더욱 강해진다.(금상문, 2002: 49-53)

식민지 역사에서 기인한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경제적 저발전 문제는 독립 이후에도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저개발에 직면한 라틴 아메리카의 발전 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주의 체제로부터의 탈피를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언급된다. 자본주의 체제 속에 남아있는 한, 라틴 아메리카 지역은 무기력하게 종속적인 위치에 남게 되며, 지속적으로 저발전 한다.(Amin, 1976: 250-287) 또한 경제 저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량을 국가 및 정치 엘리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엘리트들의 노력이 요구된다.(Cardoso et al., 1979: 93-95)

9) 종속이론가와 세계 체제론자들은 핵심부와 주변부 사이에 반주변부(semi-peripheries) 지역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주변부 보다 더 경제적으로 성장한 반주변부 지역은 노력에 따라 핵심부에 진입할 수 있다.(Wallerstein, 1979: 38-118; Frank, A. G., 1969b: 290-296, 1975: 104, 1998: 184; Frank, A. G., Gills, 1996: 99, 278)

10) 라틴 아메리카의 저발전 문제를 강동조, 아민, 위공, 프레비시, 카르도주와 산토스 또한 종속이론과 세계 체제론으로 설명했다.(강동조, 2014: 370-374; Amin, 1974: 197-288, 1977: 103-136; Hugon, 1974: 428-434; Prebisch, 1949: 218-231; Cardoso et al., 1979; Santos, 1970: 232-234)

3. 동아시아 발전 이론

다음으로 동아시아의 발전 모델인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가 제시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냉전 시기, 그리고 탈냉전 시기까지 일본, 한국과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은 빠른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1961년과 1970년 사이 일본, 한국과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지역의 연평균 GDP 성장률은 9.4%를 기록했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급속한 경제 성장세는 70, 80년대에도 계속된다. 70, 80년대 한국, 싱가포르와 일본은 7-8 퍼센트 대의 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일본은 연평균 1 퍼센트 대의 성장률을 보이며 다소 완만한 발전 양상을 보였다. 이는 1985년 플라자 합의에 따른 엔화 고평가로 인한 90년대 버블 경제의 시작과 98년 동아시아 경제 위기로 인한 것이다. 반면 한국과 싱가포르는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경험했던 1998년 각각 -5.5%와 -2.2%의 저성장률을 보인 것을 제외하고, 매년 평균 7 퍼센트 대의 성장률을 지속했다.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발전 모델과 관련하여, 일본의 경제학자 아카마쓰(Akamatsu)의 ‘나는 기러기식 성장 모델(The Flying Geese Growth Model)’이 제시될 수 있다. 이 이론은 일본의 산업화가 주변의 동아시아 국가들에 순차적으로 이전되며 동아시아 지역이 경제 성장했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일본은 서양 선진 국가들을 따라잡기(Catch-up)하기 위하여 국가 주도로 산업화를 달성했다. 일본은 자국 산업화의 외연을 확장하여 싱가포르, 타이완, 홍콩과 한국 등 주변 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에도 영향을 주었다.(Korhonen, 1994: 95-98; Lim, 2016: 171-172)

〈표 5〉 발전국가론에 대한 상반된 논의

	발전국가론	발전국가론 비판
학자	존슨, 아리기, 팔로우스, 웨이드, 에반스	크루그먼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개입적인 성장 방식 •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 • 국가 관료의 역할 • 미국 헤게모니 체제 • 해외 원조 • 문화 요인: 유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과 자본 투입 중심 경제의 비효율성 • 필연적으로 경제 위기를 내포하는 경제 매커니즘임

한편 크루그먼(Krugman)은 동아시아의 경제 성장이 본질적으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아시아 경제가 노동과 자본의 급격한 투입(input)으로 표면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한 소련의 경제 발전 양상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투입 중심적인 경제 성장이 효율성(efficiency)을 증가시키지 못하면 그 국가의 경제는 필연적으로 둔화되거나 저하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동아시아 국가들은 장기적으로 경제 위기의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분석했다.(Krugman, 1994: 63-64)

반면 몇몇 학자들은 서양의 경제 이론과는 다른 ‘동아시아의 예외성(East Asian exceptionalism)’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70, 80년대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 동아시아가 발전한 점과 시장 중심적인 서양 고전 발전 모델과의 차이점 등을 들어 발전국가론을 옹호한다.¹¹⁾ 발전국가론에 따르면, 경제에 개입주의적인 국가, 국가 관료의 역할, 유교 문화 등이 동아시아 경제 발전 요소이다. 서양 국가들과는 달리, 동아시아 신흥 산업국(East Asian Newly Industrializing

11) 세계은행(World Bank) 또한 1993년 『동아시아의 기적, The East Asian Miracle』 보고서를 통해 국가개입적인 방식으로 성장한 동아시아의 경제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Country, EANICs)들은 국가 주도로 산업화를 달성한다. 동아시아의 이러한 발전 정책은 ‘배태된 수출주의(embedded exportism)’로도 불리는데, 국가 관료들은 산업 전략과 경제 정책을 제시하는 등 경제 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Sum et al., 2001: 155-156; Johnson, 1982: 35-82)¹²⁾ 비록 발전 국가들의 비민주성, 부패나 연고주의 등이 비판받았지만, 동아시아의 발전 사례는 다른 약탈 국가와는 구분된다. 특수한 발전 요소들로 인하여, 발전국가 모델은 리스트적 근로연계복지 국민국가(Listian Workfare National State, LWNS)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Jessop, 2001: 7; 박은홍, 2002: 129-152)

한편, 동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 성장이 미국의 패권 체제 때문에 가능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 시기 동아시아 국가들은 군사, 에너지, 식량과 수출 등과 관련하여 미국에게 전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 주력할 수 있었다. 그리고 미국 등 서방 국가들로부터 얻은 해외 원조는 동아시아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¹³⁾ 미국의 원조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자본과 기술 등을 제공했고,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를 기반으로 국가 주도의 수입 대체 산업화(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ISI)를 달성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시기 동아시아 국가들은 서로 상호 연계된 저비용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70, 80년대에 다른 국가들처럼 저성장 위기에 직면하지 않을 수 있었다.(Arrighi, 1996: 16-28)¹⁴⁾

12) 동아시아 발전 모델의 특징과 관련하여 이들도 비슷한 관점을 공유한다.(Wade, 1990: 34-51; 조희연, 1997: 49-56; Evans, 1995: 227-246; 김윤태, 2017: 14-28)

13) 일본은 1953년부터 1966년까지 세계은행에서 원조 자금을 조달했고, 한국과 대만은 냉전 기간 동안 미국으로부터 해외 원조를 받았다.(Soesastro, 2005: 219-237)

14) 동아시아 경제 발전에 대한 미국 헤게모니의 영향에 대해 박태균, 조명래와 윤상우도 비슷한 입장을 취한다.(박태균, 2007: 109-129; 조명래, 2003: 378-379; 윤상우, 2003: 260-261; Yeung, 2017: 9; Stubbs, 2009: 3-9)

〈표 6〉 1946년과 2009년 사이 한국과 대만에 대한 미국의 경제 원조

(단위: 백만 달러, \$)

	2차 대전 이후 복구 시기 (1946-48)	마셜 플랜 (1949-52)	해외 원조법 (Foreign Assistance Act) (1962-80)	상환 및 이자 총액 (1946-80)	차관과 보조금 총액 (1946-2010)
한국	181.2	498.1	8681.6	12,738.5	15,042.1
대만	643.7	743.1	2205.2	5820.0	6763.7

(출처: Yeung, 2017, table 2, p. 10 인용)

문화론은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서구 자본주의의 발전과 관련이 있었던 것처럼, 유교와 동아시아 문화가 동아시아의 경제 성장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교육, 연공서열, 조화와 엘리트주의 등 동아시아의 문화적 가치가 동아시아의 빠른 산업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조희연, 1997: 49) 그러나 림은 동아시아 각국에서 유교의 가치는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을 언급하며, 문화론의 한계를 지적했다. 산업화 초기인 메이지 유신 당시 일본에서 유교는 부국강병과 서구 따라잡기(catch-up)에 방해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대만에서는 본성인과 외성인 간의 갈등으로 인해, 유교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 이처럼 동아시아 각국에서 유교 가치는 달랐으며, 문화론으로 동아시아의 경제 발전을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Lim, 2016: 156-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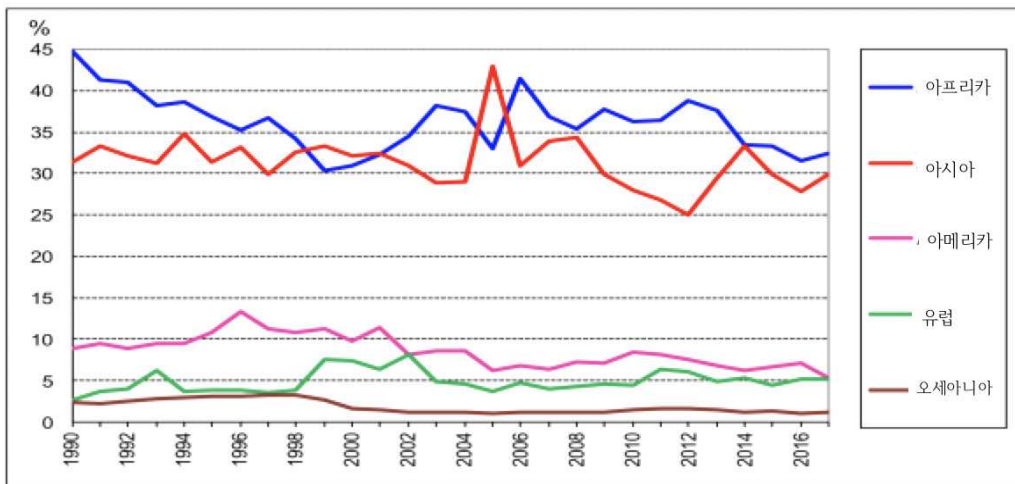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아시아 발전 모델의 특징은 경제 정책과 산업 등에 개입주의적인 국가, 국가 발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국가 관료, 국가 주도의 수입대체산업화(ISI)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듀발(Duvall)은 이러한 발전국가 모델을 ‘정부의 기업가적 역할’(state entrepreneurship)이라고 제시했

다.(Duvall et al., 1981: 103-104) 그러나 동아시아의 국가 주도적 경제 발전 방식은 부패, 정경유착과 비민주성 등에 대한 비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국가와 국민이 노동과 사회 부문을 경시하는 문제를 야기했다. 자본과 자원 등에 취약성을 가지고 있던 동아시아 국가들은 안보 위협 기제 등을 통해 국민들이 국가와 ‘생존’과 ‘경제 발전’이라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도록 했다. 그 결과 동아시아 국가들은 낮은 임금과 미약한 복지 제도를 유지하면서 국민들을 생산 활동에 동원할 수 있었다.(임현진, 2020: 198-199)

마지막으로 발전국가론은 동아시아 각국의 특수성을 간과했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동아시아 각국은 보편적으로 개입주의적 국가, ‘통치된 시장(governed market)’, 유교 문화 등의 유사한 발전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각국은 전술한 문화적 차이뿐만 아니라 산업 정책, 산업화 구조와 패턴 및 투자 형태 등과 관련하여 각기 다른 특성을 보인다. 예를 들어, 일본과 한국에서는 ‘공-민’ 협력 구조가 관찰되지만, 대만에서는 두 요소가 일본과 한국에 비해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그리고 민간 대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한국 정부와 달리, 대만은 소수의 공기업과 해외 기업 등을 선별적하여 우대 지원 했다. 반면, 홍콩과 싱가포르의 지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무역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무역항 경제 체제, entrepot economies)할 수 있었다. 또한 홍콩은 자유 방임형 무역항 경제 체제를 가진 반면, 싱가포르는 적극적 국가 개입형 무역항 경제 체제를 가지는 등의 차이점을 갖는다.(박은홍, 2000: 124)

Ⅲ.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발전과 저발전

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정치경제 발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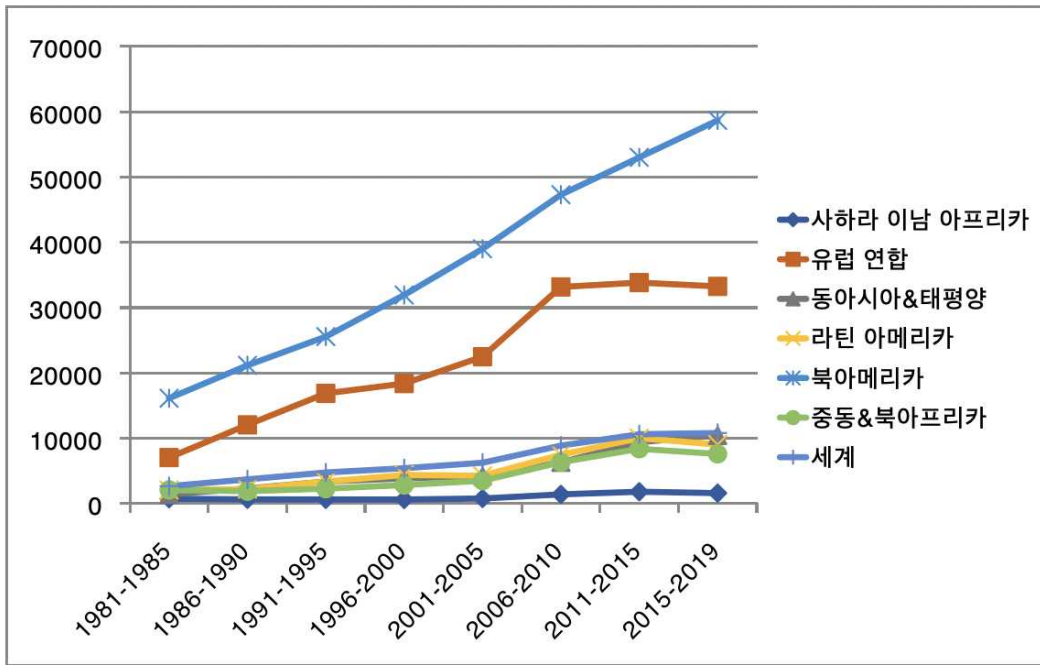
〈그림 2〉 각 지역 별 총 ODA 점유율

(OECD Development Aid at a glance statistics by region - 2. Africa, p. 3 인용)

국제 정치경제의 유럽 중심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해보았을 때, 아프리카 지역에도 이러한 관점이 적용될 수 있다.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서구식 정치·경제 체제가 이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은 ODA를 가장 많이 수혜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서구식 발전 방식을 받아들인 아프리카 지역이 이론이 제시하는 바와 같은 결과를 얻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아프리카 지역의 정치·경제와 관련된 몇 가지 지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아프리카의 정치와 경제에 관련된 여러 지표 중 1인당 국내 총 생산량 (GDP per capita), 글로벌 다차원적 빈곤 지수(Global 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MPI), 부패 인식 지수(CPI), 민주주의 지수(DI), 프리덤 하우스 자유 지수(Freedom House Index, FHI), 세계 거버넌스 지수(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WGI)와 아프리카 각국의 거버넌스에 관한 이브라힘 지수(The Ibrahim Index of African Governance, IIAG) 등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사하라 이남 지역의 경제 발전 현황



〈그림 3〉 탈냉전 전후 비서구 지역의 연 평균 1인당 총 생산량

(Annual Average of GDP per capita of Non-Western Region)

(출처: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우선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 현실과 관련하여, 아프리카 지역의 1인당 국내

총 생산량과 글로벌 다차원 빈곤 지수가 제시될 수 있다.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 발전과 관련하여, 공적 개발 원조(ODA)¹⁵⁾는 중요한 요소이다. 아프리카 지역은 거의 매년 ODA를 가장 많이 수혜 받는 지역이지만, 비서구 지역 중 가장 낮은 1인당 국내 총생산량을 보이고 있다.⁹⁾ 탈냉전 전후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와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은 비교적 꾸준히 경제 성장을 했고, 2019년을 기준으로 모두 최소 6천 달러 이상의 1인당 국민 소득을 기록하였다. 반면 사하라 이남 지역은 동일한 시기에 1인당 국민 소득 2천 달러를 넘기지 못했고, 모든 시기에 비서구 지역 중 최하위 소득을 기록했다. 특히 사하라 이남 지역은 탈냉전 전후 어느 시기에도 1인당 국민 소득이 2천 달러를 넘은 적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하루 가용 생계비가 5.5달러 이하인 경우 빈곤층이라고 규정한 세계은행의 기준¹⁶⁾에도 못 미치는 결과이며, 사하라 이남 지역의 빈곤, 저발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2019년 글로벌 다차원적 빈곤 지수(MPI 2019)에 따르면 101개국의 13억 인구가 다차원적(건강, 교육과 삶의 질)으로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차원 빈곤 계층의 비율은 각 지역 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최하위를 차지한 사하라 이남 지역은 57.5% 인구가 다차원적으로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차원 빈곤 발생은 인간 개발 지수(HDI)와 강한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다차원적 빈곤은 교육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평균 수명과 삶의 질과도 관련이 있다. 다차원적으로 가장 빈곤한 것으로 나타난 사하라 이남 지역은 인간 개발 지수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경제와 관련된 마지막 지표인 2019년 부패 인식 지수 보고서(CPI report)에 따르면 조사된 아프리카의 49개 국가의 평균 투명성 지수는 32점으로, 아프리카는 전체 6개의 조사 지역 중 반부패 인식 지수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드러

15)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복지를 촉진 및 구체적으로 목표로 하는 OECD 개발 지원 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정부의 지원으로 정의된다.

16) 1년을 365일로 가정했을 때, 빈곤층의 1년 총 수입은 2007.5 달러가 된다.

났다. 부패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인 서유럽이 66점을 받은 것과 비교했을 때, 아프리카의 부패 인식 수준은 이와 대조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전 세계 평균 부패 인식 지수가 43점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평균 미달인 아프리카의 부패 인식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제 투명성 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는 부패 인식 지수가 낮은 국가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시민들 사이에 정치적 힘이 더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해당 기관은 부패 방지 및 퇴치에 관한 아프리카 연합 협약(African Union Convention on Preventing and Combatting Corruption)이 존재하지만, 이 제도가 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¹⁰⁾

사하라 이남 지역의 정치 발전 현황

다음으로 아프리카 지역의 정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한 관련 지표로 민주주의 지수(DI), 프리덤 하우스 자유 지수(FHI), 세계 거버넌스 지수(WGI)와 아프리카 각국의 거버넌스에 관한 이브라힘 지수(IIAG)를 참고할 수 있다. 우선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2019년 사하라 이남 지역의 민주주의 지수는 4.26점으로, 4.36점이었던 2018년에 비해 민주주의 수준이 퇴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44개의 조사국 중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로 분류된 국가는 모리셔스뿐이었다. 반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 중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에는 7개 국가가, ‘혼합형 체제’(Hybrid regime)에는 14개 국가가, 그리고 ‘권위주의 체제’(Authoritarian)에는 22개 국가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평균(민주주의 지수 5.48점)과 비교했을 때, 사하라 이남 지역의 민주주의 수준은 좋지 않다. 조사 기관은 2006년 이래로 사하라 이남 지역은 민주주의에 있어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는데, 2019년 들어 해당 지역의 민주주의 수준이 크게 악화 되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하여 해당 기관은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는 지방 정부가 권력 유지 목적으로 민주적 자유를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정부 거버넌스가 악화됨에 따라 정부, 정당과 공무원 등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테러나 외채 등 외부 세력의 영향과 의존성 문제 또한 사하라 이남 지역 국가들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¹¹⁾

2020년 자유 지수에 따르면 50개의 사하라 이남 지역의 아프리카 국가 중 정치적으로 14%는 ‘자유’, 49%는 ‘부분적 자유’이며 37%는 ‘비자유’ 상태이며, 프리덤 하우스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민주주의가 좌절되었고 권위주의 국가들은 과도기 상태에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유럽(42개 국가, 81% 자유, 17% 부분적 자유, 2% 비자유), 아메리카(35개 국가, 63% 자유, 28% 부분적 자유, 9% 비자유), 동아시아(39개 국가, 46% 자유, 33% 부분적 자유, 21% 비자유)와 전 세계 평균(195개 국가, 42.6% 자유, 32.3% 부분적 자유, 25.1% 비자유)과 비교했을 때 아프리카 지역의 정치적 자유와 관련된 현실이 심각하다.¹²⁾ 또한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에 속한 55개국 중 군주제 국가인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로코와 미승인 국가인 서사하라 민주 공화국을 제외한 나머지 51개 국가가 공화제 국가¹³⁾임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결과는 아프리카 지역의 실질적인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다음으로 세계 거버넌스 지수(WGI)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프리카 지역의 정치경제 발전을 위해 거버넌스의 개선은 필수적이다.¹⁷⁾ 세계 거버넌스 지수에 따르면 2018년 사하라 이남 지역의 평균 백분위 순위는 각각 여론 반영 약 32, 정치적 안정성 약 30, 정부 효율성 약 24, 규제의 질 약 28, 법치주의 약 30, 부패 통제 약 34 이다. 반면 OECD 국가의 2018년 평균 거버넌스 백분위는 여론 반영 약 86, 정치적 안정성 약 74, 정부

17) 세계 거버넌스 지수(WGI)는 ‘거버넌스’를 국가의 권위가 행사되는 전통과 제도로 정의하며, 부패 통제, 규제의 질, 정부 효율성, 법치주의, 정치적 안정성, 여론 반영 등 6가지 측면에서 전 세계 226개 국가의 거버넌스를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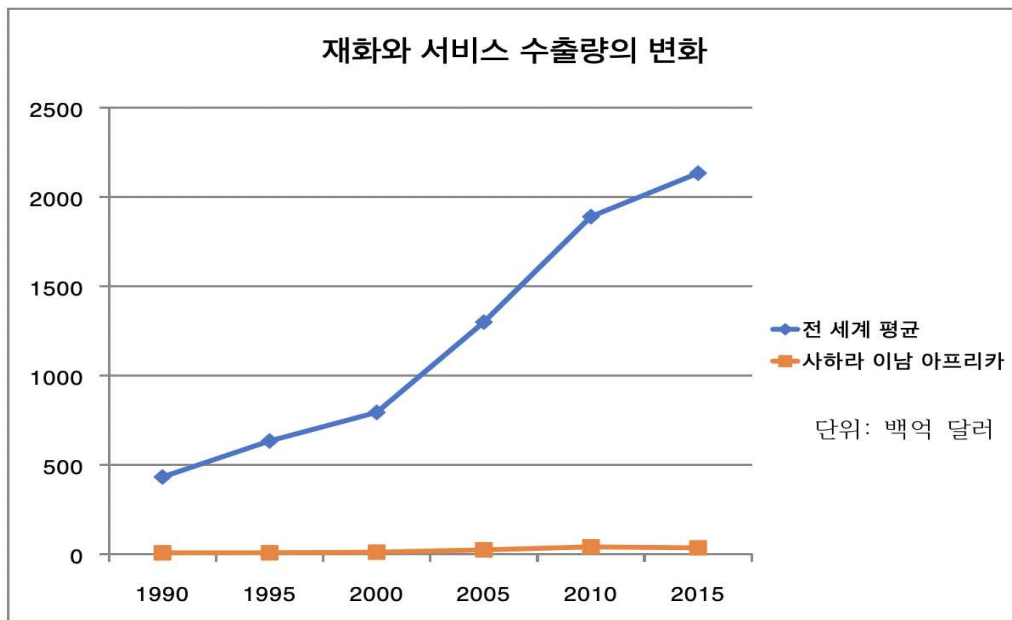
효용성 약 86, 규제의 질 약 86, 법치주의 약 84, 부패 통제 약 84로, 사하라 이남 지역의 거버넌스와 대비적인 결과를 보인다. 사하라 이남 지역의 거버넌스는 2000년대 이래로 대체적으로 미약한 변화율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정치 안정성, 정부 효용성과 규제의 질은 시간이 지나며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¹⁴⁾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각국의 거버넌스에 관한 이브라힘 지수(IIAG)에 따르면, 2017년 아프리카 각국의 거버넌스 평균 점수는 49.9점이다. 이는 10년 전인 2008년의 점수(48.9점)와 비교했을 때 정확히 1점이 올랐는데, 아프리카 대륙이 10년 동안 크게 정치적인 발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사 기관은 지난 10년 동안 거버넌스 개선이 전반적으로 불규칙하며, 2008년부터 전체 거버넌스를 개선한 34개 국가 중 19개 국가는 2014년부터 거버넌스 개선 진행률이 둔화되거나 최근 들어 침체가 시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4년부터 시행된 첫 10년 시행 계획(First Ten-Year Implementation Plan, FTYIP) 이후 2017년까지 아프리카 지역에서 법치주의, 인프라, 젠더, 투명성과 책임성, 정치 참여, 복지 부문에서는 연간 거버넌스가 개선되었다. 반면 정치 권리, 공공 관리, 개인 안전, 교육, 농촌 부문, 기업 환경과 국가 안보 순으로 거버넌스가 악화되었다. 조사 기관은 높은 거버넌스 점수와 관련이 있는 요소는 강력한 재산권, 시민의 권리와 자유, 책임 있는 정부와 효과적인 공공 서비스, 사회 안전망과 환경에 초점을 맞춘 정책과 관련된 시민 중심의 요소라고 제시했다.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조사 기관은 교육률과 인프라 발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¹⁵⁾

2. 아프리카 발전 논의

세계화는 일반적으로 전 세계가 경제·정치·사회·문화적 상호 의존 관계가

강화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세계화 옹호론자들은 헉셔-오린-사무엘슨 모델(Hekschler-Ohlin-Samuelson Model)에 근거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세계화를 통해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¹⁸⁾ 이들은 경제적 상호 의존 관계가 또한 정치적 상호 의존 관계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세계화의 심화에 따라, 집단 의사 결정은 점점 개별 국가가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국제기구들은 무역이나 원조 등을 통해 비민주적인 국가의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Ibrahim, 2013: 87)¹⁹⁾ 세계은행은 아프리카가 세계화 속에서 지배 구조 개선과 갈등 해소, 인력 투자, 경쟁력 강화, 경제 다각화, 원조 의존성 감소, 파트너십 강화 등 4가지 측면에서 이득을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World Bank, 2000)



18) 이 이론에 따르면 선진국은 기술 집약적 제품을 수출하고, 개발도상국은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노동 집약적 제품을 생산 및 수출한다. 이러한 비교 우위에 따라 세계화는 저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개발도상국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 세계화는 또한 개발도상국 국가들의 수출과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의 증가 및 예금 동원을 가능하게 한다.(Kai et al., 2009: 1-3)

19) 세계화의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 이들도 비슷한 진술을 하고 있다.(Akindede, 1990: 1-5; Obadan, 2004: 3-8)

〈그림 4〉 탈냉전 이후 재화와 서비스 수출량의 변화
 (Exports of goods and services, Bop, Current US\$)

(출처: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그러나 이러한 세계화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반대로, 세계화가 아프리카의 경제 발전에 일조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세계화 이론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90년대 이후 노동력과 자원이 풍부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 중 상당수가 양극화, 경제 저발전이나 빈곤 등을 경험했다. 90년대 이후 사하라 이남 지역의 전체 수출액과 GDP가 증가한 것은 사실지만, 두 항목 모두에서 사하라 이남 지역이 전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가 넘지 않는다. 특히 2000년대를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GDP와 수출량이 급증하는데 반해, 사하라 이남 지역은 완만한 증가율을 보인다. 앞에서 살펴 본 아프리카의 정치, 경제와 관련된 지표들 또한 아프리카가 세계화에 따른 이득을 얻는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표 7〉 아프리카 정치경제 저발전의 대내외적 요인

저발전의 대내적 요인	저발전의 대외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발전 역량 부족 • 정치 불안정 • 생산성이 낮은 산업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취약한 산업 구조 • 높은 해외 의존성(다국적 기업 등)과 혁신에 대한 의지 부족 • 글로벌 거버넌스의 강대국 편향성

그렇다면 아프리카는 왜 세계화 이론이 제시하는 바와 다르게 정치적, 경제적으로 저발전하게 되었는가? 아프리카 저개발 문제는 근본적으로 대내적 원

인과 대외적 원인의 상호적인 결합으로 분석될 수 있다. 우선, 아프리카의 저개발의 대내적 원인은 국가 발전 역량의 부족, 정치 불안정과 세계화에 취약한 산업 구조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부족한 발전 역량은 사하라 이남 지역의 저발전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속가능한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그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역량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저발전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경제적, 정치적 발전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현실은 근본적으로 식민지 지배와 노예 제도 등 유럽에 의한 지속적인 착취와 배제주의의 영향으로 분석된다.(Sen, 1999: 3)²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낮은 거버넌스 수준 또한 아프리카 지역이 저발전 하도록 영향을 준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미흡한 거버넌스 능력은 국가가 환경오염, 노동 문제 등 세계화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공공재나 복지 제공 등에 대한 국가의 능력 부족으로 발생한 고비용-저수익 경제 구조는 국내외 투자를 저해하고,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문제를 유발한다.(Ndikumana, 2015: 7-8) 아프리카 국가들의 거버넌스 수준은 또한 안보 문제나 테러 등 국가의 위기관리 능력에 영향을 준다. 사하라 이남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성은 해외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 지역을 선호하도록 했고, 그 결과 해당 지역은 해외 직접 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를 가장 적게 유치하는 비서구 지역이 되었다.²¹⁾(Bado et al., 2015: 182; Rimmer, 1995: 295-313)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경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은 민주주의, 반부패 등 정치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이상환, 2013: 305-306)

20) 이들 또한 사하라 이남 국가들의 부족한 발전 역량이 세계화 속에서 이들 국가들의 저 발전을 유발했다는 시각을 공유한다.(Ibrahim, 2013: 87-91; Fosu et al., 2007: 1-19; Kai et al., 2009: 5-7)

21) 2018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FDI 총액은 240억 달러로 이는 가장 많은 FDI를 받은 라틴 아메리카 지역(1180억)의 1/5 수준이다.(World Bank, 2020)

다음으로 사하라 이남 국가들의 낮은 산업화 수준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 발전 방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로 1차 산업 생산을 담당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수출보다 수입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만성적인 무역 적자와 외채 문제²²⁾에 직면했다.(Evbuomwan, 2007: 41-43) 이들 국가들이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의 전환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점적으로 인적·물적 자본을 확대해야 한다. 아프리카는 낮은 임금 면에서는 다른 아시아 지역과 마찬가지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도로 등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에 제조업 부문에서는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건강이나 교육 등 특정 분야에 대한 투자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후순위로 고려된다.(Julien, 2004: 24-28)²³⁾

아프리카 저개발의 대외적 원인으로는 국제 무역에서의 비교 열위, 높은 대외 의존성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편향성 등이 제시될 수 있다. 우선, 1차 산업에 특화된 수출 구조를 가진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제 무역에서 비교 열위를 갖는다. 경제 발전을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은 천연 자원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산업 구조 전환 및 경제 다각화를 달성해야 한다. 그러나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적·물적 자본 등 현실적인 경제 발전 역량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Ndikumana, 2015: 1-2)²⁴⁾ 고부가가치 첨단 기술은 대부분 선진국의 것이며,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산업 기반이 있는 중국 등지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대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계속 1차 산업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차원에서 세계화는 아프리카의 천연자원에 대한 의존성과 선진국 종속성을 강화한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된다.(Mule, 2001: 71-72)

22) 2012년 IMF와 세계은행에 의해 시행된 채무과다 최빈국(The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 이니셔티브에서 채무과다 최빈국으로 규정된 36개 국가들 중 30개 국가가 아프리카 국가였다.

23) 이들 또한 아프리카의 낮은 산업화 수준, 미비한 인프라와 저발전 문제에 대해 비슷한 견해를 보인다.(Oyelaran-Oyeyinka, 2004: 7-8; IAG, 2018)

24) 아프리카 국가들의 약한 산업화 기반은 국가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들이 ICT 등 지식 기반 경제를 준비하는 것을 또한 어렵게 한다.(Le Billon, 2005: 1-4; Bell, 1984: 187-190; Oyelaran-Oyeyinka et al., 1996: 17-21)

아프리카 현지 기업들이 성장할 수 없는 또 다른 원인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의 선진국 편향성과 불공정 무역에 대한 방임 등을 언급할 수 있다. 국가들 간 무역을 규제하는 세계은행, IMF와 WTO 등의 글로벌 거버넌스는 세계화 과정에서 필수적이다. 그러나 규칙 설정과 절차에서 이들은 매우 배타적이고 강력한 배제성을 갖기 때문에, 개발 도상 국가들은 불공정한 무역으로 인한 손해나 주권 침해 등을 경험한다. 불공정한 무역으로 인해 개발도상국의 산업화는 더욱 지연될 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대외 의존성은 심화된다.(Bado et al., 2015: 180-187)²⁵⁾ 국제기구들은 또한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나 환경오염 등을 징계하지 않고 방관한다. 자본과 규모 면에서 아프리카 민간 기업에 비해 거대한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은 종종 아프리카 각국 엘리트들 결탁한다. 이러한 국가들은 독과점이나 환경오염 등 자국 내에서 발생한 다국적 기업의 횡포를 제재하지 않고 방관하기도 한다.(Ndikumana, 2015: 2)

〈표 8〉 아프리카 정치경제 문제의 대내외적 해결 방안

대내적 해결 방안	대외적 해결 방안
<u>국내 거버넌스 개선</u> 부패 문제, 정치적·경제적 부의 재분배	<u>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치경제 파트너십 확대</u> 아프리카 연합(AU) 등 정치경제 연합체 조직의 필요성
<u>물적, 인적 자본의 축적</u> 국가 주도의 R&D, 산업 구조 변화와 인프라 건설, ICT에 대한 투자, 고등 교육 확대	
<u>자국 산업 보호</u> 자국 기업과 산업 종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25) 이들 또한 서양 편향성을 지닌 글로벌 거버넌스의 방임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치적, 경제적 저발전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주장하는 바도와 유사한 관점을 공유한다.(Bayart et al., 2010: 142-149; Oyelaran-Oyeyinka, 2004: 11-39)

세계화 속에서 사하라 이남 국가들이 경제 발전하기 위해 각국은 전술한 국내외 정치·경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 아프리카 각국의 거버넌스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²⁶⁾ 아프리카 지역이 저발전한 원인은 무능하고 비민주적인 정부, 부패한 관료주의, 소수의 정치적·경제적 권력 독점과 양극화 등이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아프리카 지역은 원조를 가장 많이 받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저발전 했다. 정치적 비민주성으로 인한 시민 사회의 부재 또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거버넌스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Bado et al., 2015: 177-178)²⁷⁾

경제 성장을 위하여 산업 구조 업그레이드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은 인프라 구축과 제도, 교육과 산업 등 모든 수준에서 인적 자본 축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하라 이남 지역은 금융, 인프라 등 물적 자원과 기술 전문가 등 인적 자원의 부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산업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인 연구 개발 기관(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ions, RDI)과 연계 시설(bridging facilities) 등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성장하기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은 물적·인적 자본을 축적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 중요해진 ICT 등 현대 산업은 기술 중심 조직(technostructure)이 특징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발전 사례를 통해, 산업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급 인적 자본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Oyelaran-Oyeyinka et al., 1996: 1081-1085; 2004: 3-18)²⁸⁾

26)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치적·경제적 저발전 문제는 근본적으로 유럽에 의한 식민 통치 역사에 기인한다. 독립 이후에도 식민지 구조는 식민지 유산으로 남아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Ake 1978: 84, 1981: ; Mamdani, 1996: 3-4).

27) 이들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거버넌스 문제가 경제적 저발전이나 정치적 문제를 유발한다는 바도의 시각을 공유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유럽 국가들에 의한 식민지 통치가 현재 아프리카의 정치적, 경제적 문제를 유발했다고 분석했다.(Mundy et al., 2010: 495-496; Kortens, 1995: 142-227; Yahie, 2000: 1-3; 리드, 2013: 583-584)

28) 이들 또한 세계화, 산업화의 성공을 위해 인적·물적 자본이 중요한 요소라고 분석했다. 교육 수준과 세계화의 연관성은 코트디부아르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코트디부아르에서 1년의 추가 학교 교육은 남성의 수입을 12.4% 증가시키는 것이 드러났다.(Wood, 199: 213-246;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차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연합이 필요하다. 세계화의 필수적인 부분인 지역주의는 상호 의존성과 파트너십의 관점에서 도출되었고,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을 해결하는데 추가적인 역량을 제공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 AU)은 아프리카 지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 통합된 아프리카의 국제 체제는 회원국들에게 더 나은 거래를 제공하고, 각국이 거버넌스를 향상할 수 있도록 한다.²⁹⁾(Omotola, 2010: 105-110) AU는 2013년부터 정치, 경제, 사회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목표를 가지고 아젠다 2063(Agenda 2063)을 표명했다.¹⁶⁾ 이뿐만 아니라 AU는 아프리카 각국이 세계화에 따른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프리카 연합은 아젠다 2063을 통해 아프리카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각국의 운송, 에너지, ICT 관련 인프라 구축, 무역 장벽 감소와 지역 가치 사슬 발전 등을 통해 아프리카의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회원국 간 무비자 제도 등을 도입하여 노동, 상품, 자본의 이동을 용이하게 한다. 이외에도 아프리카 연합은 건강, 교육과 성 평등 등 아프리카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과 관련된 집단 거버넌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협력하고 있다.(Evbuomwan, 2007: 40-41)

Milanovic, 2005: 2; Yahie, 2000: 6)

29) 세계화 속 지역화 현상은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유럽 연합(European Union, EU), 북미 자유협정(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sociation of South-Asian Nations, ASEAN), 아시아 태평양 활동 회의(Asia Pacific Activities Conference, APAC)과 동남아프리카 공동 시장(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COMESA)과 서아프리카 제국 경제 공동체(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ECOWAS)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단체들은 회원국들의 경제, 정치, 사회 등 다양한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Evbuomwan, 2007: 43-44)

3. 아프리카 지역의 저발전 요인

동아시아의 발전과 라틴 아메리카의 저발전 분석에서 알 수 있듯, 비서구 지역의 발전 담론과 관련하여 비서구 지역의 특수성을 배제할 수 없다. 탈냉전, 세계화 그리고 해외 원조나 해외 투자 등 대외적 정치·경제 요인 또한 비서구 지역의 발전에 영향을 준다. 아프리카 지역의 정치·경제 저발전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만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저 발전을 유발하는 원인은 크게 정치 불안정, 탈냉전과 세계화 등 대외적 정치경제 상황 변화, 해외 원조, 천연 자원에 대한 의존성과 미약한 지식 기반 경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표 9〉 아프리카 지역의 저발전 요인 유형, 원인과 해결책

저발전 요인 유형	저발전의 원인	해결책
정치 불안정	식민지 정치경제 구조의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족, 종교 갈등 • 정치 엘리트의 부르주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의 재분배 • 민주적인 정치 체제
탈냉전, 세계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글로벌 가치 사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교육 수준과 기술(미약한 인적 자본) • 국가 간 부의 격차 • 인프라 부족 • 국가 내 부의 격차 2) 글로벌 거버넌스의 편향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적 자본 축적 교육 확대 2) 물질 자본 축적 도로, ICT 등의 인프라 건설
해외 원조에 대한 의존성	낮은 국내 거버넌스의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 • 높은 국가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거버넌스의 질 향상 • 부패 해결을 위한 국가의 노력 • 국가 부채 탕감
천연 자원에 대한 의존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화에 대한 국가의 의지 부족 2) 자연 이권을 둘러싼 국내외 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거버넌스의 질 향상 • 경제 다각화 및 자원에 대한 의존 완화
지식 기반 경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외 기술 의존성 2) 미흡한 인적 자본 3) ICT 등 디지털 관련 인프라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를 통한 토착 기술 개발 • 역엔지니어링을 통한 대외 기술 의존성 완화 • 교육 확대 및 인적 자본 축적 • ICT 등의 인프라 확대

먼저 종족, 천연 자원, 종교 등으로 촉발되는 테러나 내전과 같은 정치 불안정은 아프리카 지역의 정치경제 저 발전을 유발하는 원인이다. 이러한 정치 불안정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서양에 의한 식민지 통치(분리 차별 정책)이 언급된다. 전통적으로 개별 종족을 중심으로 정치경제적 관계를 맺었던 아프리카 여러 부족들은 유럽 국가들의 이해관계와 차별 정책 의해 교란되었다. 유럽 국가들에 의해 부여된 식민지 정치·경제 구조는 독립 이후에도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계승되어 지속적으로 종족적, 종교적 갈등을 야기했다.(Blanton et al., 2001: 474-489)³⁰⁾ 잠재적으로 갈등을 동반하는 사회는 대외적 상황 변화에 따라 정치 불안정 문제를 촉발할 수 있다. 탈냉전기 들어 역지력이 약화된 이데올로기 요소로 인하여 갈등이 내재된 몇 비서구 국가들에서 내전이 발생했다.(Blagojevic, 2009: 8-18; Basuchoudhary et al, 2010: 65-67)

종족 분쟁, 테러나 종교 갈등과 같은 정치 불안정은 주로 정치적·사회적 배제, 인간 삶의 질과 소득 불평등과 관련이 있다. 경제적 양극화와 정치적, 사회적 배제가 심한 국가일수록 신뢰와 사회적 응집력이 낮으며, 정치 폭력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UNDP, 2019; 권유경, 2014: 182-187) 이는 국민 삶의 질 개선과 소득 분배 정책 등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치 불안정 발생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많은 아프리카의 국가들에서 소수 계층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특권 독점 현상은 여전히 심각하다. 이 정치 행위자들은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 체제를 표방하지만, 자신의 특권을 이용하여 국내적으로 타집단에 대한 배제주의 정책을 실시한다. 따라서 아프리카 지역의 정치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각국의 민주주의 및 거버넌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수의 권력 독점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장훈태, 2019: 204-207)³¹⁾

30) 이들도 식민지 역사가 현재의 아프리카 여러 정치적, 경제적 문제들을 유발했다는 시각을 공유하며, 그 근거로 서구의 간접 통치 방식, 종교적 차별 정책, 가치 자원에 대한 수탈과 플랜테이션 농작 방식 등을 언급한다.(이정록, 송예나, 2019: 34-36, 303-350; 리드, 2013: 591-596; 장훈태, 2019: 199-204; 송영복, 2005-a: 290-300; 2005-b: 56-63)

다음으로 아프리카 지역의 정치경제 저발전에 영향을 준 것은 탈냉전과 세계화 등 대외적인 정치적, 경제적 변화이다. 탈냉전 이후, 서구 자유 시장주의 국가들은 공산주의의 재확산을 막고 시장경제 확대를 위해 신자유주의 질서를 가지는 ‘초국가적 역사적 블록’(Transnational historic bloc)을 형성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IMF, World Bank, WTO 등의 국제기구를 만들었고, 다국적 기업, 기업 관련 전문가와 학자 등을 이에 참여시켰다. 이 범세계적 네트워크는 세계 무역을 관장하며 전 세계 국가들이 시장을 개방하고, 세계화에 참여하도록 했다.(Berger, 1994: 267-270)³²⁾ 서구 국가들은 개방된 경제와 국제 무역과 법치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화를 통하여 빈곤과 소득 불평등이 감소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개방된 무역 체제에서 저숙련 노동력을 가진 국가들은 비교 우위에 따라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서 이점을 갖기 때문에, 세계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과 경제 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또한 경제적 자유가 궁극적으로 정치적 자유와 민주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최원석, 2015: 191-193; Giddens, 1994: 110-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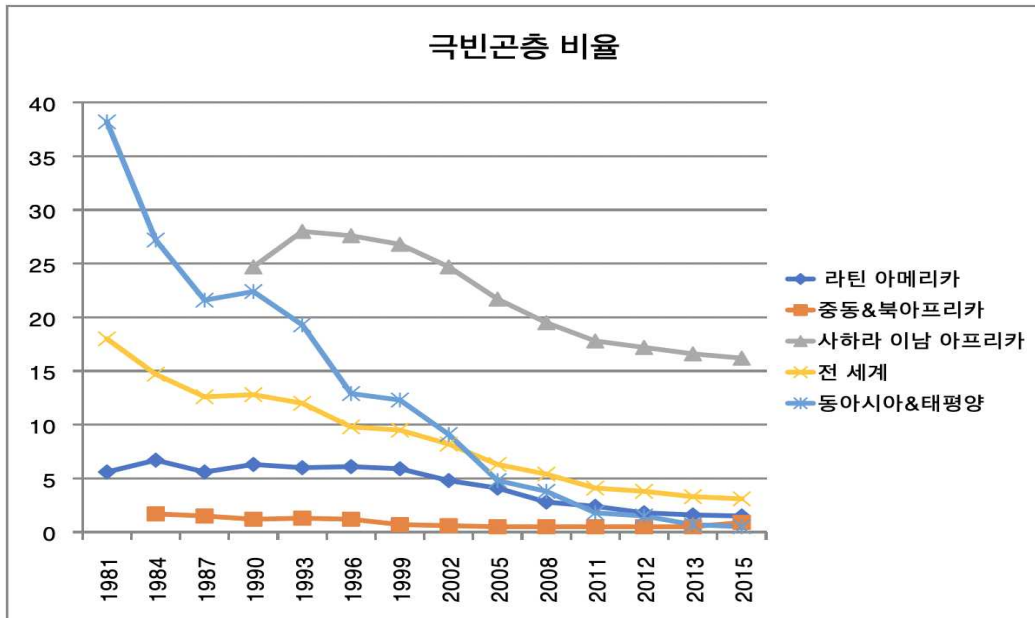
세계은행에 따르면, 비록 빈곤층의 비율이 가장 낮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때때로 빈곤층의 비율이 증가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탈냉전기 이후에 전 지역에서 극빈층³³⁾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이 중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급격한 빈곤층의 감소를 관찰할

31) 이들 또한 아프리카 지역의 정치 불안정 문제의 원인에 대해 비슷한 시각을 공유한다. 이들은 다종족 국가일수록 민주주의의 수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민주적 제도가 소수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면 오히려 정치 불안정의 기제로 작동하기 때문이다.(Basuchoudhary et al., 2010: 69-84; Bayart et al., 2010: 142-149)

32) 길과 김진영 또한 탈냉전 이후 시작된 탈냉전에 대해 베르거와 비슷하게 설명한다.(Gill, 1991: 46-56; 김진영, 2016: 225-229)

33) 세계은행(World Bank)의 Poverty headcount ratio at \$ 1.90 a day(2011 PPP) 지수 참고, 세계은행은 하루 수입이 \$ 1.25 이하인 경우 극빈층으로 분류했는데, 이러한 기준은 2015년 10월 이후 \$ 1.90으로 조정 되었다. 2019년 유엔개발계획(UNDP)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약 6억 명의 인구가 하루 \$ 1.90 이하의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다.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서구 국가들이 발전의 낮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가
 난하며 세계화 체제에 편입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한
 세계화론자들의 논지에 부합하는 듯하다.



〈그림 5〉 탈냉전 전후 극빈곤층(하루 \$ 1.90 이하로 살아가는 인구) 비율 변화
 (출처: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아프리카 지역은 여러 정치적, 경제적
 지표에서 하위권을 차지하는 등 90년대 이후 세계화의 흐름에 잘 적응하지 못
 했다. 세계화가 국가 간 소득 불평등 차이를 줄이는 것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
 지만, 세계화가 비서구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줬다는 주장은
 단편적 분석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우선, 세계화의 심화에 따라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³⁴⁾은 점점 강화되고 있지만, 선진국, 다국적 기업과

34) 선진국의 제조 기업이 마케팅과 디자인 등을 담당하고, 생산 비용 절감과 수익성 향상을 위해
 제조를 다른 개발 도상 국가에 하청하는 생산 방식을 의미한다.

개발도상국이 글로벌 가치 사슬 생산 방식에서 얻는 부가가치는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각국의 교육, 기술, 부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세계화로 인한 이득은 주로 선진국과 다국적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달성 능력 등 각 신흥 발전 국가들의 발전 역량에 따라 얻는 이득 또한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Gereffi, 2011: 38-56; 2014: 9-13)³⁵⁾ 심지어 애플 등의 다국적 기업들은 조세 회피 목적으로 글로벌 가치 사슬 방식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 기업들은 합법적으로 다국적 제조업 계열사를 조세 회피처로 이용하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을 현금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여 자본과 부를 금융화 하고 있다.(Bryan et al., 2017: 66-72)

세계화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빈부격차뿐만 아니라, 국가 내 양극화 또한 유발했다.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BIS)과 2019년 유엔개발계획에 따르면, 세계화로 인하여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무역 개방과 경제 디지털화 등 세계화와 관련된 경제 정책이 부분적인 원인으로 언급되었다. 한편, 각 개인의 교육과 기술 수준이나 소유 재산 등의 차이는 또한 국민들 사이의 경제력 차이를 유발했다. ‘위대한 개츠비 곡선(The Great Gatsby Curves)’³⁶⁾에 따르면, 이러한 국민들 간의 경제적 양극화는 다음 세대에 계승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경제력과 삶의 질 등 다차원적 국내 양극화 문제가 고착화 될 수 있다.(Domanski et al., 2016: 46-60; UNDP Report, 2019: 10-11)

35) 제레피는 특히 아이폰 생산 과정을 예로 들어, 글로벌 가치 사슬과 세계화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선진국의 제조업체는 다수 중국 등 비서구 신흥 발전 국가들로 생산 기지를 이전했다. 애플사의 아이폰의 경우, 여러 국가에서 부품을 수입하여 중국에서 제조된다. 제조 이후 중국에서 수출될 때의 가격은 194달러인데, 이 중 오직 6.5달러만이 부가가치로서 중국에게 돌아간다. 이는 다시 말해 중국 등 신흥 제조 국가들의 제조업 생산량이 늘어나게 된다 하더라도, 상품 판매로 발생한 실질적인 이익은 다국적 기업과 이 기업들의 본사가 위치한 선진국들이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Gereffi, 2014: 12-15)

36) 소득 불평등이 높은 국가일수록 세대 간 계층 이동 가능성이 낮음을 나타내는 그래프. 부모 세대의 소득과 자녀 세대 사이의 연관성이 높으며, 부모의 경제적 소득은 교육, 건강, 정치사회적 기회 등 인간 발전 불평등과 연관이 있다. 경제, 사회, 정치와 정치권력의 네 가지 요인이 인간 개발 결정 요인과 상호작용한다.

세계화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국제 제도 및 기관 등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립성 또한 비판의 대상이다. 즉,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국제기관들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불평등한 무역이나 소수(주로 선진국과 다국적 기업)의 무역 이윤 독점 등을 제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선진국 편향성은 국제기구의 주요 제약 조건 중 자금 조달 관련 제약과 큰 연관이 있다. 보장된 수입이 없어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큰 환경에서 운영되는 대부분의 국제기구는 국가들의 자발적인 기금에 의존한다. 강대국은 개발도상국가나 신흥발전국가에 비해 이러한 국제기구들을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또한 국제기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선진국들과 국제기구가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의 수동성과 강대국 편향성과 관련하여 비판이 제기된다.(Bado, 2015: 180-184; Hall et al., 2018: 11-12)

해외 원조와 해외 직접 투자는 개발도상국가의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대외 요인으로 언급된다. 그러나 해외 원조의 효과성, 해외 원조와 해외 직접 투자 사이의 관계성 등과 관련한 입장은 수렴되지 않았다. 먼저 해외 원조에 대하여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이들은 거버넌스의 질이 낮은 국가일수록 해외 원조가 원래의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부패나 공공재 제공 능력 저하 등 거버넌스의 수준이 낮은 국가들의 경우, 자국이 당면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보다 해외 원조에 의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³⁷⁾ 또한 수혜한 해외 원조 자금을 국가가 경제 발전 재원으로 쓰기 보다는 뇌물이나 비자금 등으로 오·남용할 가능성도 있다.(Mauro, 1995: 700-705; Busse et al., 2009: 76) 이러한 이유로 해외 원조 반대론자는 국가의 재정 문제가 심각한 국가들의 경우 해외 원조 보다 부채 탕감이나 부채 축소가 오히려 더 성공적인 정책 도구라고 주장한다.

반면 해외 원조 찬성론자들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해외 원조

37) 이와 관련하여 세네갈의 예시를 언급할 수 있다. 세네갈 정부는 수혜한 해외 원조의 41%와 국가 재정의 20%를 국가 부채 조달에 이용하고 있다.(Ouattara, 2006: 1115-1116)

의 긍정적인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말한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해외 원조의 부패 억제 및 감소와 경제 성장 효과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Mohamed et al., 2015: 47-61)³⁸⁾ 이들은 또한 좋은 재정 상태와 높은 거버넌스 수준을 가진 국가일수록 해외 원조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며, 수혜국의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원조의 오·남용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양자 해외 원조 보다 정치·경제 거버넌스의 향상³⁹⁾을 전제로 해외 원조를 제공하는 다자 원조 기관(multilateral aid institution)을 통한 원조의 효율성이 더 높다.(Okada et al., 2012: 240-243; Burnside et al., 2000: 864)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다른 제도인 해외 직접 투자와 해외 원조 사이의 상관성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양분된다. 해외 원조와 해외 직접 투자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는 입장에 따르면, 해외 원조가 해외 직접 투자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조치(계약 위반, 법률 및 규정의 변경, 외국인 소유 자산의 국유화 등)는 해외 직접 투자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비민주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하라 이남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다른 비서구 개발도상국들에 비해 해외 직접 투자를 얻을 기회가 적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의 거버넌스 개선을 원조의 조건으로 자주 요구하는 해외 원조는 이들 국가들에서 이러한 직접 투자 방해 요인들을 감소시킬 수 있다.(UNCED, 2002; Asiedu et al., 2009: 268-275)

반면 해외 투자와 해외 원조의 관계를 가변적으로 보는 입장은 해외 원조의 내용에 따라 그 관계가 변화한다고 말한다. 솔로우 경제 성장 모델(Solow Growth Model)⁴⁰⁾에 따르면, 개발 도상 국가가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1

38) 존스, 쿼티와 맥길브레이 또한 해외 원조가 수혜국의 장기적으로 정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공유한다.(Burnside et al., 2000: 848; Jones et al., 2016: 1; Quartey, 2005: 1080-1089; McGillivray, 2005: 1004-1005)

39) 국가 거버넌스의 수준은 개발도상국의 해외 원조나 해외 직접 투자 유치에 영향을 준다. 몇몇 개도국들은 정치 불안정을 경험하지만, 높은 수준의 거버넌스 덕분에 다른 국가들 보다 더 많은 해외 투자나 원조 등을 받고 있다.(Efobi et al., 2018: 17-19; Kasuga, 2007: 222-226)

40) 자본축적의 차이가 국가 간 생활수준의 격차를 초래한다는 경제 이론. 국가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높은 저축률과 낮은 인구 증가율 등에 따라 1인당 물적 자본을 많이 축적해야

인당 물적 자본(physical capital)의 축적을 늘려야 한다. 해외 원조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나 인적 자본 등 물적 자본을 보완하는 투입물(교육, 보건 등 사회 기반 시설과 ICT, 교통망 등의 경제 기반 시설)에 투자된 원조는 해외 자본을 끌어들인다. 반면, 물적 자본에 직접 투자된 원조(각종 산업의 직접 생산 부문에 대한 원조)는 민간(사적) 해외 투자를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해외 원조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보완재에 대한 원조를 늘려야 한다.(Selaya et al., 2008: 2156-2164; Kimura et al., 2010: 482-483)

해외 원조와 해외 직접 투자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관련하여 수혜국의 정치·경제 거버넌스 수준 향상, 정치적 안정과 인적·물적 인프라 수준 등이 필수적이다. 매년 ODA를 가장 많이 수여하는 사하람 이남 아프리카의 원조의 효과는 미비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공여국의 미흡성, 수혜국의 정치적·경제적 상황과 수혜국의 흡수 역량(absorptive capacities) 부족 등에 부분적으로 기인한다. 원조 수혜국의 경제성과는 공여국이 원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에 따라 특정 국가들에 원조가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식민지 통치 등 문화적, 역사적 관계성 등에 따라 해외 원조가 이루어지기도 한다.(한유진, 2015: 197-201; Alesina et al., 2002: 1131-1136)

아프리카 경제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인 천연 자원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발전, 혹은 저발전 하도록 했다. 탈냉전 이후 무장 충돌과 내전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아프리카였는데, 이러한 분쟁들의 주된 원인은 천연 자원이었다. 강대국의 관심과 지원을 받던 냉전 시기와 달리, 탈냉전 이후 자구해야 했던 아프리카 국가들의 천연 자원 수출의존성은 더욱 심해졌다. 정부 반군 또한 자신들의 수입원으로 천연 자원을 선택했고, 이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에서 천연 자원의 이권과 관련된 무력 분쟁이 급증했다.(서상현, 2008: 117-118)

한다. 반대로 저축률이 낮고 인구 증가율이 높아 1인당 물적 자본 축적률이 적어지면 그 국가는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힘들다.

자원 중심 개발 모델에 따르면, 자원 빈국은 경쟁력 있는 산업화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자원 부국은 저발전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Auty et al., 2000; 2-3) 즉, 천연 자원의 보유는 경제 발전에 대한 양면성을 가지며, 이를 어떻게 활용하여 경제 발전(혹은 저발전)하는 가는 국가에게 달린 문제이다. 자원과 경제 성장과 관련하여, 천연 자원 보유국에서 폭력적인 분리운동이 발생할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콜리에-호플러 모델(the Collier-Hoeffler Model)에 따르면, 이러한 정치 불안정은 국가가 빈곤할수록 높아지며, 천연 자원 의존도와 국내 분쟁의 가능성은 비례한다. 강력하고 민주적이며 효과적인 정부는 자원 의존성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상쇄할 수 있다. 그러나 자원 의존성이 국가 거버넌스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국가의 갈등 해결 능력의 약화되어 국내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시 말해, 자원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익을 국가가 어떻게 분배하고 활용하느냐와 국가의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수준은 국가의 발전과 저발전이라는 각기 다른 결과를 야기한다.(Collier et al., 2002: 13-23)⁴¹⁾

천연 자원을 통한 경제 발전을 위해, 자원 보유국은 정치적 개혁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변해야 한다. 천연 자원에 대한 국가의 의존도를 크게 낮추는 방법으로 경제 구조 변화, 해외 원조와 국내 경제 정책 변화 등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우선 경제 다각화를 통해, 천연 자원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해외 원조 기관과 선진국은 자원 빈국과 협업하여, 이들 국가들이 자원에 대한 의존성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원 빈곤국들은 스스로 국내 경제 정책을 변화시켜서, 국내 금융 투명성을 향상하고 부의 재분배 등 자원으로 얻은 이익이 경제 성장을 위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oss, 2003: 26-27; Bannon et al., 2003: 8-13)

자원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 의지, 정치·경제 정책과 거버넌스 수준의 중

41) 이들 또한 가치 자원과 경제 발전의 상관성에 대하여 콜리에와 호플러와 유사한 관점을 공유한다.(Ross, 2003: 19-26; Bannon et al., 2003: 2-7; 서상현, 2008: 113-119)

요성은 시에라리온(Sierra Leone)과 보츠와나(Botswana)의 사례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두 국가는 다이아몬드가 주요 수출 품목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경제 성장 조건을 가진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시에라리온은 자원 이익을 정치적으로 이용(부패, 뇌물수수와 독재 정권 유지 등)했고, 자원 이익을 둘러싼 내전을 경험한 뒤에 최빈곤국으로 전락했다. 반면, 보츠와나는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다이아몬드 산업을 경제 근간의 주축으로 삼아 경제적으로 안정된 발전을 달성했다.(Encyclopaedia Britannica, 2020; Diplomatie France, 2020)

〈표 10〉 시에라리온과 보츠와나의 정치경제 발전 비교

	시에라리온	보츠와나
민주주의 지수(DI) (2019)	혼합형 체제(102위/167국)	결함 있는 민주주의(29위/167국)
부패 인식 지수(CPI) (2019)	119위/180국	34위/180국
내전	1991~2002, 혁명연합전선(RUF)	-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전체 GDP의 59% 차지) • 국민의 절반 이상이 빈곤층(2018년 시에라리온 통합 가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이아몬드 채굴과 귀금속 산업 발달 • 경제 다각화 부족으로 높은 양극화와 실업률 발생
개선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거버넌스의 질 개선 필요 • 인적 자본 축적 • 경제 다각화 	경제 다각화 필요(다이아몬드 수출에 대한 높은 의존성)

시에라리온과 보츠와나의 사례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통용되는 자원의 저주(The Resource Curse)가 국가의 발전 의지, 경제 정책, 정치 수준 등으로 역

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자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대외적 상황 변화에 취약한 경제 구조와 그에 따른 실업률 등의 문제를 내포한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개발 도상 국가들의 산업 구조를 다각화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식 경제(Knowledge Economy, KE)를 대비해야 한다. 세계화 이후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지식 기반 경제’는 지식을 활용한 혁신을 통해 경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식, 신기술 등의 무형 자본이 지식 기반 산업의 발전 요소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고급 인력 양성, 신기술과 혁신에 대한 투자(R&D) 등이 필수적이다.(Asongu, 2015: 5)⁴²⁾ 인적 자본을 위한 투자와 교육 제공, 인프라 건설 제공 능력은 국가가 민간보다 더 크다. 후발 산업국인 개발 도상국가들의 기술은 대부분 외국 기술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하여, 이들 국가들은 기술에 대한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인적 자본을 육성하여 기술 자립성⁴³⁾을 높여야 한다.(Suh et al., 2007: 2-26)

탈냉전·세계화 이후, 국제 정치경제 상황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지식 경제는 글로벌 가치 사슬과 금융 디지털화 등 최근 전 세계적 정치·경제 상황 변화와 더불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물질·인적 자본과 정치적, 경제적 현실을 고려해보았을 때,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들 국가들이 혁신과 자본 축적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장려된다.(Tchamyou, 2014: 3-4)

42) 세계화의 흐름 속 지식 기반 경제의 중요성에 대하여 김영수, 김현민과 박윤경 또한 비슷한 관점을 공유한다.(김영수, 2003: 1-22; 김현민, 박윤경, 2015: 414-416)

43) 기술 자립성은 토종 R&D 플랫폼 개발을 통한 수입 기술을 현지화,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맞는 인적 자본 축적, 그리고 역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을 통한 전환(기술 모방국에서 기술 혁신국으로) 등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Asongu, 2015:37-38)

IV. 르완다의 경제 발전

1. 역사적 배경

지형적 특징과 기후 덕분에 ‘천개의 언덕’ 혹은 ‘아프리카의 스위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르완다는 1994년의 제노사이드와 커피 등이 한국에 잘 알려져 있다. 르완다의 역사는 약 1만여년 전 피그미(Pygmy)족의 이주로 부터 시작되었다. 약 1218만명(2018년 기준)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르완다는 크게 트와(Twa)족, 후투(Hutu)족과 투치(Tutsi)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종족 국가이다. 가장 소수이지만 르완다에서 가장 오래 거주한 트와족은 피그미족의 후손이며, 전통적으로 수렵 생활을 했다. 르완다에 다음으로 오래 거주한 후투족은 중앙아프리카 지역에서 기원했으며 주로 농경 생활을 했다. 르완다에 가장 늦게 정착한 투치족은 15세기와 16세기 사이에 르완다에서 살기 시작했고, 가축을 기르며 유목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Karazsia, 2015: 236)

르완다의 신화에 따르면, 세 부족은 동일한 조상(카니아르완다, Kanyarwanda) 가진다. 전통 사회에서 이들은 공통의 문화와 언어(키니아르완다, Kinyarwanda)를 가졌으며, 바냐르완다(Banyarwanda)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인식했다. 부족 개념을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종종 이용했지만, 르완다의 전통 사회에서 종족적 구분은 사실 모호했다. 오히려 문화 공동체(무냐르완다, Munyarwanda)에 따른 구분 경향이 강했고, 우부하케(Ubuhake)와 우부레트와(Uburetwa) 등의 농업 제도를 바탕으로 여러 인종 간 유동적인 관계를 맺었다. 일반적으로 르완다의 전통 사회는 귀족(바투치, Batutsi)과 평민(바후투, Bahutu)으로 구성된 계급 사회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왕은 투치족

에서만 선발되었지만, 지방의 실질적인 권력자인 추장에는 종종 후투족이 선출기도 했다.(장용규, 2010: 154-156)⁴⁴⁾

부족중심적인 전통 사회를 가졌던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달리, 르완다는 유럽에 의해 지배되기 이전부터 왕국(The Kingdom of Rwanda)으로 존재했다. 15세기와 16세기 사이, 투치족의 왕(므와미, mwami) 루간주 1세(Ruganzu I)에 의해 키갈리(Kigali, 현재 르완다의 수도) 인근 지역에 르완다 왕국이 세워졌다. 17세기에는 루간주 2세의 명령으로 후투족을 흡수하며 국가의 영토를 확장했고, 19세기 후반에는 왕 키제리 4세 르와부기리(Kigeri IV Rwabugiri)가 왕국의 영토를 더욱 넓혔다. 르완다 왕국은 1900년대까지 중앙 집중적 군사 구조를 통해 통일된 정치체를 유지할 수 있었다.(Encyclopaedia Britannica, 2020)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르완다 왕국은 19세기 후반 독일과 벨기에의 식민지를 거치며 교란되었다. 서구 열강에 의한 르완다 식민 지배는 국가의 범위, 지배의 형태와 정치적 경쟁의 본질 등 인종과 관련된 정치적, 경제적 요소들을 모두 바꾸었다. 벨기에 정부는 식민지 통치의 용이성을 위해 르완다를 인종적 요소로 양분했다. 벨기에는 투치족이 다른 민족 보다 더 우등하다고 판단했고, 이들을 엘리트화 하고 르완다 통치 권력을 부여했다. 소수였던 투치족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실권을 독점한 반면, 다수였던 후투족은 2등 시민으로 분류되었고 교육, 정치나 경제적 차원에서 차별받았다. 이러한 ‘이중 식민지배’(dual colonialism) 체제는 르완다가 독립을 준비하던 1950년대 후반까지도 지속되었다.(Newbury, 1998: 11-14)

잠재된 인종 갈등 가능성은 독립 정부 구성 과정에서 폭발했다. 후투족은 투치족의 권력 독점과 벨기에의 차별 대우에 문제제기를 하며 1959년과 1962년 사이 후투족 혁명을 일으켰다. 이를 중재하기 위해 벨기에 정부는 후투족의

44) 르완다의 전통 사회에서 인종적 구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식민시기에 비해 비교적 유동적이었다.(Mamdani, 1996: 52; Shyaka, 2006: 8; 김광수, 2010: 61,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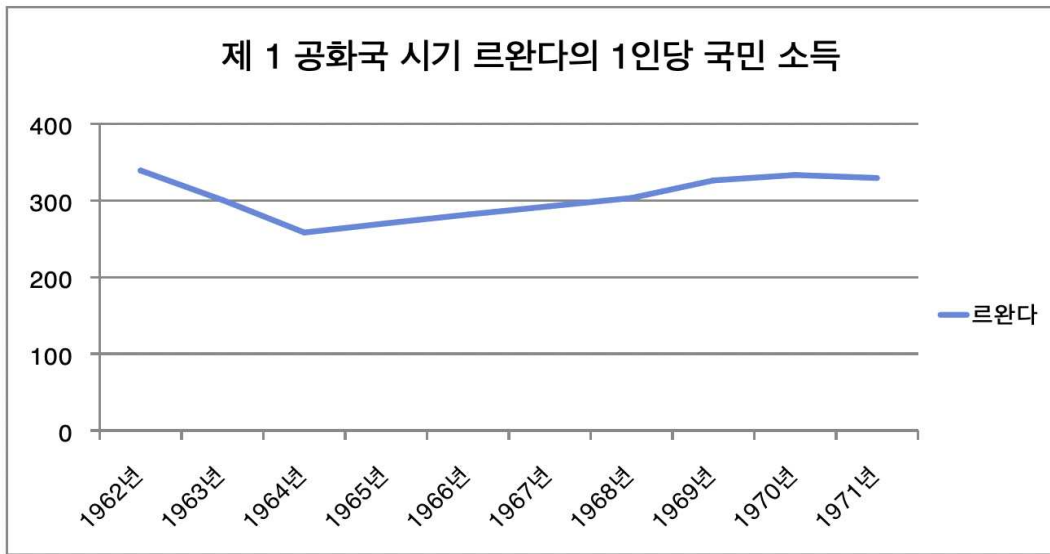
정치 세력화를 인정했고, 그 결과 후투족이 다수로 구성된 르완다군(Rwanda Armed Forces, RAF)이 편성되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한 반발로 투치족은 1960년 선거 불참을 선언했고, 선거는 후투족의 승리(70.4%의 득표율)로 끝나게 되었다. 정치적 권력을 차지하게 된 후투족은 투치족을 탄압했고 많은 투치족이 인접 국가로 쫓겨나거나 난민으로 전락했다.(장용규, 2007: 157-160; Verwimp, 2003: 163)

주변국인 우간다나 브룬디 등으로 피신한 투치족들 중 일부는 군대를 조직하고 스스로를 무장했다. 그 중 우간다로 피신한 일부 투치족은 1980년 국가 통합을 위한 르완다 연맹(Rwandese Alliance for National Unity, RANU)을 결성했다. 르완다 애국 전선(Rwanda Patriotic Front, RPF)은 RANU에 의해 만들어졌다. RPF는 투치족 망명자들을 다시 본국으로 송환하고, 르완다 민주주의의 복구를 목표로 했다. 제 1, 2 공화국 시기, 후투족에 의해 쫓겨난 투치족 난민들뿐만 아니라, 비민주적인 정부를 피해 르완다를 떠난 후투족 또한 지속적으로 이러한 단체들에 유입되었다.(장용규, 2007: 162-164; Encyclopaedia Britannica, 2020)

2. 독립 이후 르완다의 발전 경로

1961년에 출범한 르완다 제 1 공화국은 후투족 혁명을 통해 탄생했고, 이에 따라 지역주의, 정당 파벌주의, 후원주의와 인종차별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르완다는 인종 갈등 문제로 인하여 독립 직후, 테러나 침공 등 여러 번 국내외 정치 불안정 문제에 직면했다. 특히 대통령 카이반다(Kayibanda)는 투치족에 대한 차별과 배제 정책을 조장했고, 투치족 탄압 사건들을 방관했다. 이러한 인종 갈등 사건들은 우간다나 브룬디 등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주변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⁴⁵⁾ 1960년대 초반 독립이 르완다 국민들을 만족시킨 것과 달리, 1960년대 중후반 르완다는 이러한 대내외적 공포와 불화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Karazsia, 2015: 237)⁴⁶⁾



〈그림 6〉 제 1 공화국 시기 르완다의 1인당 국민 소득

(출처: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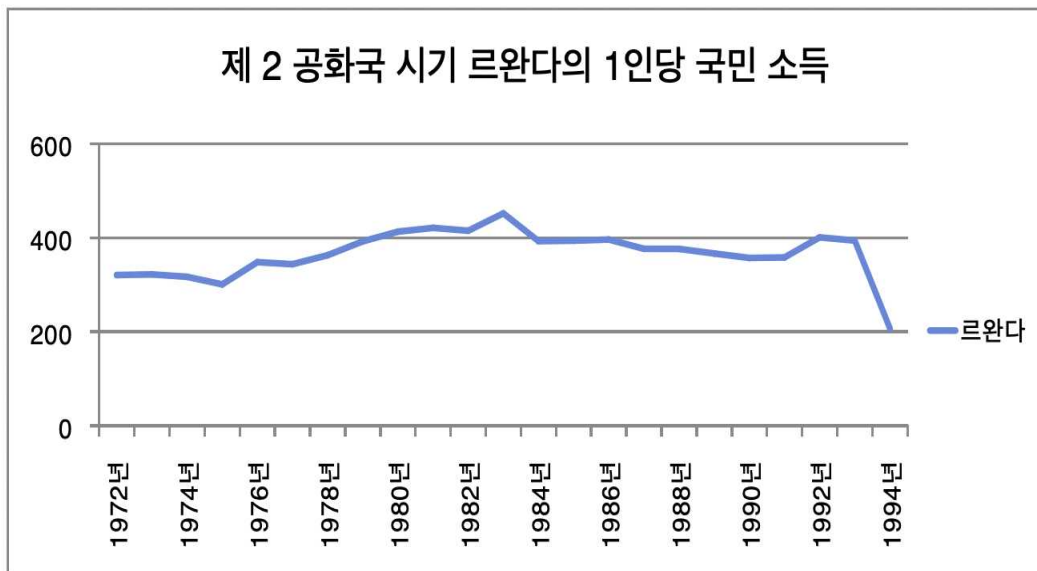
카이반다 대통령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상업 도로 등을 건설하고 유럽 국가들의 기술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내외 정치 불안정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르완다의 주요 수출 품목인 커피는 경제 성장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성은 없었다. 그리고 정치적 불안 요소와 글로벌 가격 변동은 커피 수출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수출입 관세와

45) 1963년에는 인접국 브룬디에 기반을 둔 투치군이 르완다를 침공했고, 브룬디에서 1973년에 발생한 투치군에 의한 후투족 학살의 영향으로 르완다에서도 투치족 학살이 벌어졌다. 또한 이 시기 르완다는 우간다 대통령 이디 아민(Idi Amin)에게 침공 협박을 당하기도 했다.

46) 제 1 공화국 재임 시기 동안 인종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은 무역과 수출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장용규, 2007: 160-161; Childress, 2015: 234)

관련하여 또한 공권력의 부패 문제가 심각해졌고, 이는 다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역량의 저하로 연결되었다. 식민지 통치 당시에는 유럽 국가들에 의한 지원을 받았지만, 독립 이후에는 르완다 스스로 교육이나 보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했다.(Childress, 2015: 230-243) 결론적으로 카이반다 정권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했고, 그 결과 1973년 쿠데타로 인하여 실각하게 된다. 이처럼 국내외 정치 불안정으로 인하여, 제 1 공화국 하의 르완다는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이처럼 정치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쿠데타를 통해 1973년 제 2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었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하바리마나(Habyarimana)는 르완다를 아프리카에서 중요한 국가로 만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경제 성장을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했다. 하바리마나 대통령은 식량 자립을 기반으로 자동차 조립 제조를 통한 경제 발전 방식을 구상했다. 또한 비록 비민주적인 정치를 행하더라도, FDI 유치를 위해 안정적인 국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Karazsia, 2015: 238; Verwimp, 2006: 5-9)



〈그림 7〉 제 2 공화국 시기 르완다의 1인당 국민 소득

(출처: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그러나 하바리마나 정권의 경제 발전 전략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우선, 하바리마나 정부는 경제 정책과 반대되는 행정을 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국의 식량 자립을 불가능하게 했다. 르완다 정부는 식량 자립을 강조하면서도, 비료 지원 우선권 등을 제공하는 등 농민들에게 일반적인 농산물 생산 보다 커피나 차와 같은 수출 작물 재배를 장려했다. 이는 이러한 작물 수출로 얻은 이익이 하바리마나 정부의 수입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점점 더 많은 농민들이 수출 작물을 재배하게 되었고, 르완다의 식량 자립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르완다의 식량 사정은 1989년의 남부 지역 기근과 1988년과 1993년 사이 커피와 차의 국제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더욱 악화되었다.(Verwimp, 2006: 6-9)

다음으로 르완다 정부는 농산물 생산에 대한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을 실시하는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르완다 정부는 농민들에게 농업 생산량을 증가시킬 것을 요구했지만, 이미 가용 가능한 경작지를 최대한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산량을 현재보다 더 늘리는 것은 불가능했다. 르완다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농업 관련 기술 혁신을 도입하지 않았고, 인프라 문제나 질병 문제(가용 노동 인구에 영향을 주는)를 개선하지 않았다. 또한 르완다 정부는 인구 억제를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자국의 식량 자급을 더욱 어렵게 했다. 1980년에 이르러 이미 농업 생산량이 한계에 달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르완다는 높은 출생률⁴⁷⁾을 억제하려는 정책은 시행하지 않았다.(Verwimp, 2006: 8-9, 15-16)

마지막으로 제 2 공화국은 이전 정권과 상반되는 포용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오히려 인종 갈등 가능성을 높였다. 하바리마나 정부는 경제 성장 목표를

47) 1986년까지 르완다의 합계출산율은 8명 대였다.(World Bank Indicator)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투치족을 포용하려는 정책을 실시했다. 이러한 점에서 일반적으로 제 2 공화국은 제 1 공화국 보다 인종 포용적인 정책을 실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후투족과 투치족 간 역사적 화해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⁴⁸⁾에서 이전 정부와 유사하며, 1994년 제노사이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는다.(장용규, 2007: 160-161; Karazsia, 2015: 240-242)

독립 이후 후치 정권들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실패하자 1990년 10월 1일 투치군 RPF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르완다를 침공했다. 2년 동안 지속된 이 전쟁은 1993년 7월 25일 양측 간 ‘아루샤 평화 조약(Arusha Peace Agreement)’ 채택으로 일단락되었다.(장용규, 2007: 162-164) 한편, RPF의 침공은 급진파 후투족의 무장과 후투족 민족주의에 영향을 주었다.⁴⁹⁾ 그러던 중 1994년 4월 6일 하바리마나(Habyarimana) 대통령 비행기 격추 사건으로 후투족의 분노가 폭발하였다. 1994년 4월부터 7월까지 100여 일 동안 최대 100만 명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알려진 르완다 대학살은 후투족에 의해 자행되었고 사망자 대다수가 투치족이었다. 후투족에 의한 평화 협정 파기로 RPF는 신속하게 르완다에 투입되었고, 7월 중순에 RPF에 의해 RAF와 하바리마나 대통령의 군대(Interahmwe)가 제압되며 제노사이드가 끝나게 되었다.(Encyclopedia Britannica, 2020; Karazsia, 2015: 242)

혼란한 정국을 안정시키고 또 다른 인종 갈등을 막기 위해, RPF는 온건파 후투족 대통령 비지몽구(Bizumungu)와 투치족 출신 부통령 카가메 거국정부를 출범시켰다. 비지몽구 정부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자이레(Zaire, 현 콩고 민주 공화국)나 브룬디 등 인접국으로 피신한 학살 가담자(Génocidaire)들의 침공 위협이었다. 따라서 재건 시기 정부의 과제는 국가 통합, 정치 안정화

48) 후투족은 투치족을 ‘바퀴벌레(Inyenzi)’라고 부르며 멸시했고, 제 2 공화국에서도 정치, 경제 등 다차원적으로 투치족을 배제하고 주변화 했다.

49) 1990년 RPF의 침공으로 후투족 다수(최대 130여만 명)가 르완다에서 강제 추방 및 이주되었기 때문에, 1994년경 투치족에 대한 후투족의 분노는 클 수밖에 없었다.

와 경제 성장이었다. 2001년부터 르완다 정부는 전통을 살린 가차차 법정 (Gacaca court)을 통해 학살 가담자들을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행정에서 인종적 구분을 없애고, 인종에 관계없이 전 주민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전범군인 RDF를 지방 인프라 건설이나 농업 등에 동원하여 이들에 대한 신뢰에 대한 회복과 인식 재고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Karazsia, 2015: 243-247)

3. 2000년대 이후 르완다의 발전

〈표 11〉 1994년 이후 르완다의 경제 관련 지표

(단위: %, 억 달러, 달러)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2015	2018
경제 성장률 (%)	- 50.2	13.8	8.4	2.2	10.7	6.2	8.6	8.9	8.6
총 GDP (억 달러)	7.5	18.5	17.3	18.4	32	54.5	74.3	82.8	95
1인당 국민 소득 (달러)	127.0	288.4	218.7	215.7	353.2	557.1	704.2	728.1	772.9

(출처: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1994년 제노사이드를 겪으며 대부분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파괴되었던 르완다는 2000년대 이후, 카가메 대통령 하에서 점진적으로 경제성장하고 있다. 제노사이드 당시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경험하던 르완다는 2003년과 2018년 사이 연 평균적 7.4%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3년과 2018년 사이 르완다는 15년 만에 국내총생산을 약 5배 이상 증가시켰다. 이러한 결

과는 큰 비중을 차지하던 1차 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서비스업 비중이 성장하는 등 국내 산업 구조의 변화와 큰 연관이 있다. 2005년에는 전체 산업의 38%가 농업, 제조업 14%, 서비스업이 42%를 차지했던 반면, 2017년에는 농업이 34%, 제조업이 13%, 그리고 서비스업이 52%를 차지했다.(김용택, 2013: 4) 2003년과 2011년 사이 르완다의 농업 생산량 322%, 광산업은 16배, 제조업은 4배, 그리고 운송, 통신 및 인프라는 약 5배 증가했다. 특히 2003년 수출량은 5,500만 달러에서 4배 증가한 2010년 2억 2,300만 달러로 증가했다.(Révillon, 2014: 52-53) 빈곤층 인구의 비율은 2001년 59%, 2011년 44.9%에서 2014년 39.1%로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UNDP, 2020; World Bank, 2020)

〈표 12〉 비전 2020(Vision 2020)의 목표와 내용

비전2020(Vision 2020)의 목표	
1. 국가 통합, 종합적인 성장으로 국가 경쟁력 신장 2. 2020년까지 중진국 진입(1인당 국민소득 1,240 달러)	
핵심 부문(Pillars)	범분야(Cross-cutting Issu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굿 거버넌스 및 능력 있는 국가 • 인적 자원 발전 및 지식 기반 경제 • 사회 기반 시설 • 민간 부문 주도 경제 활성화 • 생산성 있는 시장 중심의 농업 • 지역 및 국제 경제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 환경 • 과학, 기술, ICT

(출처: 외교부, 2018a, pp. 48 인용)

르완다의 발전 과정에서 국가의 주도성, 해외 원조와 강한 리더십 요소 등 국내외적 요인의 영향력이 돋보인다. 우선 경제 발전과 정책 실행에 있어

르완다의 중앙 정부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2000년부터 르완다 정부는 최종적으로 ICT를 기반으로 하는 지식 기반 경제 확립과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장기 국가 개발 전략인 비전 2020(Vision 2020)과 비전 2050(Vision 2050)을 제시했다.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 변화, 지식 기반 경제 확립 등을 바탕으로 경제, 정치, 사회적 발전이 동반되어야 한다. 국가 통합 및 경제 성장, 거버넌스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비전 2020은 6개의 핵심부문(Pillars)과 3개의 범분야(Cross-cutting Issues)로 목표를 세분화했다. 비전 2020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2008년 이후에는 경제 개발 및 빈곤 감소 전략(Economic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Strategy, EDPRS)이 도입되었다. 2013년과 2018년 사이에 시행된 EDPRS II에서 르완다 정부는 법치주의, 탈중앙화, 투명성, 사회와 지역통합, 거버넌스, 거시 경제 안정, 발전 역량 개발, 인구, 보건, 교육, 친환경, 성평등 등 정치, 경제 및 사회 문제와 관련된 15개의 세부 중점 분야를 설정했다.(외교부, 2018a: 48-51)⁵⁰⁾

르완다 정부는 또한 비전 2050을 통해 2035년 중상위 소득 국가 달성과 2050년 고소득 국가로 진입하려는 목표를 가진다. 현재 르완다는 농업(34%) 등 1차 산업에 집중된 산업 구조를 가지며, 14%의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발달이 빈약하다. 이뿐만 아니라 지식 기반 경제의 근간이 되는 ICT 및 금융 서비스와 같은 고부가가치 부문은 GDP 성장에 최소한의 기여를 하고 있고, 농업 역시 커피나 차 등 소수의 수출 품목을 제외하고는 자급자족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African Developmental Bank Group, 2016: 8-20)

현재 르완다의 경제는 부가가치와 생산성이 낮은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상황은 결과적으로 르완다의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를 유발하고, 해외 원조 등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킨다. 비

50) 김영완과 드로지에 또한 르완다의 발전 전략에 대해 비슷한 입장을 보인다.(김영완, 2016: 6-10; Desrosiers et al., 2011: 448-450)

전 2050 달성을 위해 르완다는 제조업의 비중을 늘리거나 농업 자동화, 현대화 등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올릴 필요성이 제기된다. 르완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환을 위한 국가 개발 계획인 국가 전략 1(National Strategy for Transformation 1, NST 1)을 제시하고, 현재 르완다가 처한 경제적(수출 증가, 일자리 창출, 경쟁력 있는 지식 기반 경제 확립 등), 정치적(국가 통합, 투명성, 법치주의 등) 그리고 사회적(빈곤 토치 및 삶의 질 증가 등) 문제들을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ODA Korea, 2016: 8-12; 최은호 et al, 2017: 19-28)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위하여, 르완다 정부는 인프라와 인적 자본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내륙에 위치한 지정학적 특성과 낙후된 도로망과 비포장 도로 등 열악한 인프라로 인하여 르완다는 높은 물류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그러나 르완다는 호수나 강 등 해상 교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자원을 가지고 있다. 르완다 정부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ICT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가 개발 전략에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르완다의 전력 보급률과 기술 수준 및 인적 자본과 관련된 현실을 고려해보았을 때, 르완다는 ICT 물적·인적 자원을 확충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한·아프리카재단, 2016a: 107-108; ODA Korea, 2016: 13)

이뿐만 아니라, 르완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다른 국가들과 정치·경제적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벨기에의 식민지였던 르완다는 영어권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영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하고, 2009년에는 영연방(Commonwealth)에 가입했다. 또한 1967년 대호수 국가경제공동체(Communauté Économique des Pays de Grands Lacs, CEPGL) 가입 이후, 2007년 동아프리카 공동체(East African Community, EAC), 그리고 2018년 범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ACFTA)에 가입하여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결속과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르완다 경제 발전에 영향을 주는 두 번째 요소인 해외 원조 총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고, 해외 원조는 최근 몇 년 동안 해외 차관, 해외 직접 투자 등 다른 외부 자금과 더불어 중요한 공공 자금의 조달원이 되었다.(World Bank in Rwanda, 2020) 르완다는 개발 파트너 조정 그룹(Development Partners Coordination Group, DPCG)를 통해 국가의 주요 부처 인사들과 해외 공여 기관들이 원조 및 르완다의 개발 정책성과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개발 협력 협의체를 설립했다. 르완다는 개발 협력의 분절 최소화 및 효과 극대화를 위해, DPCG에 의해 승인된 공여 기관들을 비교 우위에 따라 분류하고, 국가의 개발 정책인 EDPRS II에 따라 최대 3개 분야(정치, 경제, 사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원조 조화(Aid Harmonization)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원조 정책 목표 이행 여부 평가를 위해 2009년부터 공여 기관의 대르완다 개발 협력 효과성을 평가하는 공여국 성과 평가 프레임 워크(Donor Performance Assessment Framework, DPAF) 제도를 도입했다.(외교부, 2018a: 56-57)

르완다의 경제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 지원에 대한 높은 의존성과 그로 인한 국가 취약성이 자주 문제점으로 언급된다.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통해 르완다는 큰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없고, 만성적 수지 적자는 원조에 대한 국가 예산 의존성을 강화한다. 현재의 경제 구조나 상황에서 국내 투자원을 기대하기 힘들며, 채권 발행은 또 다른 의미의 의존을 의미한다. 해외 원조 공여국이나 국제기구 등은 르완다에 대한 통제와 관리 도구로서 해외 원조를 악용할 소지가 있으며, 르완다의 국가 취약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2012년 ‘해외 원조는 독이다. 우리는 어떻게 경제 성장해야하는가를 배워야 한다.’고 말한 카가메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를 주지하고 있으며, 전체 국가 예산에서 해외 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고 자생적인 국가 성장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Révillon, 2014: 58)⁵¹⁾

51) 다른 국제기구들도 르완다의 원조 의존성에 대해 비슷한 과점을 공유한다.(African Developmental Bank Group, 2016: ; World Bank in Rwanda, 2020)

〈표 13〉 1994년 이후 르완다의 해외 자금 유입 지표

(단위: 억 달러, %, 백만 달러)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2015	2018
원조 총액 (억 달러)	7.11	2.29	3.21	3.35	6.05	9.34	8.78	10.88	11.19
GNI 대비 원조 비중 (%)	94.9	12.5	18.7	18.5	19.1	17.3	12.0	13.5	12.0
해외 직접 투자 (FDI) (백만 달러)	0	2.59	8.1	4.7	30.6	11.8	255	223.3	301.5
GDP 대비 FDI 비중 (%)	0	0.1	0.5	0.3	1.0	2.2	3.4	2.7	3.2

(출처: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르완다 정부는 해외 직접 투자 유치율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과도한 해외 원조 의존과 국가 주도의 성장 모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부문이 경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이다. 2020년 세계은행의 기업 환경 평가(Doing Business)에 따르면, 르완다는 전체 190개의 조사국 중 38위와 전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2위를 기록했다. 이는 르완다 정부가 사업비용 감소, 투자자에 대한 세금 혜택 및 민간 대출 제공 등 사업과 투자에 용이한 환경과 공격적인 투자 촉진 정책을 실시하여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해외 투자에 관련된 행정은 르완다개발청(Rwanda Development Board, RDB)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고 쉽게(투자 등록부터 승인까지 소요 기간 3일) 관련 행정이 처리된다. 2008년에는 키갈리(Kigali)에 증권 거래소를 설립하여, 특히 케냐 투자자와 사업자를 끌어들이고 있다.(Révillon, 2014: 54; 김영완, 2016: 8-9)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르완다의 낮은 국내 저축률, 기술 및 높은 에너지 비용과 고비용 저효율의 인프라 문제 등은 민간 주도의 경제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투자를 늘리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국내 저축을 장려하고, 인프라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World Bank in Rwanda, 2020)

르완다의 경제 성장과 관련하여 언급되는 마지막 성장 요인은 카가메 대통령이라는 강한 리더십이다. 1994년 내전에서 RPF를 이끌며 상황을 종식시킨 카가메 대통령은 2000년 과도 정부의 대통령으로 취임한데 이어 2003년, 2010년과 2017년 대선에서 당선되며 장기집권하고 있다. 카가메 대통령은 르완다의 국가 통합과 경제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는 민족 개념을 없애고, 보다 포괄적인 새로운 정체성인 ‘르완다인’(Rwandanness)을 기반으로 국가 통합을 달성하고자 했다. 또한 르완다의 전통과 관련 있는 우무간다(Umuganda) 제도를 통해 인종과 관련 없이 농민, 지식인, 관리자 등 전 계층을 결속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Desrosiers et al., 2011: 444-448)⁵²⁾

한편, 권위주의와 국민에 대한 복종 강요 등이 카가메 대통령과 관련하여 자주 문제제기 된다. 과거사에 대한 언급을 금지하여 두 민족 간 역사적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부가 국가 통합과 재건이라는 미명 하에 국민들의 복종을 강요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그러나 제노사이드를 수습과 경제 부흥에 있어, 카가메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국가에 의해 통일성이 부여되었지만, 이를 통해 르완다는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가차차 법정을 통해 학살자들을 처벌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두 민족 간 단절되었던 신뢰를 복구하고 있다.(김광수, 2010: 74-79; Karazsia, 2015: 246)

제노사이드 이후, 정치적인 안정을 되찾은 르완다는 NST I, EDPRS II 등의 국가 개발 정책과 해외 원조, 해외 직접 투자 등 대내외 발전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점진적으로 경제 성장 할 수 있었다. 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국내 환경을 마련하는 등 친기업적인 경향을 가지는 카가메 대통령은 부족한 발전 자

52) 제노사이드 이후 국가 재건, 국민 통합과 경제 발전에 있어, 카가메 대통령의 역할을 중요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교부와 라루스 또한 2000년대 이후 르완다의 재기에 있어 카가메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진술한다.(외교부, 2018a: 68-69; Larousse, 2020)

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부패 방지 기관 등 반부패 제도를 확립했다. 그 결과 르완다는 2020년 아프리카에서 4번째로 청렴한 국가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카가메 정부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 중이며, 43.7점을 기록한 르완다의 2020년 지니계수를 통해 과거(2017년 49.40, 2018년 44.30)보다 양극화 문제가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케냐의 경제 발전

1. 역사적 배경

영화 ‘라이온 킹(The Lion King)’의 배경지인 케냐는 ‘하쿠나 마타타(Hakuna Matata)⁵³⁾, 노래 잠보 브와나(Jambo Bwana), 킬리만자로 산(Mount Kilimanjaro), 케냐 AA 커피, 마사이(Maasai)족과 마사이마라 사파리(Masaimara Safari) 등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케냐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한국인에게 친숙하게 인식된다. 케냐 국명은 캄바(Kamba)족이 ‘타조의 산(키니아, Kiinyaa)’으로 부르던 가장 높은 봉우리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이외에도 케냐는 고대 시기 코이산(Khoisan)족⁵⁴⁾의 원거주지로 알려져 있다.

40개 이상의 부족으로 구성된 다종족 국가인 케냐는 수천 년 동안 각 부족들⁵⁵⁾이 씨족 단위로 각자의 사회를 형성했고, 종종 다른 종족 공동체와 무역, 결혼이나 전쟁 등을 통해 교류하면서 상호 공존했다. 유동적이었던 전통 시기의 다종족의 케냐 공동체는 영국에 의한 식민 통치를 받게 되면서부터 종족 차원에서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케냐는 1894년 영국의 보호국이 되었는데, 식민 당국의 통치 방식과 그로 인한 문제점들로 인해 케냐 내 인종 갈등 요소가 발생했다. 우선, 40여개가 넘는 부족들의 동의 없이 영국의 행정 편익에 따라 국경선이 정해졌고, 이 과정에서 동일한 단일 부족 공동체를 케냐, 소말리아나

53) 스와힐리어로 ‘걱정할 것이 없다’는 뜻이다.

54) 코이산족은 영화 ‘부시맨’으로 한국에 알려져 있으며, 가장 역사가 긴 인류이자 부족민 중 일부는 여전히 초기 인류의 생활 방식을 고수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혀를 튕기는 언어인 흡착음(吸着音)을 사용하는 부족으로도 알려져 있다.

55) 각 부족은 생활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삶의 방식을 가졌다. 마사이족과 삼부루(Samburu)족은 목가적인 삶을 살았고, 루오(Luo)족과 아바구시(Abagusii)족은 농작물 재배와 가축 사육을 혼합했다. 반면, 오기에크(Ogiek)족은 주로 사냥과 채집 생활을 했다.(Ndege, 2009: 1-2)

에티오피아 등 다른 나라로 분리시켰다. 식민 당국은 또한 식민지 자원을 두고 각 공동체를 경쟁시키는 방식으로 식민지를 경영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며, 각자 다른 부족 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지며 공존하던 케냐 내에서 민족적 분리 경향성이 점차 강해졌다.(Ndege, 2009: 1-3; The Commonwealth, 2020)

식민 통치 시기 영국은 유럽 정착민을 위해 원주민들을 학살하거나 토지를 강탈하고, 다른 지역으로 강제 추방 및 이주시키는 등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케냐를 통치했다. 그리고 아프리카 현지의 여론을 반영하기 보다는 영국 당국의 의견을 반영한 행정을 실행하는 등 고도로 중앙화 된 정치를 행했고, 서양의 자본이나 기업이 케냐의 자원을 마음껏 수탈하는 것을 용인했다. 식민 당국은 스윈너턴 계획(Swynnerton Plan)을 통해 농업 부문을 성장시켜 경제적 이익을 얻는 한편, 피지배민들을 정치적으로 복속시키고 경제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전략을 가졌다.⁵⁶⁾ 이러한 농업 정책을 통해 식민 당국은 목표로 하던 정치적, 경제적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많은 피지배민을 토지 임차인으로 전락시킴으로써 역설적으로 이들이 독립에 대한 열망을 가지도록 만들었다.(Ndege, 2009: 2-5; Atieno-Odhiambo, 1995: 27-29)

고도로 중앙화 되고 권위주의적인 식민지 통치 방식은 식민지 유산으로 케냐에 남게 되었다. 식민 당국의 행정 방식을 그대로 답습한 케냐 정부로 인하여 독립 이후, 케냐는 도농 간 격차, 양극화 문제⁵⁷⁾, 경제 다각화 부족, 국가의 시장 독점 그리고 기술이나 재정 등에 대한 외부 의존성 등의 문제에 직면

56) 1952년 시작된 케냐의 독립 운동인 ‘마우 마우’ 켈기(Mau Mau rebellion) 기간 동안 식민 당국에 의해 진행된 경제 계획은 식민 지배의 용이성을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현금 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등 표면적으로 아프리카인들에 대한 경제적인 기회를 주는 듯 했다. 그러나 식민 당국은 이 경제 계획을 통해 원주민들을 복속시키는 정치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중부 지역의 파편화된 토지권을 소수의 현지 농부들에게 부여하고, 이들을 ‘아프리카 중산층’으로 육성하는 등 차별적인 정책을 시행했다. 이러한 정책의 시행 결과, 식민 당국이 본 목적을 달성한 반면, 대다수의 피지배 농민들은 소작농(아호이, ahoi)으로 전락했다.(Mwega et al., 2008: 20-21)

57) 양극화 문제는 종족 갈등과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다. 독립 이후 키쿠유(Kikuyu)족 출신 조모 케냐타(Jomo Kenyatta)가 정권을 잡게 되면서, 이 부족은 다른 부족들 보다 더 많은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차지하게 되었다.(Mohajan, 2013: 75-76)

하게 되었다. 또한 식민지 시기 이후에 중요해진 민족 요소는 독립 이후 케냐에서 정치적 이데올로기 요소로 변모했다. 이 영향으로 1980년대 이후부터 종족의 이해관계에 따른 정당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Oyugi, 2000: 6-8)⁵⁸⁾

2. 독립 이후 케냐의 발전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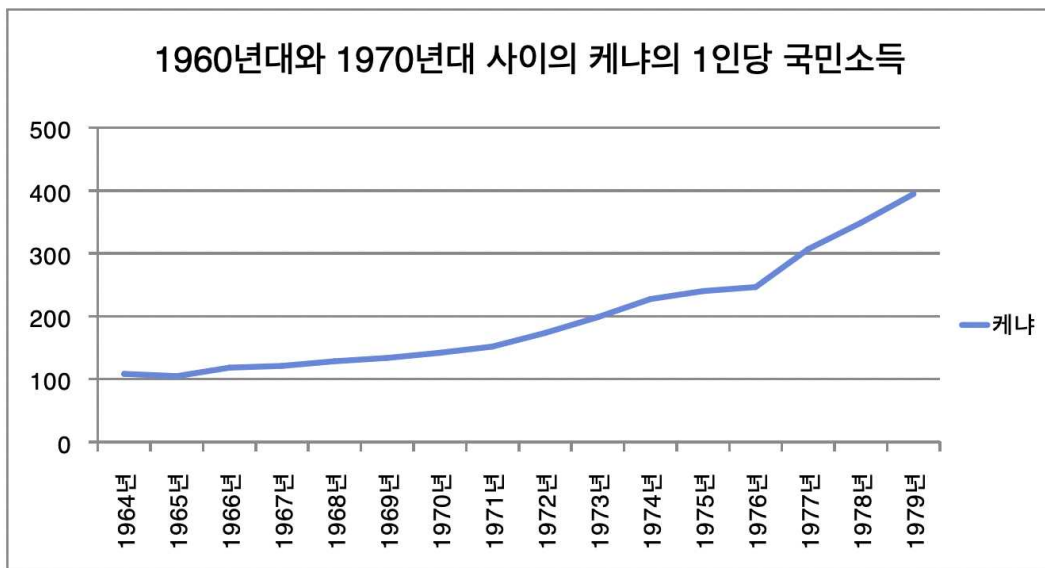
독립 이후의 케냐 경제 발전 시기는 경제적 성과에 따라 크게 1960년대~1970년대와 1980년대~1990년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조모 케냐타 정권 하(1960년대~1970년대)의 케냐는 점진적으로 경제 성장했다. 비록 기후(우기)의 영향, 정치적 불안정이나 오일 쇼크 등 여러 국내외 발전 방해 요인들에 의한 영향이 있었지만, 이 시기 케냐의 평균적인 경제 성장률은 약 4.8%였고, 1인당 GDP 또한 독립 직후와 비교했을 때 약 3배 증가했다.

조모 케냐타 대통령 재임 기간⁵⁹⁾ 동안 케냐의 경제 발전은 농업과 제조업의 성장으로 가능했다. 정부는 빠른 성장을 위해 서구식 발전 방식을 도입했고, 자유 시장 매커니즘과 자본의 대량 투입에 강점을 두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우선, 케냐 정부는 농산물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식량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등 농업 부문을 전적으로 통제했다. 현금 작물 판매는 대부분 국가가 개입하는 경매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거래 방식은 시장에서 출신 지역이나 민족, 기업의 규모 등에 따른 차별이 부재하도록 했다. 조모 케냐타 정권은 능력주의(meritocracy)를 도입하여 자원 분배와 농촌 개발 프로젝트 참여에 있어

58) 케냐의 정치나 경제와 관련된 글 중 다수는 현재 케냐가 직면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식민 통치 방식에 기원한다는 입장을 공유한다.(Rutten et al., 2009: 320-321; Ndege, 2009: 6-7)

59) 조모 케냐타 대통령은 1968년부터 1978년까지 재임했다.

여러 그룹들 간의 경쟁을 유도했다. 그리고 도시의 자원을 농촌에 투자하는 등 자원 배분에 있어 농촌 지역을 배제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농업 부문의 성장은 또한 제조업 부문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정부의 수입 대체 산업 전략 실행과 산업 은행을 통한 투자비의 투입으로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케냐의 제조업은 독립 이후 10년 동안 매년 약 9% 이상 증가했고, 수입 가중 관세율은 당시 아프리카 표준(16.5%)보다 상당히 낮게 유지할 수 있었다.(Ochieng' et al., 1995: 84-119; Mwege et al., 2008: 10-13; 19-21)



〈그림 8〉 1960년대와 1970년대 사이의 케냐의 1인당 국민소득

(출처: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케냐 정부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경제 성장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국민들의 소득 증가와 지역 불평등을 희생하여 달성했다. 수입 대체 정책은 케냐 자체의 시장 발전을 유발하지 않았고, 결국 한계점을 드러냈다. 그리고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풍부한 케냐의 노동력을 포용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심지어 투자비 투입과 관련된 산업 은행 또한 정치 비자금으로 쓰이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케냐는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할 수 있었지만, 확고한 발전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었다.(Mwega et al., 2008: 10-13)

케냐의 경제 성장은 조모 케냐타 대통령의 타계 이후 집권한 모이(Moi) 정권⁶⁰⁾을 거치며 정체(혹은 악화)되었다. 모이 대통령 취임 이후, 케냐에서는 일당(The Kenya African National Union, KANU 당) 독재가 헌법에 의한 보장, 공개 선거 실시나 합법적인 모임과 집회 해산법 등 정치적으로 퇴보하게 되었다. 모이 대통령의 취임 이후, 케냐 내에서 종족 갈등이 특히 심해졌다. 이는 이전처럼 능력주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이 대통령의 민족(칼렌진족, Kalenjin)과 측근들에게 모든 자원 분배의 우선권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부패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나 공권력의 무능력이 심화되었고, 국민들의 정부 신뢰도나 치안 문제가 악화되었다. 정부는 인종 갈등 문제를 방임했고, 그 결과 리프트 밸리(Rift Valley)⁶¹⁾ 정착 문제를 둘러싼 종족 갈등이 도화선이 되어 1991년과 1997년에 인종 폭력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The Commonwealth, 2020; Mohajan, 2013: 80-81)⁶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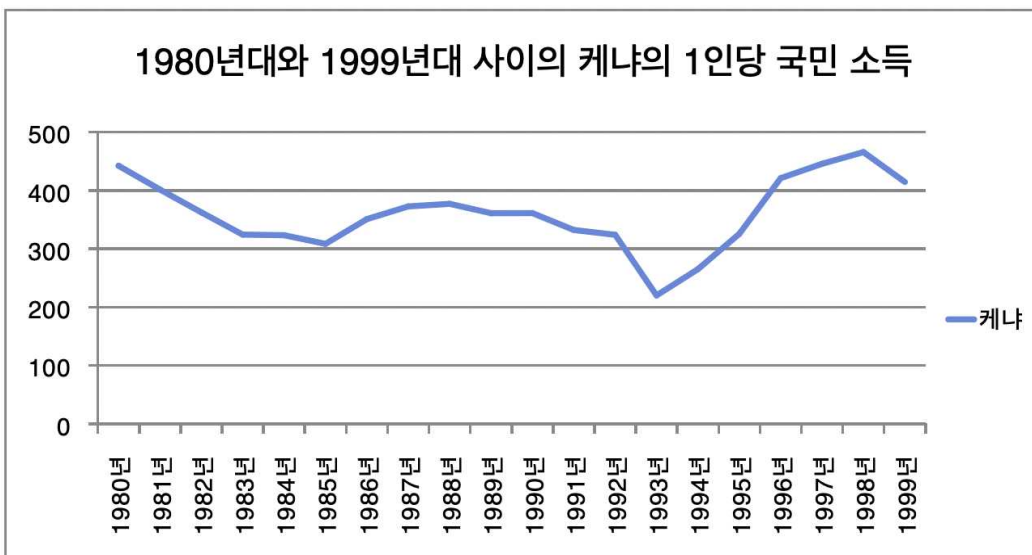
80년대와 90년대 사이의 케냐 경제 저성장은 이전 정권의 발전 방식의 한계점과 더불어, 70년대의 두 번의 오일 쇼크, 글로벌 커피 가격 하락, 독재와 인종 갈등 등 내부 정치 문제와 가뭄 등 여러 대내외적 요인의 영향으로 케냐의 경제가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케냐 정부는 지불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MF 등 글로벌 금융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90년대 초반부터 국

60) 모이 대통령은 1978년부터 2002년까지 재임했다.

61) 리프트 밸리는 농업에 적절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리프트 밸리에 이주하려는 사람들 중에는 조상대에(식민시기)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여 다시 원주거지로 돌아가려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정착을 원주민들이 반대함에 따라 인종 갈등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고, 1991년 인종 폭력 사태의 원인이 되었다.(Oyugi, 2000: 6-8)

62) 모이 대통령과 케냐의 저발전과 관련하여, 이들도 유사한 관점을 공유한다.(Mohajan, 2013: 75-76, 80-81; Oyugi, 2000: 6-8; Mwega et al., 2008: 6)

제기구와 선진국들은 독재와 인권 탄압 등 비민주인 정치를 행하는 케냐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해외 원조를 중단했다. 외부로부터의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했던 모이 정권은 민주적인 제도들을 재도입하는 등 정치적으로 변화했고, 그 결과 1993년부터 다시 해외 원조를 받을 수 있었다.⁶³⁾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경제 자유화를 위한 조치(가격 및 환율 통제 제거나 국영 기업의 민영화 및 공무원 감축 등)를 취하여 국가의 재정 지출을 감축했다.(Oyugi, 2000: 8-11)⁶⁴⁾



〈그림 9〉 1980년대와 1990년대 사이의 케냐의 1인당 국민소득

(출처: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조모 케냐타 대통령의 재임 시기와 비교했을 때, 80년대와 90년대 사이 케냐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크게 후퇴했다. 대내적으로는 독재와 부패 등 정치적 문제와 오일 쇼크, 커피 가격의 하락이나 서양 국가들의 원조 중단 등 대외

63) 케냐 정부는 1990년 비밀 투표 재개, 1992년 다당제 제도의 헌법적 보장과 1993년 인종 갈등 문제 중재 시도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The Commonwealth, 2020)

64)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케냐 정부는 국내외적 노력을 기울였다.(The Commonwealth, 2020; Mwegu et al., 2008: 33-36)

적 요인들의 결합으로 저발전하게 되었다. 조모 케냐타 정권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경제를 성장시켰지만, 한편으로는 분열된 국민들의 통합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반면 모이 정권은 케냐를 최빈국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양극화나 종족 갈등 등 내부적인 분열을 촉진했다는 비난을 받는다. 모이 정부의 무책임한 방관으로 인한 영향은 계속되어 지속적으로 정치 및 경제 불안정을 유발한다. 특히 1997년과 2007년의 종족적 정치 충돌 사태가 2017년에 선거에서 또한 재현된 것을 통해, 이전 정권의 종족 차별주의 정책과 종족 갈등 방관 등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Oyugi, 2000: 8-11; Kimenyi et al., 2015: 1-2)

3. 2000년대 이후 케냐의 발전

〈표 14〉 1994년 이후 케냐의 경제 관련 지표

(단위: %, 억 달러, 달러)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2015	2018
경제 성장률 (%)	2.6	0.5	0.6	2.9	6.5	3.3	4.6	5.7	6.3
총 GDP (억 달러)	71.5	131.1	130	161	259	370	504	640	880
1인당 국민 소득 (달러)	265.2	445.9	397.5	429.8	686.0	905.1	1,136.9	1,336.9	1,710.5

(출처: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1인당 국민소득이나 경제 성장률 등 여러 경제적 지표들을 통해, 2000년대 이후 케냐가 다시 점차 경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케냐의 경

제 발전 과정에 있어, 국가의 주도적인 경제 정책, 해외 원조 요인은 중요하게 언급된다. 그리고 독재와 부패로 케냐를 최빈국으로 만든 모이 대통령 이후에 등장한 두 지도자 키바키(Kibaki)⁶⁵⁾ 대통령과 우후루 케냐타(Uhuru Kenyatta)⁶⁶⁾ 대통령은 케냐의 경제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키바키 대통령은 케냐 경제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고, 발전 의지와 친기업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케냐타 대통령은 케냐가 변화하는 글로벌 정치·경제에 따라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02년 키바키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모이 대통령의 독재와 부패 문제 등으로 인해 케냐의 경제 저발전 문제가 심각했다. 키바키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실업, 교육, 의료, 인프라 등 케냐가 당면한 저발전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를 위해 케냐 정부는 부와 고용 창출, 거버넌스 강화, 물적·인적 인프라 투자 및 확장을 위해 경제 회복 전략(The Economic Recovery Strategy, ERS)과 중장기 경제개발 정책인 ‘비전 2030(Vision 2030)’을 발표했다. 우선, 케냐 거시 경제의 취약성과 구조적 약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5개년 경제 정책인 ERS를 통해 구조 및 거버넌스 개혁을 시행했다.(Iraki, 2018: 698; Kimenyi et al., 2015: 3)

다음으로, 국가 주도의 경제, 사회, 정치 발전을 위해 케냐 정부는 6대 주요 산업(농업, 관광, 제조, 무역, IT와 금융)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강령으로 1차 중기계획(Medium Term Plan, MTP)을 제시하고, 경제 성장 가속화, 빈곤 감소, 경제 구조 개혁, 고용 창출 등 세부 목표들을 설정했다.

65) 케냐의 3대 대통령이며, 임기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였다.

66) 케냐의 초대 대통령 조모 케냐타의 아들이며, 2013년부터 케냐의 4대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다.

〈표 15〉 케냐 비전 2030 개요

Vision 2030의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여 연 경제 성장률 10%대 달성 • 2030년까지 중소득 국가 진입 • 정치, 경제, 사회적 발전 	
Vision 2030의 6대 주요 산업	MPT 2 세부 정책
농업 관광 제조 무역 IT 금융	경제 성장 가속화
	빈곤 감소
	경제 구조 개혁
	고용 창출
	인프라 건설

키바키 정권은 비전 2030의 달성과 케냐 경제 성장의 핵심이 특히 인프라의 개선에 있음을 강조했고, 이에 따라 도로, 철도, 항만과 ICT 등 다양한 인프라 건설이 경제 정책에서 최우선시 되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정부 주도로 라무항(Lamu Port) 건설과 콘자 기술 도시(Konza Technology City) 건설이 계획 및 시행되었다. 2005년 이래로 7,000km 이상의 도로 개발 공사를 통해 약 47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Roads 2000’ 프로젝트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농가 수입 증가를 달성하고자 했다. 또한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도입하고, Lodwar, Garissa와 Marsabit 등 에너지 센터의 확대를 통해 비전 2030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휴대전화 등 모바일 서비스의 확대 또한 고용 창출, 정부 세수 증대와 대내외 무역 촉진 등 케냐의 경제성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Babalola et al., 2001: 17-20; Kimenyi et al., 2015: 24)

키바키 대통령의 뒤를 이어 2013년에 취임한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 또한 취임 당시 아버지의 유산을 기반으로 국가의 발전을 이끌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국가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표 실행을 위하여, 케냐타 정권은 이전 정부의 비전 2030을 이행하는 동시에, 비관세 장벽 철폐와 친기업적 정책 등을 실행하고 있다. 우선, 케냐타 정부는 MPT 2의 거버넌스와 인프라 부문에서 제안한 공약을 상당히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7년 선거 당시 정치적 충돌⁶⁷⁾과 2013년 웨스트 게이트 몰 테러 사건⁶⁸⁾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케냐타 정부는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케냐의 경제 성장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시 되는 관료주의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 전자 서비스를 도입하고 후두마 센터(Huduma Centers)⁶⁹⁾를 창설했다.(Lituchy et al., 2017: 110; 외교부, 2018b: 36)

다음으로, 특히 케냐타 대통령이 ‘디지털 공화국’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정도로 중시했던 ICT 분야는 2000년대 이후 케냐에서 가장 크게 성장한 분야가 되었다. 케냐 정부는 정보통신기술부(Information Ministry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echnology)를 구성하고, ICT와 전체 미디어 분야의 범위를 확대했다. 그 결과 케냐타 정권 취임 이후 인터넷과 휴대 전화 가입자의 수가 급증했고(케냐의 휴대폰 보급률은 2016년 기준 81.3%), M-PESA 등 휴대폰 기반의 금융 서비스 확대와 더불어 ICT 분야가 급성장하게 되었다.(Shirima et al., 2017: 166-169; 한·아프리카재단, 2016b: 75-81)

반면, 케냐타 정부의 들어 기후 변화, 중국의 경기 둔화, 유가 상승이나 글로벌 경제 침체 등 대내외적 요인들에 영향으로 정부는 비전 2030의 목표를

67) 2007년 선거에서 키쿠유(Kikuyu)족 출신 케냐타 후보와 루오(Luo)족 출신 오딩가(Odinga) 후보의 대립 및 부정선거 의혹으로 유혈사태가 발생하여 1500여명이 사망하게 되었다.

68) 케냐와 소말리아에서 주로 활동하는 이슬람 무장 급진단체 알 샤바브(Al Shabaab, 아랍어로 ‘청년’을 의미함)에 의해 쇼핑몰(the Westgate mall)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

69) 창업 과정의 단순화 및 이중 행정 방지를 통한 공공 서비스 제공 효율성 향상을 위해 케냐 정부가 우체국과 협력하여 만든 정부 서비스이다.

수정해야 했다. 또한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재정 적자 악화로 인하여 국가 부채가 급증하여, 케냐는 인프라 건설, 민간 부문 대출 등에 대한 공공 지출을 줄여야만 했다. 이러한 대내외적 경제 발전 제약으로 인해, 케냐타 대통령은 4대 국정 과제(Big 4: 안정된 주거, 제조업 발전, 보편적 의료와 식량 문제 해결)를 발표하고, 정책의 성공을 위하여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제조업의 약화나 경제 다각화가 부족한 케냐의 산업 구조(서비스업: 64.6%, 농업: 25%) 또한 경제 발전의 장애물로 언급된다. 특히 농업 부문은 케냐 GDP의 약 25%를 차지하지만, 전체 농산품의 91%가 저품질의 형태로 수출되는 등 케냐의 농업 생산성이나 현대화 정도는 낮은 편이다.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케냐 정부는 댐 건설, 비료 보조나 식량 매입 프로그램(Food Acquisition Programme) 등을 신설하여 농민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여전히 취약한 제조업 기반(GDP의 11% 차지)과 낮은 기술력 및 인적 자본의 영향으로 케냐의 실업률은 높은 편(2018년 기준 실업률 40%, 청년 실업률 60%)이다. 케냐의 높은 청년 실업률은 주변국인 소말리아 등에서 유입된 무장테러 단체 등에 참여하는 동기부여 기제로 작동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케냐 정부는 온라인 교육 시스템(Ajira Platform)을 마련하고, 국가 개발 예산의 30%를 청년 고용에 안배하여 케냐 청년층을 국가 주도의 사업에 참여시키고 실업률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케냐 정부는 2015년에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SEZ)를 설정하고, 자국 내 주요 산업의 성장을 위하여 수출 가공 구역(Export Processing Zone, EPZ)과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SEZ)를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enya, 2013: 51-62)⁷⁰⁾

70) 이들도 경제 다각화와 제조업 기반이 약한 케냐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외교부, 2018b: 35-38; 한·아프리카재단, 2016b: 32-37; 코트라(Kotra), 2016: 13-16; 장중문 et al., 2018: 17-19; 한·아프리카 재단, 2019: 48-49)

〈표 16〉 1994년 이후 케냐의 해외 자금 유입 지표

(단위: 억 달러, %, 백만 달러)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2015	2018
원조 총액 (억 달러)	6.78	4.49	5.13	5.23	9.41	17.82	26.53	24.63	24.88
GNI 대비 원조 비중 (%)	10	3.5	4.1	3.5	3.7	4.8	5.3	3.9	2.9
해외 직접 투자 (FDI) (백만 달러)	7.43	62.1	111.0	81.7	50.8	116.2	128	62	162.6
GDP 대비 FDI 비중 (%)	0.1	0.5	0.9	0.5	0.2	0.3	2.7	1.0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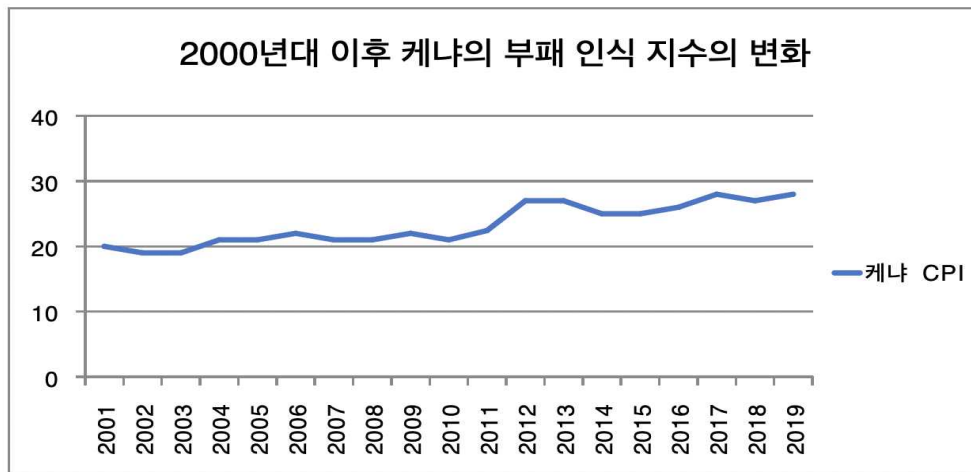
(출처: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다음으로 케냐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온 해외 원조 요소는 비전 2030을 이행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Kimenyi et al., 2015: 7) OECD에 따르면, 케냐는 2018년 OECD 개발 원조 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의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열 번째 국가이다. 케냐 해외 원조의 총액과 유상 차관의 비율은 점점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지만, 케냐 정부의 원조 의존성은 낮다. IMF는 케냐 정부가 의도적으로 제한된 기증자 지원에 적응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탈냉전 전후, 케냐는 비민주적 정치경제 체제와 관련하여, 원조가 중단되며 서방 국가들과 마찰을 빚었다. 그러나 케냐 정부의 개혁 약속, 2014년 케냐타 대통령에 대한 국제 형사 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기소 철회⁷¹⁾와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의 케냐 방문 등으로 서방과 케냐는 관계 개선 할 수 있었다.(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71) 2007년 선거 과정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킨 주범으로 지목된 케냐타 대통령은 서양 국가들에 의해 ICC에 기소되었다.

2016: 13-18)⁷²⁾

케냐타 대통령이 2017년 취임 연설에서 비전 2030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투자를 많이 유치하겠다고 말한 바와 같이, 케냐타 대통령 취임 이후 케냐의 비즈니스 환경은 크게 개선되었다. 비록 매년 변동 폭이 크지만, FDI는 케냐의 경제 발전에 일조하고 있다. 2017년 FDI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는 에너지 부문(약 4억 3천만 달러)과 제조업(약 2억 5700만 달러)였고, ICT 분야에 대한 투자 역시 2000년대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9년 세계은행의 기업 환경 평가 따르면, 케냐는 70.31점을 얻으며 사업하기 좋은 아프리카 국가 4위(전 세계 순위 61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는 사하라 이남 국가들의 평균 점수인 51.61점과 비교했을 때, 케냐가 해외 투자자나 기업을 유치하기에 좋은 환경임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케냐 정부는 더 많은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 관련법을 제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⁷³⁾(Iraki, 2018: 689; 한·아프리카 센터, 2019: 44-49)



72) IMF와 외교부 또한 해외 원조의 케냐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IMF, 2008: 17-22; 외교부, 2018b: 52-60)

73) 해외 투자자들은 해외 투자법(Foreign Investment Act)에 따라 특정 분야를 제외한 케냐 국내 자원을 활용하는 수출 산업을 소유할 수 있다. 또한 민관협력법(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을 통해 정부가 주도하는 개발 사업의 투자를 확보하고 정부 수입원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자본 공제의 형태로 민간 투자자들에게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림 10〉 2000년대 이후 케냐의 부패 인식 지수 변화

* 100에 가까울수록 청렴한 국가를 의미함

(출처: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케냐의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케냐의 부패 문제는 이전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국제기구들은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부터 시작된 윤리 및 반부패 위원회(the Ethics and Anti-Corruption Commission, EACC)가 제 기능을 하지 않고 있으며, 부패 해결을 위한 국가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분석하고 있다.(외교부 2018b: 36, 40-41)⁷⁴⁾ 그러나 케냐의 최근 경제 성장률을 통해, 부패 문제가 케냐에서 큰 경제 저발전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패 문제의 정치적 영향력 또한 미미한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Ipsos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49%의 케냐 국민은 종족이 아니라 경제 개발 정책에 따라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Ipsos, 2017)⁷⁵⁾ 이뿐만 아니라, 2022년 대선과 관련된 최근 여론조사⁷⁶⁾에서 여당 후보자인 루토가 34%의 지지율을 보이며 야당 후보자인 오딩가 후보(14% 획득) 보다 앞섰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부패 문제가 케냐타 정권의 연임이나 경제 정책 이행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키바키 정권이 경제 재건을 위하여 국가 주도의 건설 사업, 거버넌스 개선 등에 주력한 편이었던 반면, 케냐타 정권은 국가 주도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확대를 통해 경제 성장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현 케냐 정부는 변화한 글로벌 정치경제 상황을 인식하여 ICT 관련 부문에 적극적으로

74) 부패는 케냐의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케냐 내 FDI와 기업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분석된다.(장종문 et al., 2018: 6-7; Lituchy et al., 2017: 111-112; Bachelard, 2010: 190-196; Schwab, 2017: 166-167)

75) 2017년 6월 여론 조사에 따르면, 케냐타 대통령 소속당 Jubilee가 야당 NASA에 5% 정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선거의 의혹이 있었지만, 케냐타 대통령은 2017년 연임에 성공했다.

76) Kantar와 Ipsos의 Tom Wolf가 협력하여 2019년 11월 6일과 16일 사이에 진행됨.

투자하고 있다. 케냐타 정권의 취임 이후, 케냐는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며 더 많은 FDI를 유치할 뿐만 아니라, M-PESA의 수출이나 정부 부처의 디지털화 등을 이루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비록 이전 정권의 정부 세수 감축 등의 영향으로 높은 실업률을 경험하고 있지만, 경제 다각화를 이루기 위해 제조업 육성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케냐 비전 2030을 계승하여 교육을 확대하고 도로 등의 인프라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물질·인적 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VI. 결론

여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개발도상 국가⁷⁷⁾들 중에서도 최빈국에 속했던 르완다와 케냐는 최근 비교적 높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을 보인다. 90년대 이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개발도상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2~3%대의 다소 둔화된 경제 발전 양상을 보이는 반면, 르완다와 케냐는 여전히 5%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며 발전하고 있다. 또한 GDP 대비 ‘총자본형성(Gross capital formation)’률⁷⁸⁾ 지표에서도 두 국가는 2006년 이후부터 다른 사하라 이남 개발 도상 국가들의 평균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인다. 최근 10년 동안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제조업 등 경제 생산 활동과 관련된 고정 자본의 증가율의 경우, 사하라 이남 국가들의 경우 연평균 약 3.3% 증가했던 반면, 동일시기 케냐는 약 6.3%, 그리고 르완다는 약 12.5% 증가했다.(World Bank, 2020) 이처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발전 담론의 차원에서, 최근 두 국가의 경제성과는 다른 국가들과는 구분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의 발전 모델 논의와 관련하여, 점진적이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두 국가의 사례는 큰 의의를 가진다. 두 국가 모두 인구가 1천만 명 이상(르완다 2018년 기준 1218만 명, 케냐 2019년 기준 5140만 명)이며, 금이나 다이아몬드와 같은 주요 자원이 없는 자원 빈국이다. 그리고 두 국가는 제조업 기반이 미약하고, 전체 산업 구조에서 농업과 서비스업이 대다수를 차지한다.(France Diplomatie, 2019; 대한민국 외교부, 2020)

전술한 바와 같이, 르완다와 케냐는 지리, 인구, 역사 등 많은 부분에

77) IDA(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국제개발기구)와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국제개발은행)에 가입한 개발도상국들만 포함.

78) UN이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에서 극심한 빈곤 해결을 위해 제시한 지표 중 하나이다.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및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관련이 있다.

서 다르다. 그러나 두 국가의 발전 사례 분석에 있어 유사한 발전 요인들이 관찰된다. 우선, 서구에 의한 식민 통치는 두 국가에 내에서 인종 갈등 가능성을 유발했다. 르완다는 인종 문제로 인해 1994년 제노사이드를 경험했다. 이 사건은 르완다 대내외적 정치 불안정, 난민 발생과 노동력 및 발전 기반 상실 등을 유발했고, 이로 인하여 르완다는 최빈국으로 전락했다. 제노사이드를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케냐는 80, 90년대 모이 대통령의 독재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으로 크게 퇴보했다. 독재는 케냐 내부적으로 종족 갈등을 야기했고, 1997년, 2007년의 정치 폭력 사태로 이러한 갈등이 표출되었다. 2017년 대선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통해, 케냐 내에 종족 갈등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국가의 경제 성장에서 국가의 산업 정책, 해외 원조와 발전 지향적인 리더십 요인이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2003년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고 정권을 잡은 르완다의 카가메 정부는 주도적인 경제 발전 전략 Vision 2020과 Vision 2050을 공표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 강령인 EDPRS I, II과 NST 1을 제시했다. 그리고 인종 갈등 재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우무간다와 가차차 법원 등의 제도를 마련했다. 케냐 정부 또한 민주화 이후, 경제 발전을 위해 Kenya Vision 2030을 발표했고 구체적인 실행 강령으로 MPT 1, 2를 제시했다. 이외에도 라무항을 건설하고 콘자 기술 도시를 건설하는 등 경제 발전에 필요한 물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해외 원조는 두 국가의 경제 발전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두 번째 발전 요인이다. 해외 원조는 해외 차관, FDI와 더불어 르완다 정부의 추가적인 재원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르완다 정부는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기구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해외 원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들을 확립했다. 케냐의

Vision 2030 달성에 있어, ODA와 FDI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케냐는 원조 유치를 위해 정치적 변화를 단행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 운영 환경을 개선했다. 케냐의 ODA 수혜 액수와 유상 원조의 비중은 점점 증가하는데 반해, 케냐의 원조 의존성은 점점 낮아진다. 해외 원조에 대한 의존성이 낮은 케냐와 달리, 르완다에서는 해외 원조에 대한 높은 의존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카가메 대통령 또한 이를 주지하고 있으며, 대외 의존성을 줄이고 국가의 자생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두 국가 모두에서 발전 의지를 가진 지도자가 국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르완다의 경제 성장에 있어 17년 동안 집권하고 있는 카가메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 카가메 대통령은 제노사이드 직후 혼란했던 정국을 진정시키고, 르완다가 경제적으로 재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케냐에서는 2000년대 초반, 독재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으로 퇴보한 국가를 부흥하기 위한 키바키 대통령의 노력이 컸다. 키바키 대통령은 거버넌스 개선, 국가 주도의 경제 사업과 국가적 구조 조정 등을 통하여 케냐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007년 이후에는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의 친기업적 경제정책이 국가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케냐타 대통령은 기업 운영 환경의 개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케냐 경제를 성장시키고 있다. 케냐타 정부는 또한 제조업 기반 확립 등 경제 다각화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두 국가는 공통적으로 비민주적인 정치, 농업 중심적인 산업구조 및 산업 다각화 부족, 낮은 국민들의 삶의 질(교육, 보건 등)과 발전을 위한 물적·인적 인프라 문제 등에 직면해 있다. 두 국가 모두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물적·인적 자본을 확대하고, 산업 구조의 전환을 해야 한다. 이외에도 르완다는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인프라 및 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케냐는 정치 불안정, 치안 문제와 부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표 17〉 르완다와 케냐의 발전 요인 비교

	르완다	케냐
국가의 산업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sion 2030 EDPRS I, II • Vision 2050 NST 1 • 해외 원조 관리 제도 DPCG, DPAF • 영어 공용어 지정 및 영연방 가입 • 우무간다 제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nya Vision 2030 MPT 1, 2 • 라무항 건설 • 콘자 기술 도시 기획 • M-PESA 확대
해외 원조 의존성	높음	적음
발전 지향의 강력한 리더십	폴 카가메 대통령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
발전의 제약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비민주성 • 자원 빈국 •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 • 낮은 농업 생산성 • 낮은 인적·물적 자본 • 인프라 부족 • 지정학 요인(내륙 국가) • 낮은 국민들의 삶의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불안 • 심각한 부패 문제 • 정치 불안(치안, 테러 등) • 농업,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구조 • 낮은 인적·물적 자본 • 인프라 부족 • 낮은 국민들의 삶의 질

기존의 비서구 지역에 대한 발전 연구는 주로 서구 중심적인 시각에서 논의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석유, 금, 다이아몬드 그리고 다양한 광물 자원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이지만, 세계화 이후 정치적, 경제적으로 가장 저발전 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아프리카 지역에 적용된 서구중심적인 발전 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서구 중심적인 정치경제 체제는 비서구 지역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보편적으로 적용되었다. 비서구 지역은 서구에 의해 지속적으로 식민지 통치, 탈냉전과 세계화와 같은 구조를 부여받았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들은 많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정치 불안정, 무역 비교 열위와 해외 원조 및 자원 대한 의존성 등의 저발전 요인들을 유발했다. 현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직면한 저발전 문제는 본질적으로 역사, 정치, 사회, 문화와 경제 요인 등이 다차원적으로 얽혀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간과하고 있는 서구 중심적인 발전 이론을 아프리카 지역에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에 있어, 자유시장주의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정책, 정치 지도자 요인과 해외 원조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라틴 아메리카나 동아시아 등 다른 비서구 지역의 저발전과 발전 현상에 대한 이론적인 시도나 학계의 관심이 컸던 것에 반해, 아프리카의 저 발전을 설명하려는 이론적인 시도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동아시아 발전 모델을 아프리카 지역에 적용하려는 시도 또한 많지 않았다. 동아시아 발전 국가 모델은 성공적인 비서구 지역의 발전 사례로서 다른 개발 도상 국가에 적용될 수 있고, 그 중 특히 한국의 경제 발전 사례가 줄 수 있는 함의는 크다. 전후 전쟁 피해로 인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최빈국으로 전락했다. 한국은 자원 빈곤국이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 의한 지속적인 안보 위협, 이데올로기 문제와 외환위기 등 대내외 발전 장애 요인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지만, 이를 극복하고 경제 성장했다. 이러한 한국의 발전 사례는 비슷한

발전 요건과 대내외 정치·경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다른 개발 도상 국가들에 성공적인 발전 모델로서 제시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발전 국가 모델의 개발도상국가에의 적용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사하라 이남 국가들 중 최근 비교적 꾸준하게 성장 중인 신흥 발전 국가 르완다와 케냐의 발전 사례를 한국 발전 요인 틀에 따라 분석했다. 르완다와 케냐의 경제 발전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의 주요 발전 요인인 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 해외 원조와 강한 리더십 요인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국이 직면한 저발전 요인은 물질·인적 자본의 부족, 미비한 산업화와 낮은 거버넌스 수준 등 대체적으로 비슷했다. 그러나 각국에서 부패, 민주주의 수준이나 지정학적 요인 등은 각각 다르게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비교 사례가 르완다와 케냐 두 국가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모든 개발 도상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발전 이론을 도출하기 힘들다는 한계점이 있다. 한국의 사례는 자원 빈국이자 여러 대내외 발전 장애 요인들을 극복하고 경제 발전을 달성한 것이다. 따라서 비슷한 대내외 정치·경제 조건을 가진 국가들이 아닌, 시에라리온이나 나이지리아 등의 자원 부국이나 인구가 중국, 인도와 같이 너무 많거나, 혹은 모리셔스나 세이셸 등과 같이 너무 적은 국가들에는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힘들다. 다음으로 한국의 발전 분석 틀로 르완다와 케냐의 사례를 분석했기 때문에, 두 국가의 발전 분석에서 각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르완다와 케냐의 사례를 통해 한국 발전 모델의 개발도상국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탐색했고, 후속 연구 방향을 논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들어 정치적, 경제적 차원에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조금씩 늘고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들을 통해 이 논문이 갖는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해볼 수 있다.

Endnote

- 1) https://www.eiu.com/public/topical_report.aspx?campaignid=democracyindex2019
- 2) https://www.transparency.org/files/content/pages/2019_CPI_Report_EN.pdf
- 3) <https://freedomhouse.org/explore-the-map?type=fiw&year=2020>
- 4) <https://rsf.org/en/ranking>
- 5)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DPC@WEO/KOR/NMQ/WEQ>
- 6) <http://catalk.kr/information/globalization-index.html>
- 7) <https://fragilestatesindex.org>
- 8) <http://hdr.undp.org/en/content/2019-human-development-index-ranking>
- 9) 사하라 이남 국가들 중 정치적, 경제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나타나는 모리셔스와 세이셸의 경우 인구가 각각 약 127만과 약 10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발전 모델로 적용하기 힘들다.
- 10) 케냐의 경우 최근 석유 매장지가 발견되었으나, 현재까지 석유 시추 인프라를 건설하고 있다.
- 11) <http://www.oecd.org/dac/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development-finance-standards/What-is-ODA.pdf>
- 12) <https://databank.worldbank.org/reports.aspx?source=2&Topic=11>
- 13) https://ophi.org.uk/wp-content/uploads/G-MPI_Report_2019_PDF.pdf
- 14) <https://www.transparency.org/cpi2019>
- 15) <https://www.in.gr/wp-content/uploads/2020/01/Democracy-Index-2019.pdf>
- 16) https://freedomhouse.org/sites/default/files/2020-02/FIW_2020_REPORT_BOOKLET_Final.pdf
- 17) https://au.int/en/member_states/countryprofiles2
- 18) <http://info.worldbank.org/governance/wgi/Home/Reports>
- 19) <https://mo.ibrahim.foundation/about-us/our-research>
- 20) <https://www.imf.org/en/Publications/Policy-Papers/Issues/2019/08/06/Heavily-Indebted-Poor-Countries-HIPC-Initiative-and-Multilateral-Debt-Relief-Initiative-MDRI-48566>
- 21) <https://au.int/en/agenda2063/overview>
- 22)

<https://databank.worldbank.org/reports.aspx?source=2&series=NY.GDP.MKTP.KD.ZG&country=RWA>

23)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rw.html#Trans>

24) <http://uis.unesco.org/en/country/rw>

25) <http://uis.unesco.org/en/country/rw?theme=science-technology-and-innovation>

26)

<https://www.ktpress.rw/2019/10/doing-business-2020-rwanda-maintains-2nd-position-in-af-rica/>

27) https://images.transparencycdn.org/images/2019_CPI_Report_EN_200331_141425.pdf

28) <https://tradingeconomics.com/rwanda/gini-index-wb-data.html>

29) <https://knoema.com/atlas/Rwanda/topics/Poverty/Income-Inequality/GINI-index>

30) <https://www.in.gr/wp-content/uploads/2020/01/Democracy-Index-2019.pdf>

31) http://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16762&code=117#c2b

32)

<https://www.developmentaid.org/#!/news-stream/post/59556/the-top-10-oda-recipients-in-2018>

33)

<https://www.aciafrica.org/news/734/kenyas-rank-in-2019-corruption-perceptions-index-lamentable-bishop>

34) <https://santandertrade.com/en/portal/establish-overseas/kenya/investing>

35) <http://www.dailytw.kr/news/articleView.html?idxno=17061>

36) <https://www.eiu.com/topic/democracy-index>

37) <http://uis.unesco.org/en/country/ke?theme=education-and-literacy>

38) <http://uis.unesco.org/en/country/ke?theme=science-technology-and-innovation>

참 고 문 헌

1. 국문 자료, 단행본, 논문

- 강경희. (2002). 라틴아메리카의 '세계화' 논쟁. *라틴아메리카연구*, 15(2), pp. 269-281.
- 강동조. (2014). 종속이론: 라틴아메리카 지식인들의 자기 발견. *역사와 경제*, 91, pp. 353-379.
- 국가기록원. (2014). 주요 정책기록 해설집I-경제편.
- 권유경. (2014).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의 종족갈등과 빈곤.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9(2), pp. 177-197.
- 금상문. (2002). 자본주의 세계질서의 내재적 역동성과 전망: 세계체제론적 시각. *국제정치연구*, 5(1), pp. 41-58.
- 김광수. (2009). 케냐의 민주주의. *희망세상*(82).
- _____. (2010). 르완다의 국가건설과 국민통합: 르완다 제노사이드 (genocide) 이후 귀환한 난민들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국아프리카학회지*, 31, pp. 57-102.
- 김기현. (2010). 라틴아메리카 원주민은 종족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는가?. *라틴아메리카연구*, 23(2), pp. 203-240.
- 김도훈. (2014). 한국 산업발전과 향후 과제. *한국경제포럼*, 6(4), pp. 15-35.
- 김영수. (2003). 지식기반산업의 지역별 발전 동향과 정책시사점. *산업연구원*, 18.
- 김영완. (2016). 경제성장에 대한 르완다와 부룬디 비교 연구: 국내외적인 요소 분석. *국제지역연구*.

- 김용택. (2013). 르완다 농업 현황. *세계농업*, 158, pp. 123-153.
- 김윤태. (2017). 발전국가의 유산과 새로운 전망. 김윤태(편), *발전국가*. 서울: 한울.
- 김진영. (2016). 자유주의 정치경제학의 과제: 신자유주의의 퇴진과 그 이후. *국제정치연구*, 19(2), pp. 221-247.
- 김헌민, 박윤경. (2015). 지식기반산업이 광역자치단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 413-434.
- 류광철. (2014). *아프리카를 말한다*. 서울: 세창미디어.
- 류석진. (2012). 세계경제위기와 한국형 자본주의 모델: 발전국가, 자본주의 모델 그리고 경로의존성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28(1), pp. 155-183.
- 리처드 J. 리드(Richard J. Reid). (2013). *현대 아프리카의 역사*(이석호 역). 서울: 삼천리.
- 박은홍. (2000). 발전국가론 재검토: 이론의 기원, 구조, 그리고 한계. *국제정치논총*, 39(3), pp. 117-134.
- _____. (2003). 위기, 경제변화, 국가의 전환: 타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비교. 김대환, 조희연(편), *동아시아 경제변화와 국가의 역할*. 서울: 한울.
- 박태균. (2007). *원형과 변용: 한국 경제개발계획의 기원*, 서울대학교출판부.
- 서문기. (2014). 근대화이론의 이해와 성찰: 사회발전에 관한 이론적 소고. *사회과학논총*, 16, pp. 101-123.
- 서상현. (2008). 아프리카에 있어 천연자원과 무력 분쟁:[내전의 정치, 경제학] 관점에서. *한국아프리카학회지*, 28, pp. 113-138.
- 서지현. (2016). 세계화 시대 라틴아메리카 농촌 빈곤 감축 정책의 한계와 대안적 논의. *이베로아메리카*, 18(2), pp. 37-70.
- 송영복. (2005a). 라틴아메리카 사회구조의 출발점-1492, 열등한 원주민 대 우월한 유럽인: 식민지시대의 누에바 에스파냐 (Nueva España) 사료를 중심으로

- 로. *라틴아메리카연구*, 18(1), pp. 287-307.
- _____. (2005b). 불평등의 이분법-멕시코 역사를 중심으로 바라본 라틴아메리카 사회구조. *국제지역연구*, 9(3), pp. 53-77.
- 신재혁. (2015). 다종족 국가의 갈등 요인과 통합 정책: 빈곤과 정치적 배제가 종족 갈등에 미치는 영향. *국제정치논총*, 55(1), pp. 39-63.
- 외교부. (2018a). 르완다 개황.
- _____. (2018b). 케냐 개황.
- 윤상우. (2003).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위기와 전환: 한국과 대만 비교연구. 김대환(편), *동아시아 경제변화와 국가의 역할전환*. 서울: 한울.
- 이대근. (2002). *해방후 1950 년대의 경제: 공업화의 사적배경 연구*.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이병천. (2003). 개발국가론 닫고 넘어서기. *경제와 사회*, 57, pp. 99-124.
- 이상환. (2013). 아프리카 국가의 국제사회 내 위상에 대한 경험적 이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표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6(4), pp. 289-309.
- 이석조. (2016). *외교관의 창문*. 서울: 한나래.
- 이재우. (2006). 한국의 경제개발 과정에 있어 유·무상원조의 효과 분석. *한국수출입은행 수은해외경제*.
- 이정록, 송예나. (2019). *분쟁의 세계지도*, 서울: 푸른길.
- 임현진. (2020). 비교자본주의 시각에서 본 아시아의 발전국가: 한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9(2), pp. 191-231.
- 장용규. (2007). 르완다 제노사이드 : 후투와 투치의 인종차별과 갈등의 역사적 전개. *한국아프리카학회지*, 26, pp. 153-174.
- 장종문, 김예진. (2018). 케냐타 2기 정부의 출범 배경 및 향후 정책 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9(25).
- 장훈태. (2019). 아프리카 사회통합의 저해 요인에 대한 함의-아프리카 과거,

- 현재, 미래에 대한 고찰. *한국아프리카학회지*, 58, pp. 193-223.
- 정이나. (2014). 라틴아메리카 도시의 빈곤화 -세계자본주의 체제변화를 중심으로. *이베로아메리카*, 16(1), pp. 65-95.
- 정진아. (2009). 이승만정권기 경제개발3개년계획의 내용과 성격. *한국학연구*, 31, pp. 353- 386.
- 조명래. (2003). 지구화, 경제위기, 그리고 발전국가의 성격 전환. 김대환(편), *동아시아 경제변화와 국가의 역할전환*. 서울: 한울.
- 조희연. (1997). 동아시아성장론의 검토-발전국가론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36, pp. 46-76.
- 최동주. (2006). 저개발국 내전형 분쟁의 사회경제적 배경: 아프리카 분쟁의 대안적 분석 모델 모색. *국제지역연구*, 9(4), pp. 363-391
- 최상오. (2003).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과 공업화 전략. *경제사학*, 35(0), pp. 135-165.
- 최원석. (2015). 세계화와 빈곤, 그리고 소득불평등. *21세기 정치학회보*, 25(1), pp. 189-216.
- 코트라(Kotra). (2016) 2017 케냐 진출전략 보고서.
- 한·아프리카재단. (2016a). 천 개의 언덕을 가진 나라, 르완다.
- _____. (2016b). 아프리카의 실리콘 ‘사바나’, 케냐.
- _____. (2019). 아프리카 비즈니스 가이드 시리즈 케냐.
- 한응용, 김주일. (2019).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분석.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
- 한유진. (2015). 해외원조 흡수역량에 따른 사하라이남 국가들의 분류. *한국아프리카학회지*, 46, pp. 195-225.
-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 (2016). *헨리 키신저의 중국 이야기(On China)*(권기대 역). 서울: 민음사.

2. 영문 자료, 단행본, 논문

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 (AfDB). (2016). "Rwanda: Bank Group Country Strategy Paper 2017–2021."

_____. (2019). "Kenya – Bank Group Country Strategy Paper 2019–2023 and Country Portfolio Performance Review."

Ake, C. (1978). *Revolutionary pressures in Africa*. Zed Books.

_____. (1981). *A political economy of Africa*. London; New York: Longman.

Akindele, S. T. (1990). "Colonialism and Economic Dependence: The case of Nigeria" in Bamisaye, O.A. and Egbuwalo, M.O. (Eds) (1990), *Readings on the Political Economy of Nigeria Since Independence*. Lagos ventures Ltd, pp. 1–15.

Alesina, A. & Weder, B. (2002). Do corrupt governments receive less foreign aid?, *American Economic Review*, 92(4), pp. 1126–1137.

Amin, S. (1977). *Imperialism and unequal development* (Vol. 26).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_____. (1978). *Unequal development: An essay on the social formations of peripheral capitalism*.

_____. (2000).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twentieth century*.

Amsden, A. H. (1991). Diffusion of development: The late-industrializing model and greater East Asia,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1(2), pp. 282–286.

Arrighi, G. (1991). *World income inequalities and the future of socialism*. Fernand Braudel Center for the Study of Economies, Historical Systems, and Civilization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inghamton.

_____. (1996). The rise of East Asia: world systemic and regional aspect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Policy*.

Asiedu, E., Jin, Y. & Nandwa, B. (2009). Does foreign aid mitigate the adverse effect of expropriation risk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78(2), pp. 268–275.

Asongu, S. A. (2017). Knowledge economy gaps, policy syndromes, and catch-up strategies: Fresh South Korean lessons to Africa,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78(2), pp. 268–275

Atieno-Odhiambo, E. S. (1940). The formative years, 1945–55. *Decolonization and Independence in Kenya*, 93, pp. 25–47.

Auty, R. M. & Gelb, A. H. (2001). Political economy of resource-abundant states. *Resource abund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pp. 126–44.

Bachelard, J. Y. (2010). The Anglo-Leasing corruption scandal in Kenya: the politics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pressures and counter-pressures. *Review of African Political Economy*, 37(124), pp. 187–200.

Balassa, B. (1988). The lessons of East Asian development: An overview.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36(3), pp. 273–290.

Bannon, I. & Collier, P. (2003). Natural resources and conflict: What we can do. *Natural resources and violent conflict: Options and actions*, pp. 1–16.

Basuchoudhary, A. & Shughart, W. F. (2010). On ethnic conflict and the origins of transnational terrorism. *Defence and Peace Economics*, 21(1), pp. 65–87.

Bell, M. (1984). 'Learning' and the accumulation of industrial technological capacity in developing countries. In *Technological capability in the Third World*, pp. 187–209.

Berger, M. T. (1994). The end of the Third World? *Third World Quarterly*, 15(2), pp. 257–275.

Blagojevic, B. (2010). Causes of Ethnic Conflict: A Conceptual Framework. *Journal of Global Change & Governance*, 3(1).

Blanton, R., Mason, T. D. & Athow, B. (2001). Colonial style and post-colonial ethnic conflict in Africa. *Journal of Peace Research*, 38(4), pp. 473–491.

Blaut, J. (1994). The Colonizer's Model of the World: Geographical Diffusionism and Eurocentric History.

Bryan, D., Rafferty, M. & Wigan, D. (2017). Capital unchained: finance, intangible assets and the double life of capital in the offshore world,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24(1), pp. 56–86.

Bundervoet, T., Lakner, C. & Geli, P. (2015). *Rwanda-Poverty assessment: poverty global practice-Africa region* (No. 100631), pp. 1–188

Burnside, C. & Dollar, D. (2000). Aid, policies, and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90(4), pp. 847–868.

Busse, M. & Gröning, S. (2009). Does foreign aid improve governance? *Economics Letters*, 104(2), pp. 76–78.

Cardoso, F. H. & Faletto, E. (1979). *Dependency and development in*

Latin America(Dependencia y desarrollo en América Latina, in English).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Casanova, P. G. (1980). The economic development of Mexico. *Scientific American*, 243(3), pp. 192–205.

Chilcote, R. H. (2000). *Theories of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Boulder: Westview Press.

Childress, S. E. (2015). *From Revolution To Ruin: A Preliminary Look at Rwanda's First Two Presidents, Grégoire Kayibanda and Juvénal Habyarimana, and Their Administrations* (Doctoral dissertation).

Chirot, D. & Hall, T. D. (1982). World-system theory. *Annual Review of sociology*, 8(1), pp. 81–106.

Collier, P. (1995). Civil war and the economics of the peace dividend.

Collier, P. & Hoeffler, A. (2002). *Greed and grievance in civil wars* (No. 2002–01). Centre for the Study of African Economies, University of Oxford.

Consensus, M. (2002). Report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In *UN Doc. A/CONF. 198* (Vol. 11).

Desrosiers, M. E. & Thomson, S. (2011). Rhetorical legacies of leadership: projections of 'benevolent leadership' in pre-and post-genocide Rwanda. *The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pp. 429–453.

Domanski, D., Scatigna, M. & Zabai, A. (2016). Wealth inequality and monetary policy. *BIS Quarterly Review March*.

Duvall, R. D. & Freeman, J. R. (1981). The state and dependent capitalism.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25(1), pp. 99–118.

Efobi, U., Asongu, S. & Beecroft, I. (2018). Aid, terrorism,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empirical insight conditioned on corruption control,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32(4), pp. 1–21.

Emmanuel, A. (1972). *Unequal exchange: A study of the imperialism of trade*. Monthly Review Press.

Etukudo, A. (1997). Issues in privatization and restructuring in sub-Saharan Africa.

Evans, P. B. (1995). *Embedded autonomy: States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Evbuomwan, G. O. (2007). Africa Regional Integration And Challenges Of Globalisation: A Review Of The New Partnership For Africa Development (Nepad). In *FAMAN Conference 2007*(No. 54389). Farm Management Association of Nigeria (FAMAN).

Fallows, J. M. (1994). *Looking at the sun: The rise of the new East Asian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 Pantheon.

Font, M. A. (1987). Coffee planters, politics, and development in Brazil.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22(3), pp. 69–90.

Fosu, A. K. & Mold, A. (2007). *Gains from trade: Implications for labour market adjustment and poverty reduction in Africa* (No. 2007/65). WIDER Research Paper.

Frank, A. G. (1969a). *Latin America: Underdevelopment and Revolution*. Monthly Review Press.

_____. (1969b). Capitalism and underdevelopment in Latin America.

_____. (1975). *On capitalist underdevelopment*. Oxford University Press, USA.

_____. (1998). *ReOrient: Global Economy in the Asian Ag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Frank, A. G., Gills, B. & Gills, B. K. (Eds.). (1996). *The world system: Five hundred years or five thousand?* Psychology Press.

Friedman, A. (2011). Kagame's Rwanda: Can an Authoritarian Development Model Be Squared with Democracy and Human Rights?. *Oregon Review of International Law*, 14, pp. 253–277.

Gereffi, G. (2011). Global value chains and international competition. *The Antitrust Bulletin*, 56(1), pp. 37–56.

_____. (2014). Global value chains in a post-Washington Consensus world.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21(1), pp. 9–37.

Giddens, A. (1994). *Beyond left and right: The future of radical politics*. Stanford University Press.

Gill, S. (1991). *American hegemony and the Trilateral Commission* (Vol. 5). CUP Archive.

Gran, P. (1996). *Beyond Eurocentrism: A new view of modern world history*. Syracuse University Press.

Hall, N. & Woods, N. (2018). Theorizing the role of executive head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24(4), pp. 865–886.

Harrison, D. (1990). *The Sociology of Modernization and Development*. London: Routledge(2nd ed).

Hart-Landsberg, M. (1993). *The rush to development: Economic change and political struggle in South Korea*. New York, NY: Monthly Review Press.

Hillbom, E. (2012). Botswana: A development-oriented gate-keeping state. *African Affairs*, 111(442), pp. 67–89.

Hobson, J. M. (2013a). Part 1–Revealing the Eurocentric foundations of IPE: A critical historiography of the discipline from the classical to the modern era.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20(5), pp. 1024–1054.

_____. (2013b). Part 2–Reconstructing the non-Eurocentric foundations of IPE: From Eurocentric ‘open economy politics’ to inter-civilizational political economy.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20(5), pp. 1055–1081.

Ibrahim, A. A. (2013). The impact of globalization on Africa.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3(15), pp. 85–93.

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 (2008). *Kenya: Ex post assessment of longer-term program engagement*.

Ipsos. (2017). SPEC Barometer: Pre-Election Survey.

Iraki, X N. (2018). The Economic Performance Of Kenya’s Presi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Economics, Commerce and Management* 5(11): pp. 694–702.

Jessop, B. (2001). Developmental states and knowledge-driven economies (first draft).

Johnson, C. (1982).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the growth of industrial policy, 1925–1975*. Stanford University Press.

_____. (1987) *Political Institu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The Government–Business Relationship in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In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Asian Industrialism. Frederic C. Deyo.(ed)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Jones, S. & Tarp, F. (2016). Does foreign aid harm political institution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118, pp. 266–281.

Kai, H. & Hamori, S. (2009). Globalization, financial depth and inequality in Sub-Saharan Africa. *Economics Bulletin*, 29(3), pp. 2025–2037.

Karazsia, Z. A. (2015). Developing Hearts and Lan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Human Security in Africa: Governance as the Missing Link*, 196, pp. 233–248.

Kasuga, H. (2007). Evaluating the impac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id and saving in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International money and finance*, 26(2), pp. 213–228.

Kenya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KNBS). (2020). *Kenya Nation Bureau of Statistics Economic Survey*.

Kenya, Republic of (2013). *Kenya Vision 2030: Second Medium Term Plan 2013–2017*. Nairobi: Ministry of Devolution and Planning, Nairobi.

Kimenyi, M., Mweha, F. M. & Ndung'u, N. (2015). *The African lions: Kenya country case study* (No. 2015/134). WIDER Working Paper.

Kimura, H. & Todo, Y. (2010). Is foreign aid a vanguard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 gravity-equation approach. *World Development*, 38(4), pp. 482–497.

Kohli, A. (2004). *State-directed development: political power and industrialization in the global periphe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Korhonen, P. (1994). The theory of the flying geese pattern of

development and its interpretations. *Journal of Peace Research*, 31(1), pp. 93–108.

Korten, D. (1995). *When Corporations Rule the World: Transformation and Resistance*. Hartford: Kumarian Press.

Krugman, P. (1994). The Myth of Asia's Miracle. *Foreign Affairs*, 73(6). pp. 62–78.

Le Billon, P. (2005). Aid in the midst of plenty: oil wealth, misery and advocacy in Angola. *Disasters*, 29(1), pp. 1–25.

Lim, T. C. (2016). *Doing Comparative Politics: An introduction to Approaches and Issues*.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Lituchy, T. R., Galperin, B. L. & Punnett, B. J. (2016). *LEAD: Leadership Effectiveness in Africa and the African Diaspora*. Springer.

Mamdani, M. (1996). *Citizen and Subject: Contemporary Africa and the Legacies of Late Colonialism*.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_____. (2001). *When Victims Become Killers: Colonialism, Nativism, and the Genocide in Rwand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Mann, M. (1986). *The sources of social power. A history of power from the beginning to AD 1760(Vol. 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uro, P. (1995). Corruption and Growth.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0(3), pp. 681–712.

McGillivray, M. (2005). What determines African bilateral aid receipts?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17(8), pp. 1003–1018.

Milanovic, B. (2005). Can we discern the effect of globalization on

income distribution? Evidence from household budget surveys. *World Bank Economic Review*, 1, pp. 21–44.

Mohajan, H. K. (2013). Poverty and Economic Development of Kenya.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Business Management*, 18(1), pp. 72–82.

Mohamed, M., Kaliappan, S., Ismail, N. & Azman-Saini, W.N.W. (2015). Effect of foreign aid on corruption: Evidence from Sub-Saharan African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Economics*, 42, pp. 47–63.

Mule, H. (2001). Challenges to African Governance and Civil Society, 21(2), pp. 71–76

Mundy, K., Haggerty, M., Sivasubramaniam, M., Cherry, S. & Maclure, R. (2010). *Civil society, basic education, and sector-wide aid: insights from Sub-Saharan Africa. Development in Practice*, 20(4–5), pp. 484–497.

Mwega, F. M. & Ndung'u. N. S. (2008). 'Explaining African Economic Growth Performance: The Case of Kenya'. In B. J. Ndulu, S. A. O'Connell, J. P. Azam, R. H. Bates, A. K. Fosu, J. W. Gunning, and D. Njinkeu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Economic Growth in Africa, 1960–2000. Volume 2: Country Case Stud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dege, P. O. (2009). *Colonialism and its legacies in Kenya*. Lecture delivered during Fulbright-Hayes Group Project Abroad Program: July 5th to August 6th 2009 at the Moi University Main Campus.

Ndikumana, L. (2015). Integrated yet marginalized: Implications of globalization for African development. *African Studies Review*, 58(2), pp. 7–28.

Newbury, C. (1998). Ethnicity and the Politics of History in Rwanda. *Africa Today*, 45(1), pp. 7–24.

Obadan, M. I. (2004). Globalization and economic management in Africa. *Globalization and Africa's economic development. Nigerian Economic Society, Ibadan*, pp. 3–34.

Ochieng, W. R. & Ogot, B. A. (1995). *Decolonization & independence in Kenya, 1940–93. Ohio: Ohio University Press.*

ODA Korea. (2016). 『Rwanda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In Korean).

Okada, K. & Samreth, S. (2012). The effect of foreign aid on corruption: A quantile regression approach. *Economics Letters*, 115(2), pp. 240–243.

Omolara, C. (2019). ROSTOW'S GROWTH THEORY, STRUCTURAL TRANSFORM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NIGERIAN EXPER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Arts & Sciences*, 12(1), pp. 199–212.

Omotola, J. S. (2010). Globalization, new regionalism and the challenge of development in Africa. *Africana*, 4(1), pp. 103–136.

Ouattara, B. (2006). Aid, debt and fiscal policies in Senegal.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The Journal of the Development Studies Association*, 18(8), pp. 1105–1122.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ODI). (2016). *Age of choice: Kenya in the new development finance landscape.*

Oyelaran-Oyeyinka, B., Laditan, G. O. A. & Esubiyi, A. O. (1996). Industrial innovation in Sub-Saharan Africa: the manufacturing sector in

Nigeria. *Research Policy*, 25(7), pp. 1081–1096.

Oyelaran–Oyeyinka, O. (2004). *How can Africa benefit from globalization?: global governance of technology and Africa's global exclusion* (No. 17). African Technology Policy Studies Network.

Oyugi, W. O. (2000). Politicized ethnic conflict in Kenya: A periodic phenomenon. *African Conflicts: Their Management, Resolution, and Post–Conflict Reconstruction*, Addis Ababa: DPMF/OSSREA.

Pirie, I. (2007).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From dirigisme to neo-liberalism* (Vol. 73). Routledge.

Polanyi, K. (1975).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New York: Octagon.

Quartey, P. (2005). Innovative ways of making aid effective in Ghana: tied aid versus direct budgetary support.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17(8), pp. 1077–1092.

Rimmer, D. (1995), «The Effects of Conflict II: Economic Effects» in Oliver Furley (Eds.). *Conflict in Africa*, pp. 295–313.

Rodney, W. (1972) *How Europe Underdeveloped Africa*, Dar-es-Salaam: Tanzania Publishing House.

Ross, M. L. (2003). The Natural Resource Curse: How Wealth Can Make You Poor. In I. Bannon & P. Collier (Eds.), *Natural Resources and Violent Conflict: Options and Actions*, pp. 17–42.

Rostow, W. W. (1959).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The economic history review*, 12(1), pp. 1–16.

Rutten, M. & Owuor, S. (2009). Weapons of mass destruction: Land, ethnicity and the 2007 elections in Kenya. *Journal of Contemporary African*

Studies, 27(3), pp. 305–324.

Santos, T. D. (1970). The structure of dependenc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60(2), 231–236.

Schultz, T. P. (1988). Education investments and returns. *Handbook of development economics*, 1, pp. 543–630.

Schwab, K. (2017).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8. In *World Economic Forum*.

Selaya, P. & Sunesen, E. R. (2008). Does Foreign Aid Increase Foreign Direct Investment?. *Univ. of Copenhagen Dept. of Economics Discussion Paper*, (08–04).

Sen, A. (1999). *Development as Freedom*. Oxford University Press, USA.

Shirima, M. A. & Ndonye, M. M. (2017). Mapping out Media–Politics Relationship in Kenya: Comparing the Mwai Kibaki–Uhuru Kenyatta Regimes’ Media ownership, *Usage and Control*. 3(4), pp. 164–169.

Soesastro, H. (2005). Sustaining East Asia’s economic dynamism: The role of aid. *Development Centre Studies Policy Coherence Towards East Asia Development Challenges for OECD Countries: Development Challenges for OECD Countries*, pp. 219–254.

Stubbs, R. (2009). What ever happened to the East Asian Developmental State? The unfolding debate. *The Pacific Review*, 22(1), pp. 1–22.

Suh, J. & Chen, D. H. C. (Eds.). (2007). *Korea as a knowledge economy: Evolutionary process and lessons learned*. The World Bank.

Sum, N. L., Beynon, H., Harvey, M. & Quilley, S. (2001). Varieties of capitalism in time and space: ‘embedded exportism’ of East Asian newly–industrializing countries and their governance. *Varieties of*

Capitalisms.

Tavares, J. (2003). Does foreign aid corrupt?. *Economics Letters*, 79(1), pp. 99–106.

Tchamyou, V. (2014). *The Role of Knowledge Economy in African Business*. University Library of Munich, Germany.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2019). Human Development Report 2019. New York.

Verwimp, P. (2004). Peasant ideology and genocide in Rwanda under Habyarimana. In: Cook SE (ed) *Genocide in Cambodia and Rwanda: New perspectives*. Yale Center for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Monograph Series No 1, New Haven CT, pp. 1–43.

Vincent, T. (1999). The myth of development: A critique of a eurocentric discourse. *Critical Development Theory*. Dhaka: University Press Ltd.

Wade, R. (2004). *Governing the market: Economic theory 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n industrializ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Wallerstein, I. (1979). *The capitalist world–economy* (Vol. 2). Cambridge University Press.

Weber, M. (2002).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and Other Writings*. Penguin.

_____. (1966). *The General Economic History*. New York: Collier.

Wood, A. (1995). *North–South trade, employment, and inequality: Changing fortunes in a skill–driven world*. Oxford University Press on Demand.

World Bank. (1991). *World Development Report 1991*. The World Bank.

_____. (1993). *The East Asian Miracle: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 (2000). *Can Africa Claim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C.

Yahie, A. M. (2000). *Poverty reduction in Sub-Saharan Africa: Is there a role for the private sector?*. African Development Bank.

Yeung, H. W. C. (2017). Rethinking the East Asian developmental state in its historical context: Finance, geopolitics and bureaucracy. *Area Development and Policy*, 2(1), pp. 1-23.

3. 불문 자료, 단행본, 논문

Bado, A. & Sergiu, M. (2015). L'Afrique cinquantaire: de la nécessité de rompre avec la mondialisation occidentale-centrée, Recul démocratique et néo-présidentialisme en Afrique centrale et occidentale. *Institutul European*, pp. 177-196.

Bayart, J., Hibou, B. & Samuel, B. (2010). L'Afrique «cent ans après les indépendances»: vers quel gouvernement politique?. *Politique Africaine*, pp. 129-157.

Chouala, Y. A. (2005). Puissance, résolution des conflits et sécurité collective à l'ère de l'Union Africaine. *Annuaire français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 6, pp. 288-306.

Hugon, P. (1974). À propos de l'ouvrage de Samir Amin, Le développement inégal. *Revue Tiers Monde*, 15(58), pp. 421-434.

Julien, C. (2003). Une bête à abattre: le “tiers-mondisme”. *Maniere de voir*, 12.

Révillon, Jérémy. (2014). «Le Rwanda, un modèle économique?», *Les Cahiers d'Afrique de l'Est/The East African Review*, pp. 51-66.

Shyaka. A. (2006). *Le Conflit rwandais. Origines, Développement et Stratégies de sortie. Inédit*. Étude réalisée sous la demande et l'appui de la Commission nationale d'unité et réconciliation, Kigali – Rwanda.

4. 인터넷 홈페이지

1) 한국

KOSIS 국가 통계 포털. <http://kosis.kr>.

대한민국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https://www.mofa.go.kr>.

2) 불어권

라루스(LaRousse). <https://www.larousse.fr>.

아틀라스소시오(ATLASOCIO.com). <https://atlasocio.com>.

아프리카 언론 기관(Agence de Presse Africaine). <http://apanews.net>.

프랑스 외교부(France Diplomatie). <https://www.diplomatie.gouv.fr>.

3) 기타

OECD 공적 개발 원조.

<https://www.oecd.org/dac/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

UN 인간개발지수. UN Human Development Index. <http://hdr.undp.org>.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http://www.oecd.org>.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Sans Frontières). World Wide Press Freedom Index. <https://rsf.org/en/ranking>.

국제 통화 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https://www.imf.org>.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 Index. <https://www.transparency.org>.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

모 이브라힘 재단(MO Ibrahim Foundation). Ibrahim Index of African Governance(IIAG). <https://mo.ibrahim.foundation>.

미국 중앙정보부(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 <https://www.cia.gov>.

브리태니커 백과사전(Encyclopaedia Britannica).

<https://www.britannica.com>.

산텐더 은행(Santander). <https://santandertrade.com>.

세계 개발 지표(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nk.

<https://databank.worldbank.org>

세계은행 기업 환경 평가(World Bank Doing Business).

<https://www.doingbusiness.org>.

세계은행(World Bank). World Governance Indicators.

<http://info.worldbank.org>.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대 기업 연구소(the KOF). the KOF Globalization

Index. <https://kof.ethz>.

아프리카 개발 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

<https://www.afdb.org>.

아프리카 연합. (African Union). <https://au.int>.

영국연방(The Commonwealth). <https://thecommonwealth.org>.

옥스퍼드 빈곤인간 개발 연구소(Oxford Poverty and Human Development Initiative, OPHDI). Global 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https://ophi.org.uk>.

월드비전(World Vision). <http://www.worldvision.or.kr>.

유네스코(UNESCO). <http://uis.unesco.org>.

유엔 에이즈 계획(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UNAIDS). <https://www.unaids.org>.

이코노미스트지(The Economist Intelligenc Unit, EIU). Democracy Index.

<https://www.eiu.com/n>.

취약 국가 지수. Fragile State Index. <https://fragilestatesindex.org>.

크노마(Knoema). <https://knoema.com>.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 Freedom in the World.

<https://freedomhouse.org>.

해리티지 연구소(The Heritage Foundation). Index of Economic Freedom.

<https://www.heritage.org>.

ABSTRACT

The Political Economy of African Development: The Cases of Rwanda and Kenya

Eunah, JUNG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n implication for sub-Saharan Africa's political-economy development by exploring the models theoretically, and applying factors emphasized in the East Asian and South Korean developmental model to the examples of Rwanda and Kenya.

Contrary to what Western-centered development theory and globalization theory suggest, the African region is politically unstable and economically underdeveloped after the post-Cold War. The African region has different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conditions from the West in that it originally had tribal-oriented traditional societies and has experienced colonial rule by the West. Colonial rule by the West formed a political, economical and social structure, and after independence, this structure is still dominant in sub-Saharan African countries. As can be seen from the study of the underdevelopment of Latin America and the development of East Asia, the unique elements of each region such as its own history and culture

cannot be excluded in explaining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on-Western regions. Concerning these points, it is questioned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apply the Western-centered development theory to the African region, which has different development conditions, historical and cultural factor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some theories explaining the underdevelopment of Latin America and the development of East Asia, but there are few theories about African development. In other words, studies on the African region and its political economy have not received much attention from existing academics. The application of development models from other non-Western regions, such as South Korea, to Africa, is also rarely discussed. As an example of overcoming various internal and external development crises such as resource-poor development condition, Korean war, weak physical and human capital, security threats and ideological issues by North Korea, post-Cold War, globalization and the East Asian economic crisis, applying the Korean development case to other emerging countries has great significance as the study of the development model of an emerging country.

The African region now faces problems such as racial conflict, religious problems, corruption issues, poor physical and human capital domestically, and agricultural-oriented industrial structures, and excessive dependence on foreign aid and natural resources export, externally. These internal and external problems are working together and in combination. As a result, sub-Saharan Africa, rich in resources and labor, paradoxically became the poorest in the world. To address this reality in sub-Saharan Africa, domestic and international governance needs to be improved,

including political democratization, economic polarization, quality of life improvement, infrastructure construction, education expansion, and participation in the African Union.

Among the sub-Saharan African countries that are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underdeveloped, Rwanda and Kenya have been showing continuous economic growth in recent years. The two countries have a large population size of over 10 million, have no high added value resources, and have experienced some conflicts due to racial factors within the country. Rwanda had experienced ethnic conflict several times in the 1990s, and Kenya experienced extreme violence in 2007, due to ethnic political factors. Despite these obstacles to internal and external development, the two countries are steadily growing economically. Studying the development cases of the two countries facing similar situations such as political instability, globalization, and global value chains, resource-poor countries, and dependence on foreign aid can be said to be larg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ases of Rwanda and Kenya using the framework that the East Asian Developmental State Model, especially South Korea's economic success was enabled by three development factors: the developmental state's intervention, the foreign aid, and the strong leadership. Sub-Saharan Africa is currently the least developed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But the political and economic importance of Africa will increase in the future in terms of resources and energy, such as oil, huge domestic markets, and abundant and cheap labor. In addition, South Korea and Africa have many opportunities to cooperate in various ways such as the United Nations and the ODA. Therefore, if research on the development

strategy of Africa continues, it can be expected that South Korea will be able to help identify, cooperate, and assist with the development that African countries need.
